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연구진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경제력 집중, 지역간 불균형 악화
 -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2018년 기준 11.5%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49.8% 거주(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28.0%)
 - 수도권에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100대 기업 본사의 91% 집중
- 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격차 확대, 양적 인구 과소화문제 뿐만 아니라 질적 인구구조 문제 가중, ‘지방소멸’, ‘인구절벽’, 지역인구위기 확산
 -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급격히 감소, 20~30대 젊은 인구 유출 심화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중심의 중앙정부 자연증감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국가 총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저출산 시책에 매몰
 - 그러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가동이 가속화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출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초저출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와 접근방식이 다른 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연구목적

- 지역인구감소의 유형분류, 유형별 특성분석 및 문제점 진단, 총인구 및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도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경제활력대책회의 산하 범부처 인구정책 등 국가 총인구 대응정책 분석 및 한계점 도출
-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정책 및 사례분석, 포용적 성장 등 지역발전정책의 메가트렌드 변화 진단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범부처 관련사업 조사 및 사업유형화, 인구감소 지역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방안 도출, 제도개선방안 모색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구조 및 특성 분석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고려한 총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지역인구감소 유형 분류
 - 인구감소지역은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모두 일어나는 유형Ⅳ와 자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감소하여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Ⅴ로 구분되었으며, 총 143개로 전체 229개 중에서 62.4%
- 총인구증감량과 자연증감량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 자연증감량 감소보다는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사회증감량은 20~30대 젊은인구의 순이동량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서 지역의 인구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젊은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

□ 국가 총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한계점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출산율 제고정책) 및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정책 TF(적응력 강화정책)의 한계
 - 저출산 대책은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출산율 제고’사업으로 지역의 특성 반영에는 한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도 미흡

- 2017년 기준 수도권(0.99)과 대도시(0.97)는 초저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아니라 수도권 및 대도시의 초저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해당
-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정책은 효율성 위주의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정책으로 국가인구정책과 지방인구정책의 괴리 발생

○ 기존 낙후지역정책 및 균형발전정책(성장촉진지역정책)의 한계

- 도로 등 전형적인 개발시대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 젊은 인구의 지역수요 등을 충족할 수가 없는 내용적 한계 발생

□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정책분석 및 사례조사

○ 개발시대 격차문제 해결 없이는 더 나은 발전은 없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대도시 및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 하에 EU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등장
- 유럽의 축소지역(shrinking regions) 논의가 최근 스마트 축소(shrink smart) 개념으로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환

○ 일본 역시 도쿄 일극집중 경향을 시정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엔젤 대책(저출산대책)과 별도로 지방창생정책을 국가아젠다로 추진하기 시작

- 2014년 제정된 「마을·사람·일 창생법」 하에서 지방의 일자리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불러 모으는 전략에 포커스
- 제1기 지방창생 기본방침(2015~2019)에 이어 제2기 지방창생의 새로운 시점(2020~2024) 추진, 특히 지방으로의 사람·자금의 흐름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창생판·세 개의 화살 지원
- 창생종합전략의 4가지 기본목표는 지방의 안정된 고용창출,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실현, 시대에 걸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키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
- 국가의 최상위 아젠다정책으로 창생정책 추진,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지급

-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부문 사례조사
 - 인구활력 사례는 고급인력 유입, 의료 및 돌봄 통합 사례, 촌락지원요원 등 인재파견제도 및 젊은인재 육성과 관련된 유럽과 일본 사례 조사
 - 경제회복 사례는 시민주도의 협력과 혁신방법 구상 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례, 대안경제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경제회복 사례 조사
 - 공간혁신 사례는 협력공유공간, 생활혁신공간 조성,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화, 도시교류시설 및 on-demand 셔틀버스 등 공간적 혁신도모 사례조사

□ 지역인구감소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 지역인구감소는 인구(사람)·경제·공간의 활력저하로 정의
 -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원인별 대책의 관점에서 정의하되, 인구(사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함
- 지역인구감소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 비전: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촉진
 - 목표: 지역인구의 사회적 유출방지 및 유입촉진
 - 추진전략: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 추진과제: 인구활력은 새로운 인구 유입촉진·정착과 지역인재 육성 및 양육·돌봄·교육 연계, 경제회복은 지역자산기반 특화산업·관광 육성과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공간혁신은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과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
- 제도개선방안
 -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므로 균특법 개정
 - 인구위기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를 유치, 유지하기 위한 시책은 특정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통합추진체계 구축
 - 균특회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원지원,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5
제2장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17
제1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19
1. 분석개요	19
2.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2000~2017년)	22
3. 최근 5년간 지역인구감소 유형변화(2013~2017년)	29
제2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31
1. 유형별 평균인구수, 인구증감률과 인구증감량	31
2. 유형별 인구피라미드	37
3. 유형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39
제3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구조변화 분석	44
1. 연령대별 인구증감량	44

차례

2. 연령대별 순이동량	47
3. 연령대별 비율변화	54
제4절 지역인구감소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67
1. 총인구증감량과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분석	67
2. 합계출산율과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분석	68
3. 20~30대 젊은인구 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69
제3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가정책의 한계	71
제1절 국가 총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한계	73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한계	73
2.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정책 TF의 한계	79
제2절 기존 낙후지역정책 및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81
1.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낙후지역 지원정책	81
2.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83
제4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정책분석	87
제1절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89
1.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 논의 배경	89
2. OECD의 포용적 성장	91

3. 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	92
제2절 유럽의 축소지역정책	93
1. 유럽의 축소지역 논의	93
2. 유럽의 축소지역 정책대응	99
3. 국가별 정책대응 현황 및 사례	103
제3절 EU의 스마트빌리지정책	107
1. 스마트 빌리지의 개념	107
2. 스마트빌리지 계획(Smart Village Initiative) 추진	109
3. 스마트 빌리지 구축동향	114
4. 특징 및 시사점	115
제4절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117
1. 추진개요	117
2. 제1기, 제2기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122
3.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새로운 목표와 주요내용	132
4. 지방창생 추진체계	138
5. 부처별 지방창생 추진사업(2019년 예산기준)	139

제5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사례조사 143

제1절 인구활력 사례조사	145
---------------------	-----

차례

1. 이탈리아 고급인력 유입 프로젝트(Youth Guarantee)	145
2. 스웨덴 스마트 지역돌봄 프로젝트(The IMPROVE)	148
3. 영국 Intermediate Care Southwark(ICS) 프로그램	149
4. 프랑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스쿨	151
5. 오스트리아 Web-based Education for Farmer 프로젝트	153
6. 일본 총무성 지역부흥협력대	154
7. 일본 오츠노미야대학 지역디자인과학부 인재육성	156
8. 일본 촌락기능재생사업, 촌락지원요원 파견	158
9. 일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인재 육성지원 프로젝트	161
제2절 경제회복 사례조사	163
1. 독일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	163
2. 독일 ‘작은 생각(thinking small)’의 힘	167
3. 이탈리아 트렌티노(Trentino) 사회적 경제	170
4.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172
5. 벨기에 왈론지역 사회적기업 Terre	176
6. 일본 새틀라이트 오피스(Satellite Office) 프로젝트	178
7. 일본 옛 민가·빈 점포 등을 활용한 창업 촉진 마을만들기	179
8. 일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옛 민가 활용 숙박시설 정비사업	181
9. 일본 IoT를 활용한 새로운 기업간 연계 촉진	184
제3절 공간혁신 사례조사	186

1. 스페인 카탈루냐의 COWOCAT Rural 프로젝트	186
2. 벨기에 Multi-Service Hubs센터	188
3. 스페인 바로셀로나 On-demand 셔틀버스	189
4. 핀란드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191
5.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194
6. 일본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197
7. 일본 도시교류시설 휴게소 ‘야스다 초등학교’	200

제6장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203

제1절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개념과 범위	205
1.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의 문제점	205
2. 지역인구감소의 의미	209
3.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범위와 기준	212
제2절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214
1. 비전 및 목표	214
2.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15
3. 사업유형화	219
제3절 제도개선방안	225
1. 균특법 개정	225

K R I L A

차례

2. 통합추진체계 구축	230
3. 재원지원	234
4.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239

【참고문헌】	241
---------------------	------------

【부록】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사업 리스트(2019년)	249
--	------------

표 차례

〈표 2-1〉 행정구역 변경내역	20
〈표 2-2〉 연령대 분류와 연령대별 특성	21
〈표 2-3〉 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유형 (2000~2017년)	23
〈표 2-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시)(2000~2017년)	26
〈표 2-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군)(2000~2017년)	27
〈표 2-6〉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구)(2000~2017년)	28
〈표 2-7〉 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유형 변화	29
〈표 2-8〉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도별 평균인구수 변화	31
〈표 2-9〉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증감률	32
〈표 2-10〉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인구증감률	34
〈표 2-11〉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인구증감량	35
〈표 2-1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자연증감량	40
〈표 2-13〉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사회증감량	41
〈표 2-1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2000~2018년)	44
〈표 2-1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2013~2018년)	46
〈표 2-16〉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평균 순이동량	48
〈표 2-17〉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00~2018년)	50
〈표 2-18〉 시도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00~2018년)	51
〈표 2-19〉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13~2018년)	52
〈표 2-20〉 시도별 연령대별 최근 평균 순이동량(2013~2018년)	53

표 차례

〈표 2-21〉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유소년인구 비율	54
〈표 2-2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합계출산율	56
〈표 2-23〉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58
〈표 2-2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고령인구 비율	61
〈표 2-2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	65
〈표 2-26〉 총인구증감량과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67
〈표 2-27〉 인구증감량과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	68
〈표 2-28〉 20~30대 젊은인구 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의 상관관계	69
〈표 3-1〉 지역별 합계출산율	76
〈표 3-2〉 인구규모별·성별 인구구조 변화	77
〈표 3-3〉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낙후지역 지원 관련정책	82
〈표 4-1〉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의 정의	90
〈표 4-2〉 OECD의 포용적 성장 개념	91
〈표 4-3〉 축소지역에 대한 유럽의 다층적 접근	99
〈표 4-4〉 축소지역에 대한 유럽 각 국가별 대응방향	104
〈표 4-5〉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구축의 핵심전략	109
〈표 4-6〉 유럽 국가별 스마트 빌리지 추진형태 및 예시	115
〈표 4-7〉 일본 제1기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2015~2019)의 4가지 기본목표 ..	132
〈표 4-8〉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의 제1기와 제2기 주요 추진시책 비교 ..	137
〈표 4-9〉 각 부처별 종합전략 등에 따른 개별시책 사업 수(2019년 예산 기준) ..	141

〈표 5-1〉 이탈리아 아브루초의 정책 타깃 그룹	147
〈표 5-2〉 아브루초 지역의 인구 변화율 1991-2019	147
〈표 5-3〉 지역부흥협력대의 대원수 및 지자체 수	155
〈표 5-4〉 협의회 설립 현황 (2017년 3월 시점)	160
〈표 5-5〉 독일 디지털 빌리지 주요 서비스	165
〈표 5-6〉 핀란드 지역개발-스마트빌리지 프로젝트	193
〈표 6-1〉 지역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의 개념과 세부범위(예시)	213
〈표 6-2〉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대상지역(안)	221
〈표 6-3〉 인구활력전략의 과제별 사업 유형화(예시)	222
〈표 6-4〉 경제회복전략의 과제별 사업 유형화(예시)	223
〈표 6-5〉 공간혁신전략의 과제별 사업 유형화(예시)	224
〈표 6-6〉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부분 9대 전략	226
〈표 6-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저발전지역 관련 규정	226
〈표 6-8〉 일본 지방창생의 부처간 협력	231
〈표 6-9〉 인구감소지역 시책의 관련부처	232
〈표 6-10〉 현재의 균특회계 구조	235
〈표 6-1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현재)	238
〈표 6-1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개편(안)	238

K R I L A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나라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변화전망	3
〈그림 1-2〉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현황	4
〈그림 1-3〉 지역의 인구증감률 변화	5
〈그림 1-4〉 지역의 20~30대 젊은인구 비율 변화	6
〈그림 1-5〉 지역의 인구위기 관련지수	7
〈그림 1-6〉 지방과 국가의 인구위기	10
〈그림 2-1〉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2000~2017년)	23
〈그림 2-2〉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의 지자체 분포(2000~2017년)	24
〈그림 2-3〉 지역인구감소 유형(2013~2017년)	30
〈그림 2-4〉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의 지자체 분포(2013~2017년)	30
〈그림 2-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증감률 변화	32
〈그림 2-6〉 시도별 인구증감률(2000년 대비 2017년)	33
〈그림 2-7〉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인구증감률 추이	34
〈그림 2-8〉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인구증감률 추이	36
〈그림 2-9〉 시도별 평균 인구증감률(2000년 대비 2018년)	36
〈그림 2-10〉 총인구증가지역의 인구피라미드(2018년)	37
〈그림 2-11〉 총인구감소지역의 인구피라미드(2018년)	38
〈그림 2-1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자연증감률 추이	40
〈그림 2-13〉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사회증감률 추이	42
〈그림 2-14〉 시도별 평균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43

〈그림 2-1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 비교(2000~2018년) …	45
〈그림 2-16〉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 비교(2013~2018년) …	46
〈그림 2-17〉 시도별 기간별 평균 순이동량 ……………	48
〈그림 2-18〉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 비교(2000~2018년) …	50
〈그림 2-19〉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 비교(2013~2018년) …	52
〈그림 2-20〉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유소년인구 비율 변화 ……………	55
〈그림 2-21〉 시도별 기간별 유소년인구 비율 변화 ……………	55
〈그림 2-2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합계출산율 변화 ……………	57
〈그림 2-23〉 시도별 합계출산율 변화(2000년, 2017년) ……………	57
〈그림 2-2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 ……………	59
〈그림 2-25〉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변화 ……………	59
〈그림 2-26〉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 ……………	60
〈그림 2-27〉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고령인구비율 변화 ……………	61
〈그림 2-28〉 연도별 고령인구 비율변화 ……………	62
〈그림 2-29〉 시도별 기간별 고령인구비율 변화 ……………	62
〈그림 2-30〉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고령화지수 비교 ……………	63
〈그림 2-31〉 시도별 고령화지수 변화 비교 ……………	64
〈그림 2-3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 변화 ………	65
〈그림 2-33〉 연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변화 ……………	66
〈그림 2-34〉 시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 변화 ……………	66

K R I L A

그림 차례

〈그림 3-1〉 저출산 대책의 핵심 추진방향	74
〈그림 3-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데드크로스 발생	75
〈그림 3-3〉 지방과 국가의 인구위기	78
〈그림 3-4〉 인구정책 TF의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80
〈그림 3-5〉 지방과 국가의 인구위기 대응	85
〈그림 4-1〉 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	92
〈그림 4-2〉 유럽 지역별 고령화 지수(2005년)	95
〈그림 4-3〉 유럽의 지역별 고령화 지수(2030년)	95
〈그림 4-4〉 EU-13과 EU-15 국가들의 축소지역 현황	96
〈그림 4-5〉 2001-2011 유럽의 축소지역(도시 및 농촌)의 비율	97
〈그림 4-6〉 유럽의 지역별 축소 예상 지역(2005~2030년)	98
〈그림 4-7〉 유럽의 축소지역 정책대응	103
〈그림 4-8〉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역	106
〈그림 4-9〉 EU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프로젝트	108
〈그림 4-10〉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법	120
〈그림 4-11〉 UJF턴 추진을 위한 지방창생추진교부금	123
〈그림 4-12〉 일본 제1기와 제2기 국가와 지방의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	126
〈그림 4-13〉 지방창생 컨시어지제도	130
〈그림 4-14〉 일본 지방창생정책 추진체계	139
〈그림 4-15〉 일본 지방창생정책 관련예산(2019년 기준)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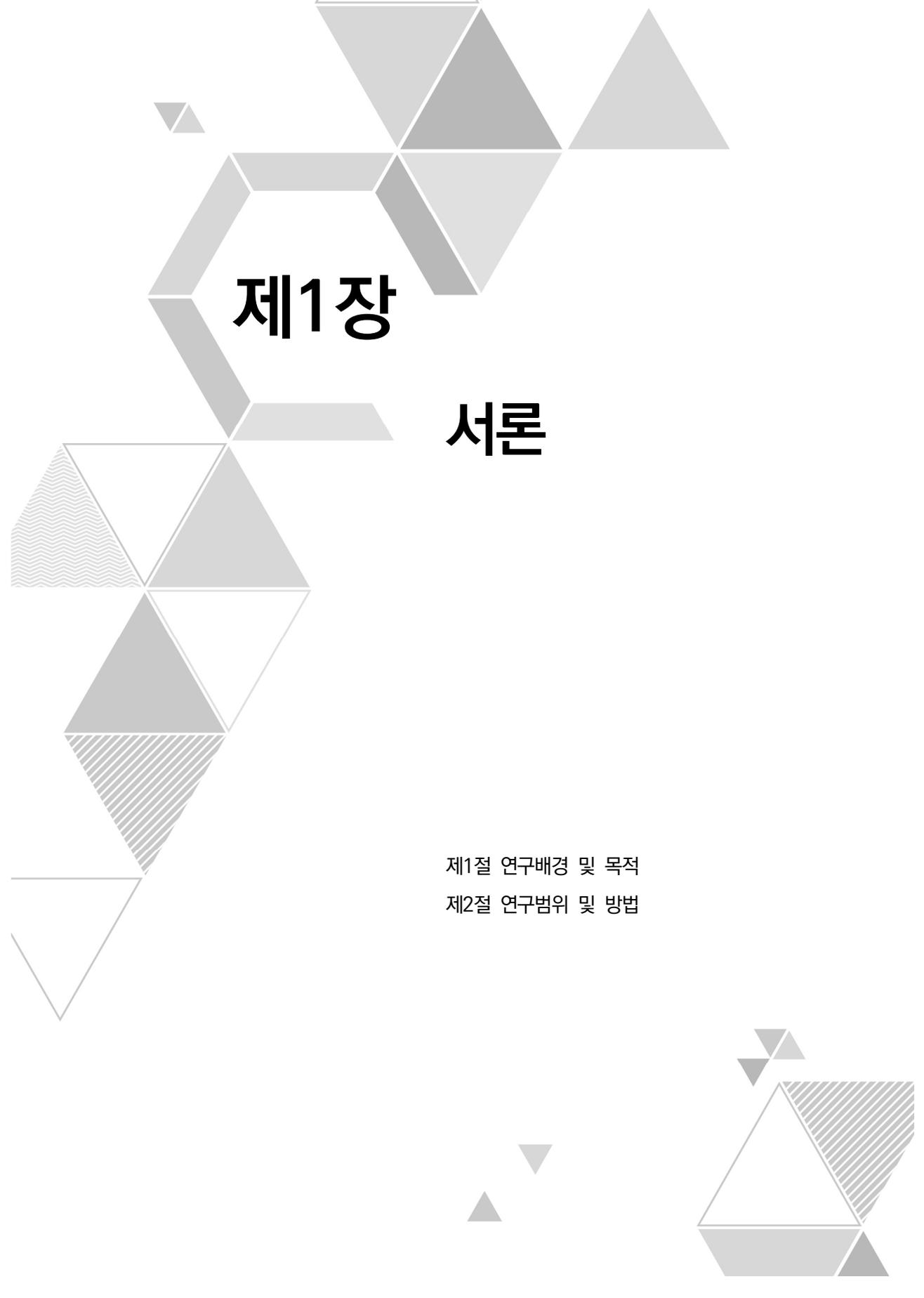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5-1〉 ICS 돌봄현장	151
〈그림 5-2〉 오츠노미야대학 지역디자인과학부	157
〈그림 5-3〉 촌락기능재생사업의 흐름	159
〈그림 5-4〉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촌락기능재생사업」	159
〈그림 5-5〉 기금 활용을 통한 학자금변제지원사업의 이미지	162
〈그림 5-6〉 독일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및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	164
〈그림 5-7〉 디지털빌리지 마켓플레이스 베스텔바(BestelBar)와 배달업 리퍼바 (LieferBar)	165
〈그림 5-8〉 독일 디지털 빌리지 플랫폼	166
〈그림 5-9〉 Courtesy of the City of Altena, Germany	169
〈그림 5-10〉 Courtesy of the City of Altena, Germany	169
〈그림 5-11〉 옛 민가와 창고를 개조한 토쿠시마현 카미야마쵸 새틀라이트 오피스 ...	179
〈그림 5-12〉 효고현 탄바시 마을만들기 - 재임대 사업 사례	180
〈그림 5-13〉 나라현 아스카촌 프로젝트 계획도	182
〈그림 5-14〉 나라현 아스카촌 옛 민가활용 게스트 하우스	183
〈그림 5-15〉 사업자(브랜드)와 생산자(공장)를 이어주는 매칭플랫폼 시타테루 ...	185
〈그림 5-16〉 COWOCAT Rural 프로젝트의 협력공유 공간	186
〈그림 4-17〉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용되는 Shotl App	191
〈그림 5-18〉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과정	196
〈그림 5-19〉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추진지역 및 지역활동그룹 활동지역 ...	197
〈그림 5-20〉 작은 거점마을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도	199



그림 차례

〈그림 5-21〉 도시교류시설 휴게소 ‘야스다 초등학교’	201
〈그림 6-1〉 인구여건의 시대적 변화	205
〈그림 6-2〉 인구감소의 지역 및 국가 영향	206
〈그림 6-3〉 Time-Space Diagram	211
〈그림 6-4〉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비전 및 전략	216
〈그림 6-5〉 균특회계 지역구분 개편(안)	236
〈그림 6-6〉 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2019.4)	23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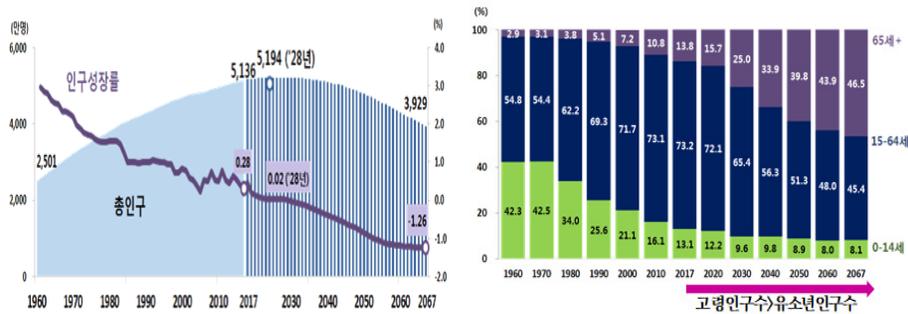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2017년부터 인구구조 역전,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사회 진입
 - 통계청(2019.3)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9년부터 (-)로 전환되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새롭게 전망
 - 통계청(2016.12)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32년부터 (-)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나 시기가 앞당겨짐

〈그림 1-1〉 우리나라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변화전망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67년, 중위추계)〉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전망(1960~2026년)〉



자료: 통계청(2019.3),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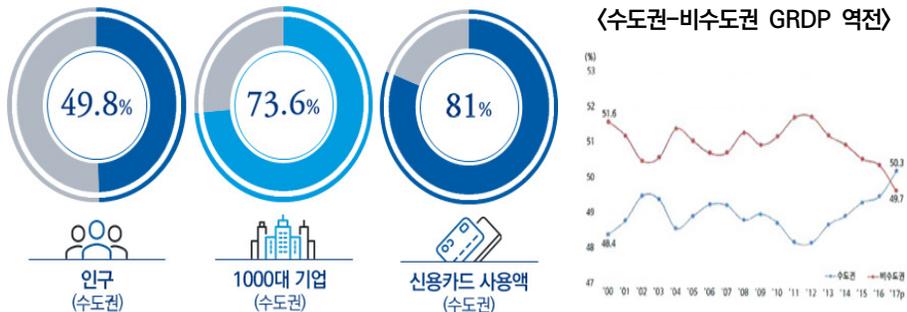
- 특히, 2017년부터는 이미 고령인구수가 유소년인구수를 초과하여 인구구조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음(통계청, 2019)
 - 유소년 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67년 318만명

- (8.1%)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13.8%)에서 2067년 1,827만명(46.5%)로 급격히 증가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73.2%)에서 2067년 1,784만명(45.4%)으로 감소
- 2020년대 이후에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함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

□ 수도권외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경제력 집중

- 2018년 기준 수도권외의 국토면적은 전체 11.5%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49.8%(주민등록인구 기준)가 거주
 - 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28.0%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외의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음(균형위, 2019)
- 수도권외에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100대 기업 본사의 91% 집중(일자리, 인력 등 수도권외로 이동)
 - 지역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불균형지수는 악화추세 (GRDP 지니계수 악화)

〈그림 1-2〉 우리나라 수도권외 집중현황



자료: 균형위(2019),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사회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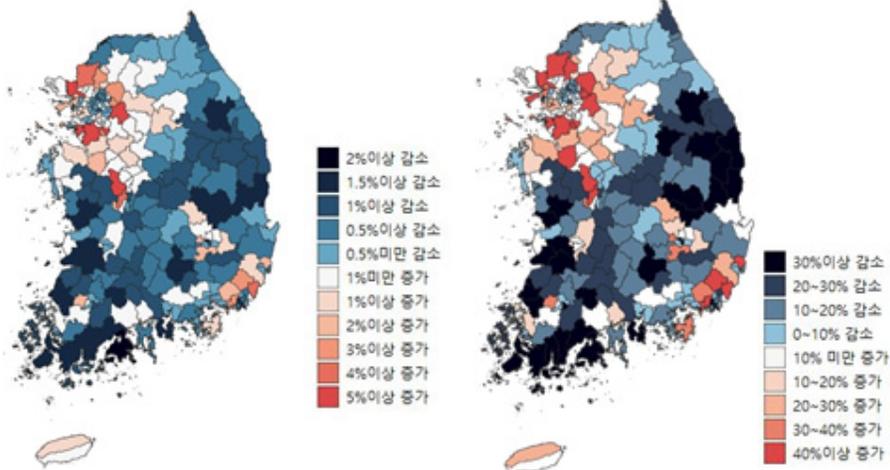
□ 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격차 확대

- 통계청(2019.6)은 2017년 대비 2035년에는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제주의 6개 시도를 제외하고 11개 시도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70년 총 인구의 57.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약 8%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UN, 2015)
 - 김순은(2016)은 기초 지자체 중에서 인구 6만 미만의 '군'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분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16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38개로 68%에 해당
 - 박진경(2019.8)에 의하면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229개 지역 중에서 2000년 대비 2017년에는 총인구감소지역이 143개로 증가

〈그림 1-3〉 지역의 인구증감률 변화

〈연평균 인구증감률(2000-2018)〉

〈2000년 대비 2018년 인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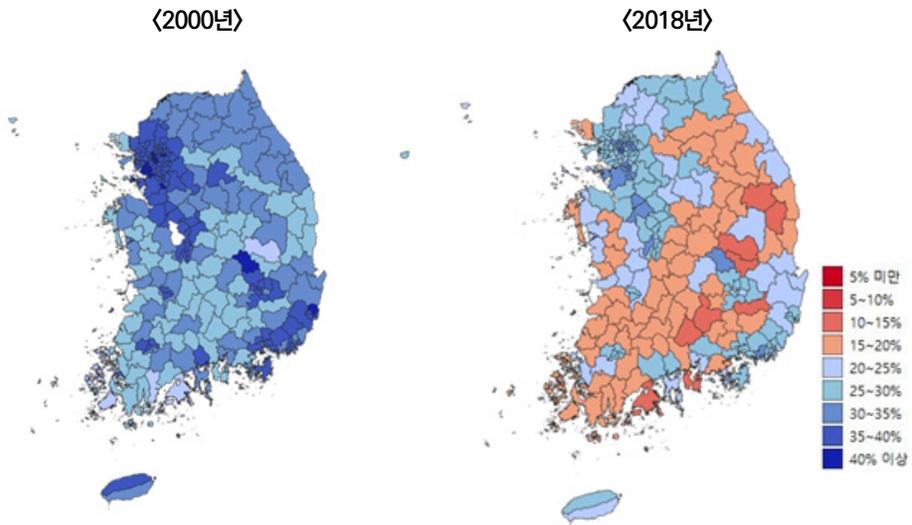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 지역은 양적 인구 과소화문제 뿐만 아니라 질적 인구구조 문제 가중

- 2018년 기준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 중에서 고령화사회는 66개(28.8%), 고령사회는 66개(28.8%), 97개(42.4%)가 고령화율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¹⁾에 진입하였음
-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 20~30대 젊은인구 유출 심화

〈그림 1-4〉 지역의 20~30대 젊은인구 비율 변화



자료: 박진경(2019.11),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전남·경북 지방소멸대응 세미나.

□ 지방소멸,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역인구위기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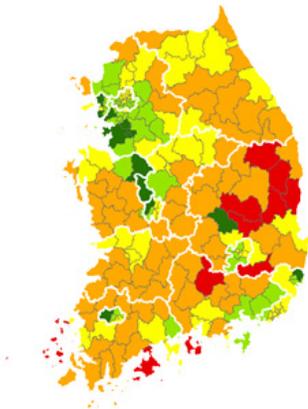
-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 1.05명(OECD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부터는 0.97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고령화율 7-14%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20% 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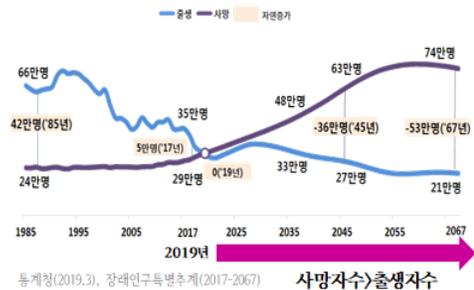
- 합계 출산율은 2014년에 이미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CIA, 2014)
- 만혼·비혼 증가와 합계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인구 증가로 2019년부터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발생(통계청, 2019)
- 일본 마쓰다 히로야(2014)의 「지방소멸」, 한국고용정보원(2016, 2018)의 소멸위험지수²⁾,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2017)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등의 연구는 지역의 인구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은 향후 30년 내 82개 ‘군’지역 중에서 69곳(84.1%), 3,482개 읍면동 중에서 1,383곳(39.7%)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8)에서는 2013년 소멸위험지역은 75개(32.9%)였으나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89개(39.0%)로 증가 발표

〈그림 1-5〉 지역의 인구위기 관련지수

〈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2016, 2018)〉



〈데드크로스 발생〉



2)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는 마쓰다 히로야(2014)와 같이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누어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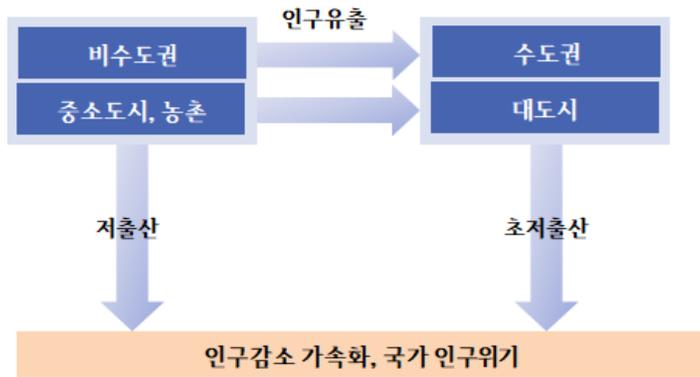
□ 중앙정부 인구정책은 지방의 인구정책과 괴리 발생

-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경제활력대책회의 산하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이라 할 수 있음
 -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³⁾은 대표적인 중앙정부 인구정책으로 전국 공통의 출산·양육, 보건·사회복지 위주 ‘출산율 제고정책(완화)’
 - 2019년 3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4)는 9월 현재, 4대 전략 및 20개 정책과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2019.9.18.)하였는데, 이는 효율성 위주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적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저출산 대책은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출산율 제고’ 시책으로 지방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시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이어서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도 미흡
-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의 4대 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 고령인구 증가 대응으로 인구구조변화 ‘적응력(Adaptability) 강화’ 정책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 중심의 시책이라고는 하나, 중앙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에는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과 박진경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브릿지 플랜 2020)에서는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2019.8)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감량 감소보다는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0년 대비 2017년 인구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 자연증감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0.952와 0.528이고, 2013년 대비 2017년의 사회증감량 상관계수는 0.963으로 상관관계가 더 커짐
-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자연증감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증감량 변화는 0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구정책과 괴리가 발생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가동이 가속화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의 출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초저출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 개발시대 격차문제 해결 없이는 더 나은 발전은 없기 때문에 최근 UN 등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SDG)으로 전환, 포용성이 2030 개발의제의 주요원칙이 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와 접근방식이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구정책이 필요함
- 현재 지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등의 인구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일자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반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출산·양육지원정책과 지역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역발전정책 추진 필요
 - 지역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포함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대응,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1-6〉 지방과 국가의 인구위기



□ 기존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적인 정책들 필요

- 이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에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명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개별 부처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지역인구감소 관련 지역사업들을 ‘종합대책’ 형태로 패키지와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부처 대책 TF를 구성(2019.6)
-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가정책 분석 및 한계점 도출

- 국가인구감소 대응관련 정책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브릿지 플랜 2020)
 - 경제활력대책회의 산하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4)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2019.9.18)

-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과 관련되는 균형발전정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점 도출

□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점과 특성 진단
 -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 및 인구감소율, 그리고 인구유입과 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 두 부문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자체 인구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인구구조 특성 비교·분석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자연증감과 사회증감의 특성분석 및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점 진단
 - 총인구증감량, 자연증감량,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분석, 합계출산율과 자연증감량의 상관관계분석 수행

□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정책 및 사례분석

- WorldBank, IMF, OECD, UN-HABITAT 등 국제기구 중심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현상 완화 정책분석
 - OECD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IMF의 포용도시(inclusive city)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의 방식으로 포용적 성장정책
- 유럽의 축소도시(shrinking city)와 축소지역(shrinking rural region) 논의, EU의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개념 등 각국의 지역발전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전략 분석
 - 일본의 지방창생, 과소지역 지원정책과 작은거점 등 인구감소 관련 대응정책 및 시책 포함

□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부처별 사업 유형화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농식품부, 중소기업부 등 부처별 관련사업 조사 분석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시 포용적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별 정책 분류, 유형화
-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촉진을 위한 인구(사람)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의 신규사업 발굴
 - WorldBank, IMF, OECD, EU, 일본 등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사례 발굴

□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방안 도출

- 최근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논의와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위상확립과 패러다임 전환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위기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지역발전정책 마련
-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사항 도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의 추진방안 제안
 - 지역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과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원칙 설정,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마련, 제도기반 구축, 통합추진체계 구축, 추진역량 강화 등 추진기반 지원방안 도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비교분석 등에 사용되는 자료의 기준년도는 2018년(2017년)이며, 인구구조 변화분석을 위한 비교년도는 2000년
 - 2018년의 기준년도 자료를 가용할 수 없을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
- 1995년 행정구역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도농통합시 출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등으로 행정구역체계가 크게 변경되어 그 이전의 시점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을 비교년도로 활용
 - 또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 등이 2000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2000년을 비교년도로 선정
 - 기준년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자연증감 및 합계 출산율 자료는 2017년 최신)

□ 공간적 범위

- 시군구 단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고려한 총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세종특별자치시(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2012년 7월 출범)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시'로 구분하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시'로 구분하여 포함
- 2000년 이후 이루어진 도농통합으로 인한 행정구역은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

- 2001년에 통합한 광주군과 광주시, 화성군과 화성시, 2003년에 통합한 포천군과 포천시, 양주군과 양주시, 2010년 통합한 창원, 마산 및 진해시, 2013년에 통합한 여주군과 여주시, 2014년에 통합한 청원군과 청주시 등

□ 인구와 인구구조의 범위

-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인구의 증감, 인구의 이동, 인구구조의 변화와 특성 등을 다루는데, 이때 '인구'는 행정인구, 즉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행정직제와 사무배분, 지방의석수, 선거구, 교부세 등 지방행재정이 대부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zero sum)에 불과한 인구이동이 주민등록인구로 집계되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
- 인구증감량은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으로 구분
 - 자연증감량은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한 조사통계인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활용
 - 사회증감량은 인구유입과 인구유출로 인한 증감, 즉 사회적 인구이동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행정자치부 행정정보증계시스템으로부터 보고되는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 활용
- 인구구조의 의미
 - '인구구조'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포를 의미(이희연, 2005)
 - 본 연구에서 인구구조는 주로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의미하여, 20세 미만, 20~30대, 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 ※ 제현정·이희연(2017), 박진경·김상민(2017)은 연령대 특성에 의거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총 8개 연령대로 분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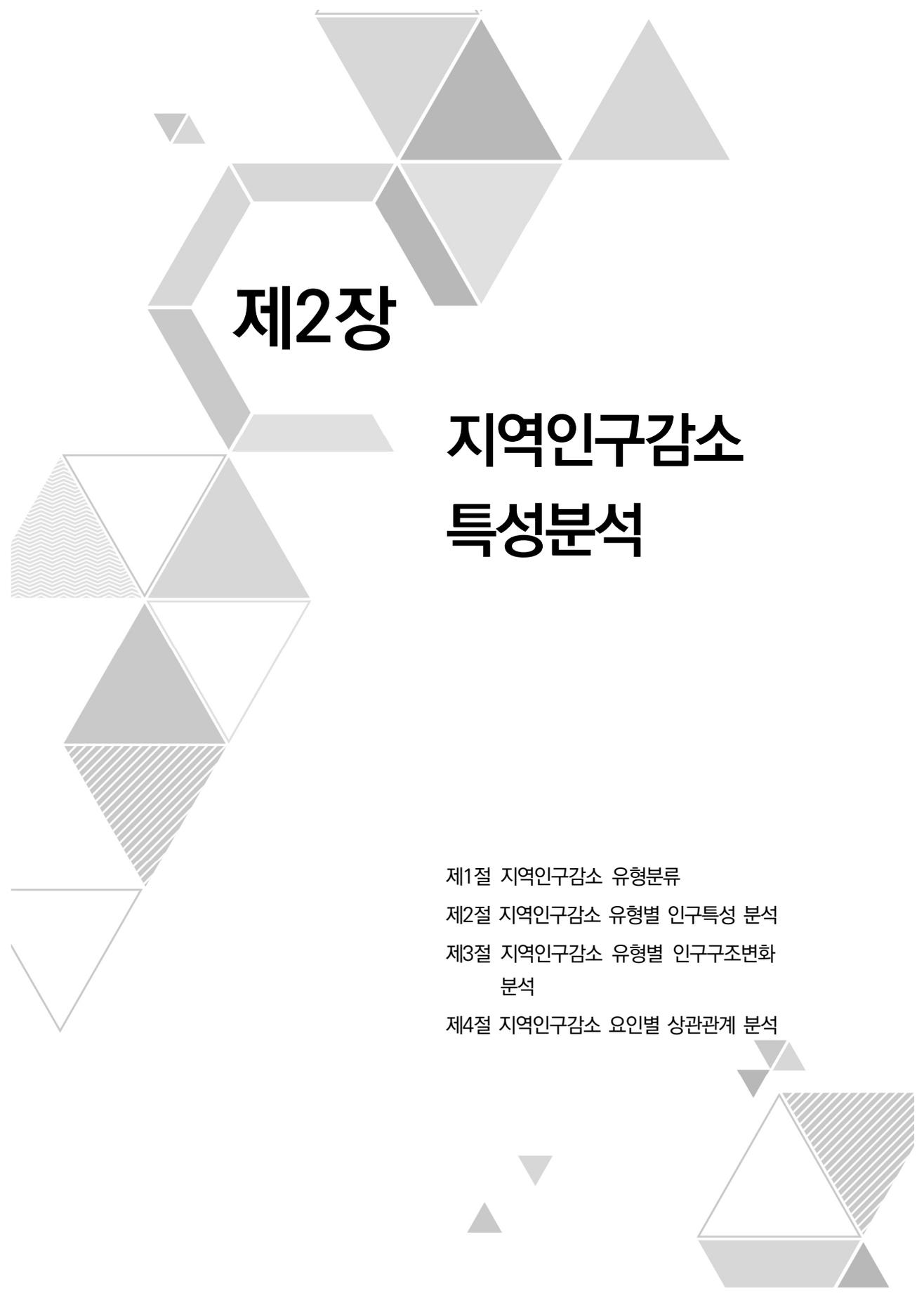
2. 연구방법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 환경변화 및 지역발전정책 문헌검토 및 제도조사**
 - 지역인구감소 위기대응 지역발전정책의 여건변화 및 대응이슈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국책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 등의 지역발전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지역발전정책 실태 및 제도에 관한 문헌조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률, 조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국외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지역발전정책 분석 및 사례조사**
 - 기존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국책 및 시도연구원 지역발전정책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 지역인구감소 위기대응 관련 부처 시책조사 및 사업 유형화**
 -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중소기업부 등 사업목적과 근거,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사업의 주요내용과 소요예산 등

-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 지역발전 분야전문가 및 공무원 등과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 논의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도출



제2장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제1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제2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제3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구조변화
분석

제4절 지역인구감소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제2장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제1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1. 분석개요

□ 시간적 범위

-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비교분석 등에 사용되는 자료의 기준년도는 2017년이며, 인구구조 변화분석을 위한 비교년도는 2000년임
 - 전입자수, 전출자수 등 순이동자수는 2019년 현재 2018년 자료가 구득가능하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등 자연증감량 자료가 2017년이 최신이어서 기준년도는 2017년으로 분석함
- 1995년 행정구역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도농통합시 출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등으로 행정구역체계가 크게 변경되어 그 이전의 시점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을 비교년도로 활용
 - 또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 등이 2000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2000년을 비교년도로 선정

□ 공간적 범위

- 시군구 단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고려한 총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세종특별자치시(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2012년 7월 출범)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시'로 구분하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시'로 구분하여 포함

- 2000년 이후 이루어진 도농통합으로 인한 행정구역은 2019년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
 - 2001년에 통합한 광주군과 광주시, 화성군과 화성시, 2003년에 통합한 포천군과 포천시, 양주군과 양주시, 2010년 통합한 창원, 마산 및 진해시, 2013년에 통합한 여주군과 여주시, 2014년에 통합한 청원군과 청주시 등

〈표 2-1〉 행정구역 변경내역

지역	행정구역 변경 전(2000년)	행정구역 변경 후(2018년)	변경년도
인천(1개)	남구	미추홀구	2018년
경기(5개)	광주군	광주시	2001년
	화성군	화성시	2001년
	포천군	포천시	2003년
	양주군	양주시	2003년
	여주군	여주시	2013년
충북(2개)	청주시 + 청원군	청주시	2014년
	증평출장소	증평군	2003년
충남(2개)	논산시 두마면(계룡출장소)	계룡시	2003년
	당진군	당진시	2012년
경남(1개)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창원시	2010년
제주(2개)	북제주군 + 제주시	제주시	2006년
	남제주군 + 서귀포시	서귀포시	2006년

□ 인가와 인구구조의 범위

-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인구의 증감, 인구의 이동, 인구구조의 변화와 특성 등을 다루는데, 이때 ‘인구’는 행정인구, 즉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행정직제와 사무배분, 지방의석수, 선거구, 교부세 등 지방행재정이 대부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zero sum)에 불과한 인구가동이 주민등록인구로 집계되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

- 인구증감량은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으로 구분
 - 자연증감량은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거한 조사통계인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활용
 - 사회증감량은 인구유입과 인구유출로 인한 증감, 즉 사회적 인구이동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행정자치부 행정정보증계시스템으로부터 보고되는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 활용
-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인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포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분포로 그 정의를 한정함
 - 제현정·이희연(2017)은 인구구조 분석에 적용되는 연령대를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총 8개 연령대로 분류하고 있음

〈표 2-2〉 연령대 분류와 연령대별 특성

명칭	연령대	연령대 특성
소아인구	0-9세	낮은 출산율의 고착화, 가임연령인구수 감소와 출생아 감소가 연계되어 있음을 잘 반영
학력인구	10-19세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대학 과잉 공급 문제
핵심가임연령인구	20-39세	가임연령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 출산 잠재력을 잘 나타내줌, 독신 1인 가구 증가
소비활력인구	40-49세	가구소비가 가장 많은 연령층, 소비가 줄 경우 소비절벽 현상으로 반영
자산보유인구	50-64세	순 자산이 가장 많은 연령층,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이 높고 노후 준비로 저축 증가
고령인구	65-74세	젊은 노인층으로 최근 새로운 소비의 주축세력으로 부상
초고령인구	7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 빈곤/심리적 고독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률 높음, 독거노인 비중도 높음

출처: 제현정·이희연(2017), 지역별 인구구조변화와 유형별 특성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분석자료

-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인구감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통계청(KOSIS)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시군구별 총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활용
 - 자연증감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자료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활용
 - 사회증감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전입자수와 전출자수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

2.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2000~2017년)

□ 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을 함께 고려한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

-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감량과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사회증감량, 그리고 총인구증감량을 함께 고려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증감 유형은 총 5가지로 분류되었음
 - 분류에 사용된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은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누적된 수치로서 자연증감량은 연도별 (출생자수 - 사망자수)의 합계이고 사회증감량은 연도별 (전입자수 - 전출자수)의 합계로 도출함
- 총인구증가지역의 세부유형은 총 3가지로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증가가 모두 발생한 지역을 유형 I, 사회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자연적 증가가 더 커서 전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유형 II, 반대로 자연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사회증가가 더 커서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유형 III으로 분류
 - 총인구감소지역의 세부유형도 총 3가지로 인구의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모두 발생한 지역을 유형 IV, 인구가 자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사회적 감소가 더 커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유형 V, 인구가 사회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자연적 감소가 더 커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 VI로 분류
 - 2017년 기준 유형 VI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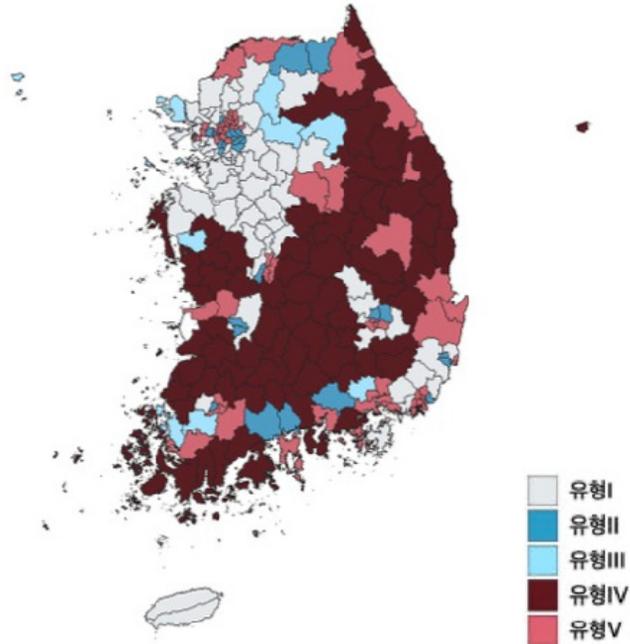
〈표 2-3〉 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유형(2000~2017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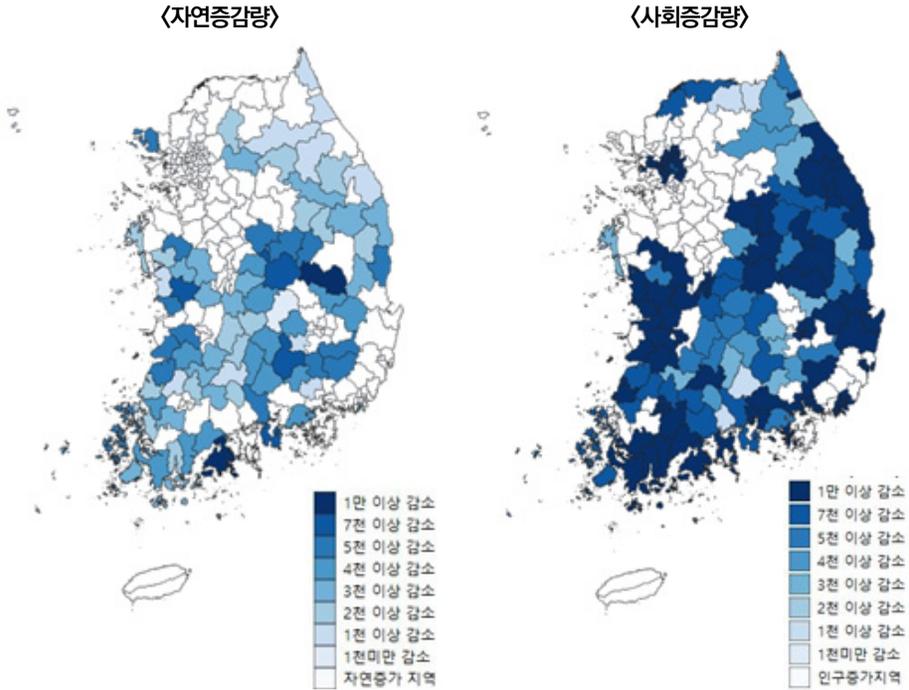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유형	개수	비율	시	군	구
총 인구 증가 지역	+	+	유형Ⅰ	55	24.0%	38	8	9
	+	-	유형Ⅱ	22	9.6%	8	2	12
	-	+	유형Ⅲ	9	3.9%	1	8	-
	소계			86	37.6%	47	18	21
총 인구 감소 지역	-	-	유형Ⅳ	76	33.2%	13	59	4
	+	-	유형Ⅴ	67	29.3%	18	5	44
	-	+	유형Ⅵ	-	-	-	-	-
	소계			143	62.4%	31	64	48
합계				229	100.0%	78	82	69

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를 대상으로 함.

〈그림 2-1〉 지역인구감소 유형분류(2000~2017년)



〈그림 2-2〉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의 지자체 분포(2000~2017년)



- 총인구증가지역 중에서 유형 I은 총 55개로 24.0%의 비율을 보이며 대부분 시지역이 해당되고 유형 II는 22개 지자체로 전체 9.6%에 해당하며 시와 구지역이 많이 나타났으며, 유형 III은 9개 지자체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대부분 군지역에 해당됨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유형 IV는 총 76개로 전체 지자체의 33.2%를 차지하며 대부분 군지역에 속하고 유형 V는 총 67개 지자체로 29.3%에 해당하며 시와 구지역이 많이 나타났음
 - 가장 심각한 유형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자연 및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유형 IV인데 군지역이 5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총인구증가지역

- 유형Ⅰ은 총 38개 시, 8개 군, 9개 구가 해당되는데 먼저 시 지역은 경기도가 27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5개, 경남 4개, 전남 3개, 강원, 경북 및 제주가 각 2개, 충북과 전북이 각 1개로 나타남
 - 군지역의 경우 부산의 기장군, 달성군, 울산의 울주군이 해당되며 충북 3개 군, 전북과 경북이 각 1개씩이고 구의 경우 인천이 4개 구로 가장 많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에서 각 1개씩 해당됨
- 유형Ⅱ는 시 8개, 군 2개, 구 12개로 총 22개 지자체가 해당됨
 - 지역별로는 경기 4개 시, 전북 1개 시, 전남 2개 시, 경남 1개 시와 강원 2개 군 및 서울 5개 구, 대구 및 울산 각 2개 구, 부산, 광주, 대전 각 1개 구가 해당됨
- 유형Ⅲ에 해당하는 시는 전남 나주시이며 군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과 양평 및 강원, 충남, 전남, 경남에서 각 1개씩 해당됨

□ 총인구감소지역

- 유형Ⅳ는 총 76개 지자체로 시 13개, 군 59개, 구 4개가 해당됨
 - 시 지역은 경북 5개, 충남과 전북이 각 3개, 강원과 경남 각 1개가 해당되며 군 지역은 전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경북 12개, 부산 경남 9개, 전북 7개, 충남과 강원이 각 6개, 충북 5개로 구성됨
 - 구 지역은 부산 4개 구가 해당됨
- 유형Ⅴ는 총 67개 지자체로 시 18개, 군 5개, 구 44개로 이루어짐
 - 시는 강원 4개시, 경북과 경남이 각 3개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각 2개이며 군은 강원과 전남에서 각 2개와 경기 1개 군이 해당됨
 - 구의 경우 서울이 19개로 가장 많으며 부산 9개, 대구 5개, 인천 4개, 광주와 대전이 각 3개, 울산 1개로 나타남

〈표 2-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시)(2000~2017년)

구분	유형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78개)		29	7	3	8	6	5	10	8	2
총 인구 증가 지역 (47개)	소계	27	2	1	5	1	3	2	4	2
	유형Ⅰ (+ +) 38개	수원, 의정부,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춘천, 원주	청주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구미, 경산	김해, 거제, 양산	제주, 서귀 포
	유형Ⅱ (+ -) 8개	성남, 안양, 부천, 군포				전주	순천, 광양		전주	
	유형Ⅲ (- +) 1개						나주			
총 인구 감소 지역 (31개)	소계	2	5	2	3	5	2	8	4	-
	유형Ⅳ (- -) 13개		삼척		공주, 보령, 논산	정읍, 남원, 김제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밀양	
	유형Ⅴ (+ -) 18개	광명, 과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충주, 제천		군산, 익산	목포, 여수	포항, 경주, 안동	창원, 통영, 사천	

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를 대상으로 함.

〈표 2-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군)(2000~2017년)

구분	유형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82개)		5	3	11	8	7	8	17	13	10
총 인구 증가 지역 (18개)	소계	5	2	3	3	1	1	1	1	1
	유형Ⅰ (+ +) 8개	기장, 달성, 울주			증평, 진천, 음성		완주		칠곡	
	유형Ⅱ (+ -) 2개			화천, 양구						
	유형Ⅲ (- +) 8개	강화, 옹진	가평, 양평	횡성		홍성		무안		함안
총 인구 감소 지역 (64개)	소계	-	1	8	5	6	7	16	12	9
	유형Ⅳ (- -) 59개			홍천,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신창, 함양, 거창, 합천
	유형Ⅴ (+ -) 5개		연천	철원, 인제				화순, 영암		

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를 대상으로 함.

〈표 2-6〉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구)(2000~2017년)

구분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69개)		25	15	7	8	5	5	4
총 인구 증가 지역 (21개)	소계	6	2	2	4	2	2	3
	유형 I (+ +) 9개	강서	강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산구	유성구	북구
	유형 II (+ -) 12개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해운대구	동구, 북구		서구	서구	중구, 남구
총 인구 감소 지역 (48개)	소계	19	13	5	4	3	3	1
	유형 IV (- -) 4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유형 V (+ -) 44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남구(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동구, 남구, 북구	동구, 중구, 대덕구	동구

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를 대상으로 함.

3. 최근 5년간 지역인구감소 유형변화(2013~2017년)

□ 총인구감소지역이 143개에서 145개로 증가

- 최근 5년간(2013~2017년) 각 지자체의 총인구증감량,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을 토대로 인구증감유형을 분류하여 2000~2017년 기준의 지역인구감소 유형과 비교하면 총인구감소지역이 143개에서 145개로 증가하였음
 -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에는 유형Ⅰ이 1개, 유형Ⅱ가 15개 감소한 반면 유형Ⅲ은 14개 지자체가 증가하였음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유형Ⅳ가 23개 감소하고 유형Ⅴ는 그대로이며 자연감소가 사회증가보다 더 커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Ⅵ이 25개로 나타났음
 - 유형Ⅴ의 경우 지자체 수는 그대로 이지만 시와 구가 각 1개씩 증가했고 군에서 2개 지역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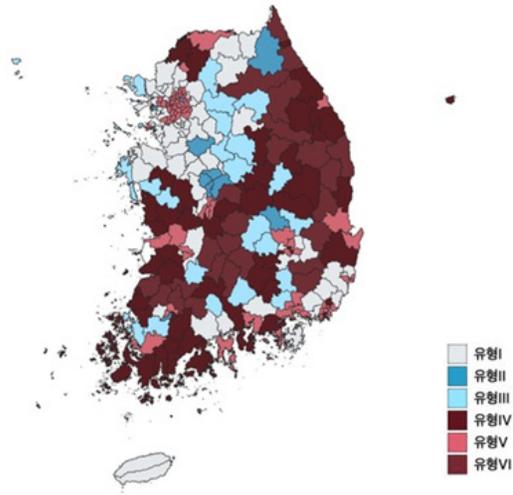
〈표 2-7〉 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유형 변화

(단위: 개)

구분		총계		시		군		구	
		00~17	13~17	00~17	13~17	00~17	13~17	00~17	13~17
총 인구 증가 지역	유형Ⅰ	55	54	38	33	8	8	9	13
	유형Ⅱ	22	7	8	3	2	1	12	3
	유형Ⅲ	9	23	1	4	8	19	0	0
	소계	86	84	47	40	18	28	21	16
총 인구 감소 지역	유형Ⅳ	76	53	13	17	59	28	4	8
	유형Ⅴ	67	67	18	19	5	3	44	45
	유형Ⅵ	0	25	0	2	0	23	0	0
	소계	143	145	31	38	64	54	48	53
합계		229		78		8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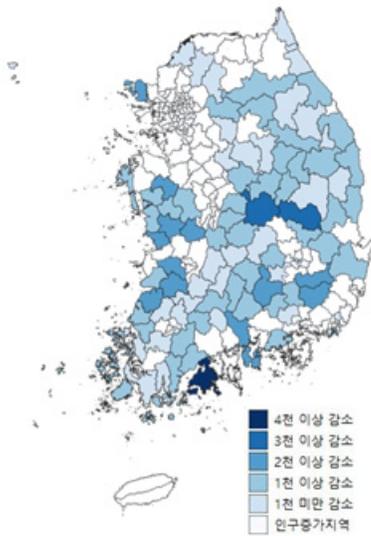
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를 대상으로 함.

〈그림 2-3〉 지역인구감소 유형(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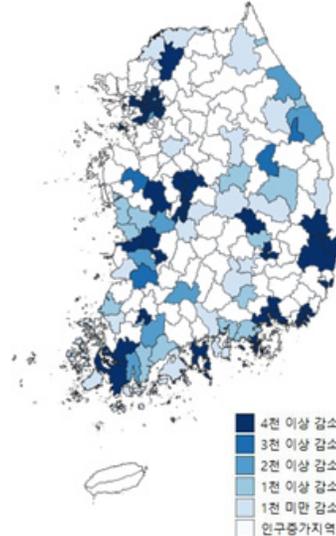


〈그림 2-4〉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의 지자체 분포(2013~2017년)

〈자연증감량〉



〈사회증감량〉



제2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1. 유형별 평균인구수, 인구증감률과 인구증감량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평균인구수

-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지자체당 평균 인구수는 2000년 23만 8천명에서 2018년 28만 5천명으로 약 4만 7천명이 증가하였음
 -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2000년 평균 18만 3천명에서 2018년 16만 2천명으로 약 2만 1천명이 감소함

〈표 2-8〉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도별 평균인구수 변화

(단위: 천명)

구분	유형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총 인구 증가 지역	소계	238	253	268	280	285
	유형Ⅰ(++)	240	276	310	340	359
	유형Ⅱ(+/-)	407	418	427	427	419
	유형Ⅲ(-/+)	67	64	67	72	76
총 인구 감소 지역	소계	183	175	173	167	162
	유형Ⅳ(--)	69	62	59	57	55
	유형Ⅴ(+/-)	296	288	287	278	269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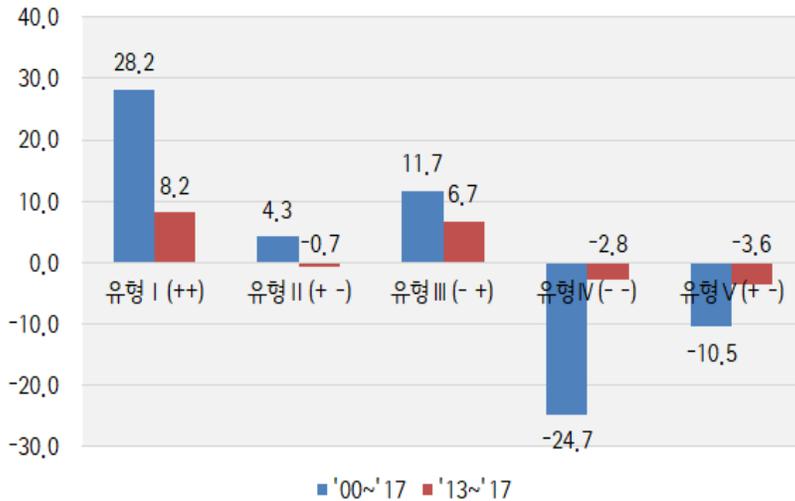
- 전국의 총인구는 2000년 대비 2017년에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2013년 대비 2017년)간 1.3% 증가함
-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00년 대비 2017년에 14.7%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4.7%가 증가함
 - 유형Ⅰ의 경우 2000년 대비 2017년에 28.2%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

- 였으며 최근 5년에도 8.2%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유형Ⅱ의 경우 4.3%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는 증감률이 -0.7%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고, 유형Ⅲ은 2000년 대비 2017년에 11.7% 증가했고 최근 5년에는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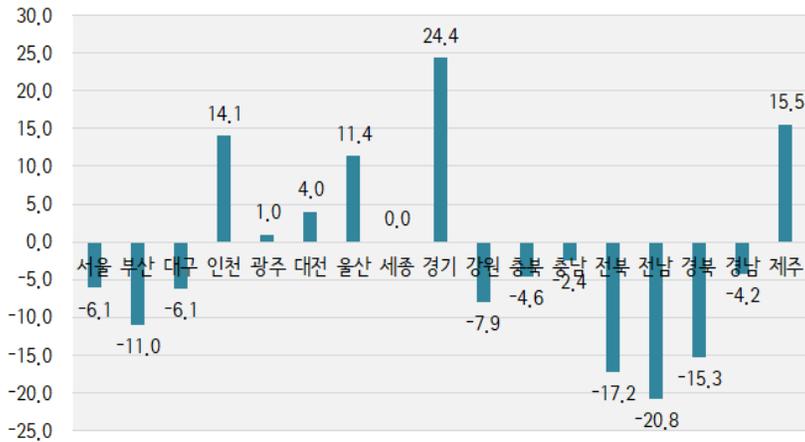
구분	유형	2000년 대비 2017년	2013년 대비 2017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4.7%	4.7%
	유형Ⅰ(++)	28.2%	8.2%
	유형Ⅱ(+)	4.3%	-0.7%
	유형Ⅲ(-)	11.7%	6.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17.6%	-3.19%
	유형Ⅳ(--)	-24.7%	-2.8%
	유형Ⅴ(+)	-10.5%	-3.6%

〈그림 2-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증감률 변화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00년 대비 2017년에 인구가 17.6% 감소했고 최근 5년 간에는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Ⅳ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증감률이 -24.7% 인구가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5년에는 -2.8%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유형Ⅴ는 전체 기간 동안 10.5%가 감소했고 최근 5년에는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2000년 대비 2017년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4.4% 증가한 반면 전남은 20.9% 감소하였음

〈그림 2-6〉 시도별 인구증감률(2000년 대비 2017년)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인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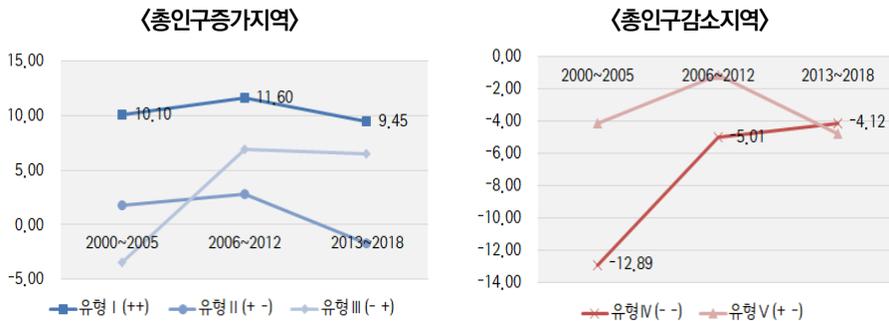
- 기간을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으로 나누어 인구증감률을 살펴보았음
 - 총인구증가지역은 각각 평균적으로 2.8%, 7.1%, 4.8% 인구가 증가한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은 각각 8.5%, 3.1%, 4.4% 인구가 감소하였음

〈표 2-10〉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인구증감률

(단위: %)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2.8	7.1	4.8	15.1
	유형 I(++)	10.1	11.6	9.5	30.1
	유형 II(+/-)	1.8	2.8	-1.7	3.3
	유형 III(-+)	-3.5	6.9	6.5	11.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8.5	-3.1	-4.4	-19.0
	유형 IV(--)	-12.9	-5.0	-4.1	-26.3
	유형 V(+/-)	-4.2	-1.1	-4.8	-11.8

〈그림 2-7〉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인구증감률 추이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인구증감량

- 기간별 평균 인구증감량은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00~2005년에 2만 4천명이 증가했고 2006~2012년에는 2만 8천명이 증가했으며 2013~2018년에는 1만 5천명이 증가하여 최근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00~2005년 평균적으로 1만 2천명이 감소했고, 2006~2012년에는 3천명, 2013~2018년에는 1만 1천명이 감소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인구 감소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유형 I 은 다른 두 유형보다 평균 인구증감량이 많은데 2000~2005년 약 6만명, 2006~2012년 약 6만 4천명, 2013~2018년 4만 9천명으로 나타남
 - 유형 II의 경우 2000~2005년과 2006~2012년 평균적으로 1만 6천명과 1만 5천명이 증가했는데 최근 5년 동안은 약 1만명이 감소하고 있어 최근 들수록 사회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형 III의 경우 2000~2005년은 약 3천명이 감소했지만 2006~2012, 2013~2018년은 각 4천명과 6천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유형 IV는 2000~2005년 약 7,600명이 감소했고 2006~2012년 약 3천명, 2013~2018년 약 2천명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음
 -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보다 더 커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 V의 경우 2000~2005년 약 1만 7천명, 2006~2012년 약 3천명, 2013~2018년 약 2만명이 감소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1〉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인구증감량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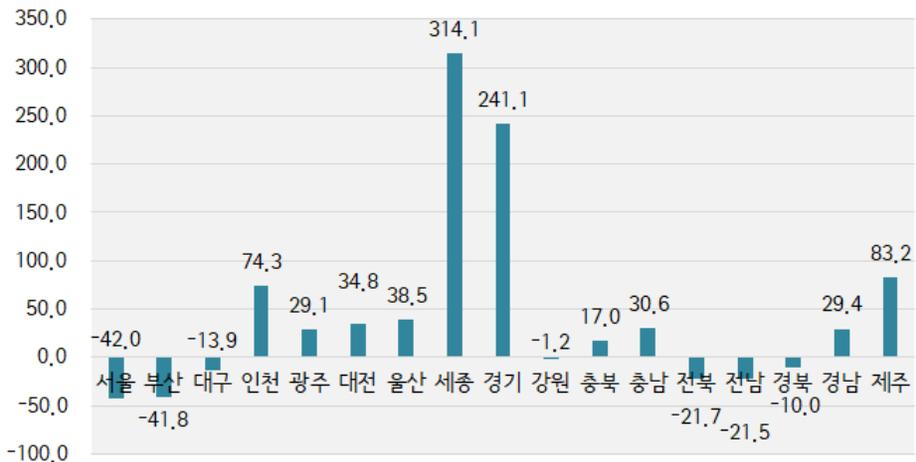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24.3	27.7	15.2	74.5
	유형 I (++)	59.6	63.7	49.5	192.1
	유형 II (+-)	16.4	15.2	-10.2	23.2
	유형 III (-+)	-3.1	4.1	6.5	8.3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12.5	-3.1	-11.1	-29.7
	유형 IV (--)	-7.7	-3.0	-2.3	-14.5
	유형 V (+-)	-17.3	-3.2	-19.8	-44.8

〈그림 2-8〉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인구증감량 추이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시도별 평균 인구증감량은 먼저 인구증가지역으로는 세종 약 31만명, 경기 약 24만명, 제주 약 8만명, 인천 약 7만명 등임 - 인구감소지역으로는 부산 약 4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 약 2만명, 경북 약 1만명이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시도별 평균 인구증감량(2000년 대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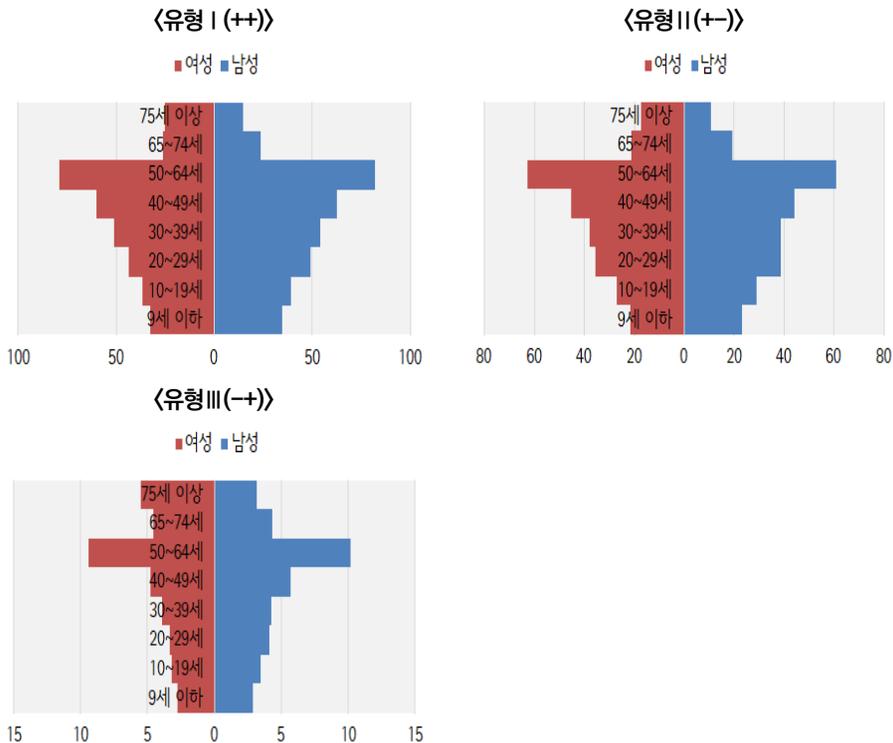


2. 유형별 인구피라미드

□ 총인구증가지역의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피라미드(2018년)

- 총인구증가지역의 2018년 연령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 I 과 유형 II 의 경우 50~64세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세 이하 연령보다 적어 양호한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음
- 유형III의 경우에는 군지역이 많아서 타 유형과 달리 고령인구가 19세 이하 연령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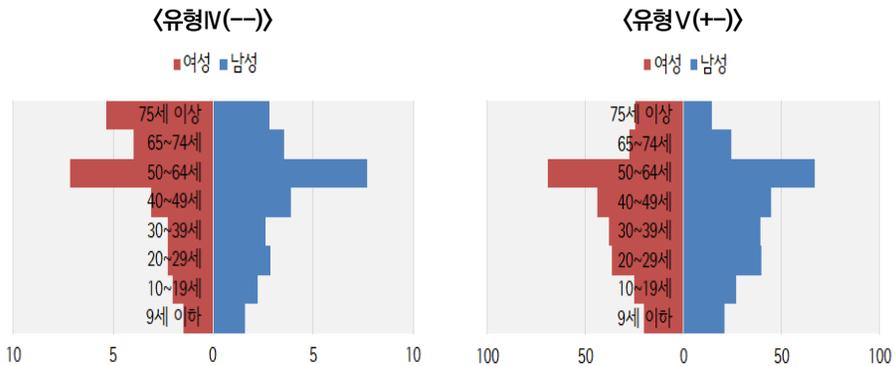
〈그림 2-10〉 총인구증가지역의 인구피라미드(2018년)



□ 총인구감소지역의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피라미드(2018년)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유형Ⅳ에서 75세 이상 초고령자, 특히 여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인구나 19세 이하 인구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유형Ⅴ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19세 이하 인구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30대 젊은 연령층도 유형Ⅳ에 비해 양호한 편임
- 유형Ⅲ과 유형Ⅳ의 경우 전형적인 군지역의 인구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유형Ⅲ은 총인구증가지역에 속하는 반면 유형Ⅳ는 총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됨

〈그림 2-11〉 총인구감소지역의 인구피라미드(2018년)



3. 유형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자연증감량

- 2000년부터 2018년까지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인구의 자연증감량을 살펴 보면, 먼저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00~2005년과 2006~2012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1만 5천명이 증가했고 2013~2018년에는 평균 7천명이 증가하여 최근 들어 인구의 자연증가량은 과거보다 감소하였음
 - 유형 I의 경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6만2천명이 증가했는데 구간별로는 2000~2005년 2만 4천명, 2006~2012년 2만 6천명, 2013~2018년 1만 4천명으로 최근 5년간 인구의 자연증가량은 과거보다 감소함
 - 유형 II의 경우 2000~2005년 2만 3천명, 2006~2012년 2만 1천명, 2013~2018년 1만 4천명으로 나타남
 - 인구가 자연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증가하여 총인구가 증가하는 유형 III의 경우 2000~2005년 평균 670명이 감소했고 2006~2012년 1천명, 2013~2018년 1천 1백 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1만 7천명이 2000~2018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했는데 구간별로는 2000~2005년 9천명, 2006~2012년 7천명, 2013~2018년 2천명이 증가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자연증가량이 감소하고 있음
 - 유형 IV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2005년에는 1천명이 감소하였고, 2006~2012년과 2013~2018년에는 약 1천 5백 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 V의 경우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지만 사회적인 인구 감소량이 더 커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2000~2005년에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평균 1만 8천명 증가하였고, 2006~2012년에는 1만 5천명, 2013~2018년에는 5천명 증가하여 자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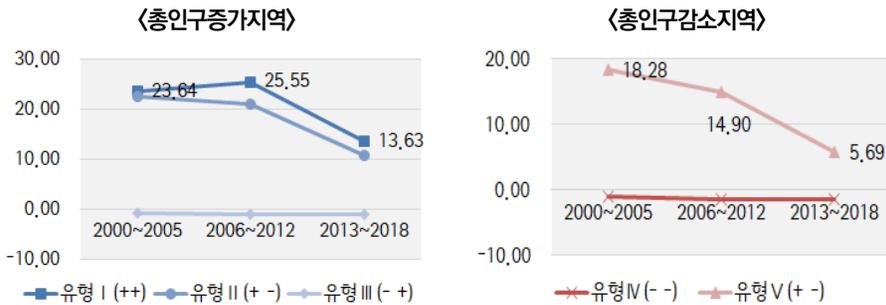
- 지역인구감소 유형과 관계없이 최근 5년 동안 인구의 자연증가량은 과거 기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자연증감량

(단위: 천명)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5.2	15.2	7.8	37.9
	유형Ⅰ(++)	23.6	25.6	13.6	62.0
	유형Ⅱ(+)	22.7	21.1	10.7	54.5
	유형Ⅲ(-)	-0.7	-1.0	-1.1	-2.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8.6	6.7	2.1	17.4
	유형Ⅳ(--)	-1.0	-1.5	-1.5	-4.0
	유형Ⅴ(+)	18.3	14.9	5.7	38.9

〈그림 2-1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자연증감량 추이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사회증감량

- 평균 사회증감량도 2000년부터 2018년까지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00~2005년에 1만 6천명, 2006~2012년에 평균적으로 1만 2천명이 유입되었고 2013~2018년에는 9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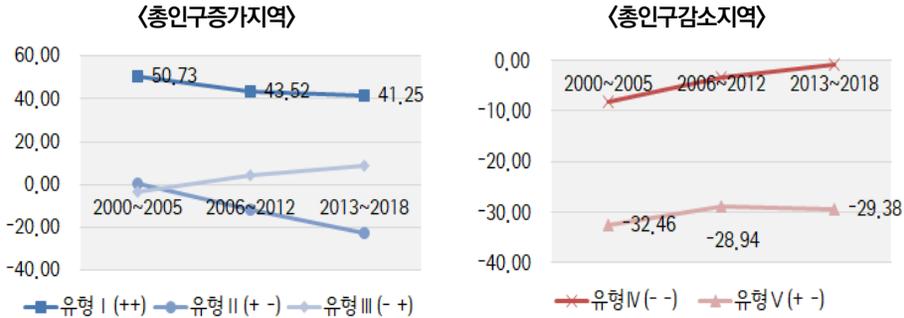
- 이 유입되었으나 최근 들어 인구 유입량 자체는 감소하고 있음
- 유형 I의 경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13만명이 유입되었는데 구간별로는 2000~2005년에 5만명, 2006~2012년에 4만 4천명, 2013~2018년 4만명이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음
 - 유형 II의 경우 사회적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2000~2005년에는 4백명이 증가했으나, 2006~2012년에는 1만 1천명, 2013~2018년에는 2만 2천명이 감소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만 4천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유형 III의 경우 2000~2005년에 평균 3천명이 감소했으나 2006~2012년에는 4천명, 2013~2018년에는 8천 5백 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00~2018년 동안 평균적으로 5만명이 유출되었는데 구간별로는 2000~2005년에 2만명, 2006~2012년에는 1만 6천명, 2013~2018년에는 1만 5천명이 유출되었음
- 유형 IV는 평균적으로 2000~2005년에 8천명, 2006~2012년에 3천명, 2013~2018년에 8백 명이 사회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 V는 평균적으로 2000~2005년에 3만명, 2006~2012년과 2013~2018년에는 2만 9천명의 사회적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3〉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사회증감량

(단위: 천명)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6.0	12.2	9.0	36.6
	유형 I(++)	50.7	43.5	41.2	134.0
	유형 II(+)	0.4	-11.5	-22.8	-33.8
	유형 III(-)	-3.2	4.4	8.5	9.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20.3	-16.2	-15.1	-51.6
	유형 IV(--)	-8.2	-3.4	-0.8	-12.4
	유형 V(+)	-32.5	-28.9	-29.4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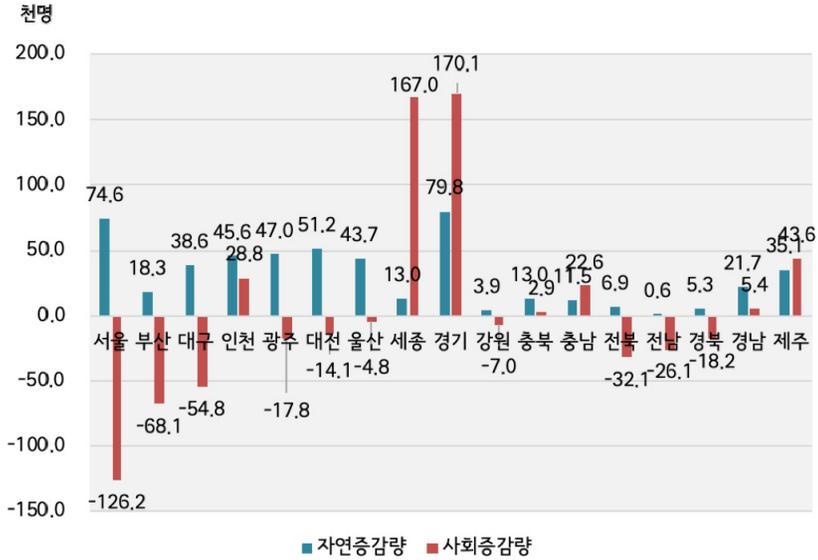
〈그림 2-13〉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평균 사회증감량 추이



□ 시도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의 평균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을 시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시도는 경기가 평균 7만 9천명, 서울이 7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대전 5만명, 광주 4만 7천명, 인천 4만 6천명, 제주 4만 4천명 등으로 나타남
 - 인구가 사회적으로 감소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이 1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 6만 8천명, 대구 5만 5천명, 전북 3만 2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제주 4만 4천명, 인천 2만 9천명, 충남 2만 3천명 등이었음
- 서울,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인구의 평균 자연증가량보다 사회증가량이 더 많았음
 - 반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증가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14〉 시도별 평균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제3절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인구구조변화 분석

1. 연령대별 인구증감량

□ 연령대별 인구증감량(2000~2018년)

- 2000년 대비 2018년에 총인구증가지역의 연령대별 인구증감량을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와 20~30대 젊은인구는 평균 약 2만명과 1만명이 감소했고 생산가능인구는 약 6만명, 고령인구는 약 3만명이 증가함
 - 유형 I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15만 6천명이 증가했으며, 고령인구는 5만명, 20~30대 젊은인구는 약 6천명이 평균적으로 증가함
 - 사회적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유형 II의 경우 유소년인구와 20~30대 젊은인구가 각각 4만 3천명, 3만 8천명이 감소
 - 유형 III은 유형 II와 마찬가지로 유소년인구와 20~30대 젊은인구는 각각 3천명, 4천명씩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8천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2-1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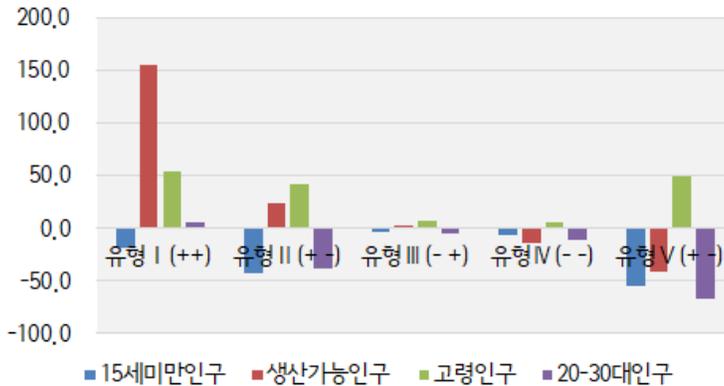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유형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20~30대 인구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21.4	61.2	34.7	-12.1
	유형 I(++)	-18.8	156.3	54.7	5.9
	유형 II(+/-)	-42.7	24.4	41.5	-38.1
	유형 III(-/+)	-2.7	2.9	8.0	-4.1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30.1	-27.3	27.8	-38.6
	유형 IV(--)	-6.1	-14.0	5.6	-10.2
	유형 V(+/-)	-54.1	-40.7	50.0	-67.0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고령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유소년인구와 20~30대 젊은인구가 각 3만명, 3만 9천명씩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유형Ⅳ의 경우 유소년인구보다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더 크고 고령인구 증가는 6천명으로 나타남
- 유형Ⅴ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특히 20~30대 젊은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각 5만 4천명, 4만명, 6만 7천명이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도 5만명이 증가하여 고령화, 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임

〈그림 2-1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 비교(2000~2018년)



□ 연령대별 인구증감량(2013~2018년)

- 연령대별 인구증감량의 최근(2013~2018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기간의 경향과 큰 차이는 없으나 유형Ⅲ의 경우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모두 증가세를 띠는 점에서 다르게 나타남
- 유형Ⅲ의 경우 인구의 자연감소보다 사회증가가 커서 총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데 유소년인구는 평균 약 3백명, 생산가능인구는 3천 6백명, 고령인구는 2천 6백명, 20~30대 젊은인구는 약 7백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20~30대 젊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기간과 최근 6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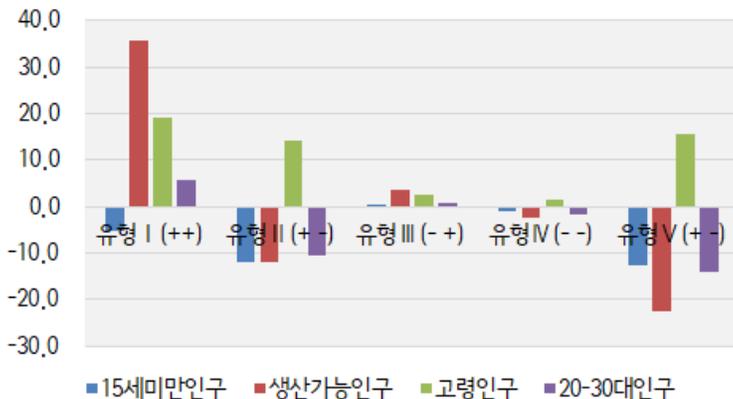
- 유형Ⅳ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20~30대 인구가 각 1천명, 2천 6백명, 1천 7백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Ⅴ는 유소년인구 1만 3천명, 생산가능인구 2만 3천명, 20~30대 인구 1만 4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2013~2018년)

(단위: 천명)

구분	유형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20~30대 인구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5.8	9.1	11.9	-1.5
	유형Ⅰ(++)	-5.4	35.7	19.1	5.5
	유형Ⅲ(+/-)	-12.2	-12.1	14.1	-10.6
	유형Ⅲ(-/+)	0.3	3.6	2.6	0.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6.9	-12.6	8.4	-7.8
	유형Ⅳ(--)	-1.1	-2.6	1.4	-1.7
	유형Ⅴ(+/-)	-12.6	-22.5	15.4	-13.9

〈그림 2-16〉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량 비교(2013~2018년)



2. 연령대별 순이동량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평균 순이동량

- 2000년부터 2018년의 누적 순이동량을 각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3만 7천명이 유입된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은 평균 5만 2천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2013~2018년)의 경향을 보면 총인구증가지역은 평균적으로 9천명이 증가한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은 평균적으로 1만 5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증가지역의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I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13만 4천명이 최근(2013~2018년)에는 평균적으로 4만명이 증가하였음
 - 유형 II의 경우에는 자연증가량이 사회감소량보다 더 커서 총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전체 기간(2000~2018년)동안 3만 4천명이 평균적으로 감소했고 최근에는 약 2만 3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 III의 경우 전체 기간(2000~2018년)동안 약 평균 9천 7백명, 최근 6년간은 약 평균 8천 5백명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총인구감소지역은 유형 IV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2000~2018년)동안 평균적으로 약 1만 2천명이 유출되었고, 최근(2013~2018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8백명이 유출되고 있음
 - 유형 V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2000~2018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9만명,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약 3만명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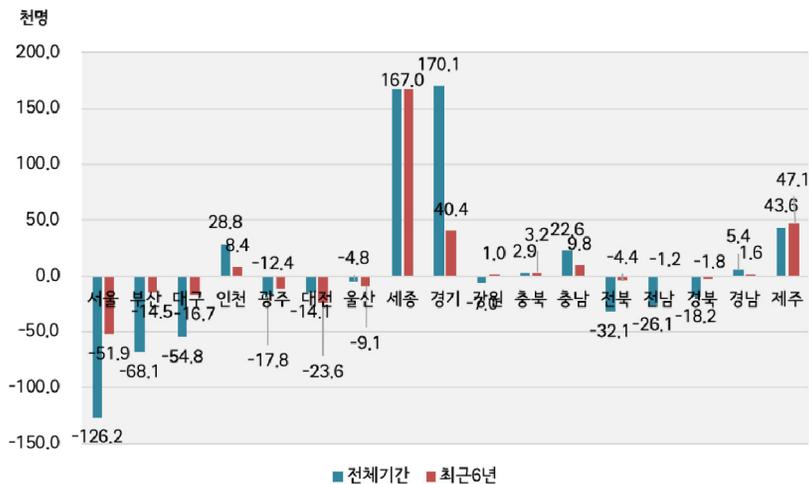
〈표 2-16〉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평균 순이동량

(단위: 천명)

구분	유형	2000~2018년	2013~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36.6	9.0
	유형Ⅰ(++)	134.0	41.2
	유형Ⅱ(+/-)	-33.8	-22.8
	유형Ⅲ(-+)	9.7	8.5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51.6	-15.1
	유형Ⅳ(--)	-12.4	-0.8
	유형Ⅴ(+/-)	-90.8	-29.4

- 평균 순이동량을 시도별로 보면 전체기간(2000~2018년)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 1만 7천명이 유입되었음
- 최근(2013~2018년)에는 경기로의 유입이 4만명, 서울에서 유출이 5만 2천명으로 나타났고 제주의 경우 최근 유입이 4만 7천명으로 증가함

〈그림 2-17〉 시도별 기간별 평균 순이동량



□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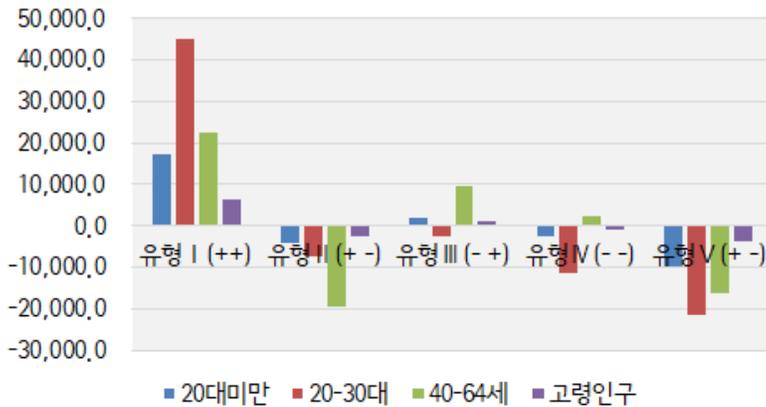
- 평균 순이동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간(2000~2018년) 동안 총 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대 미만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5천명, 20~30대 인구가 약 12만명, 40~64세 인구가 약 4천명, 65세 이상 인구가 약 1천 6백명 증가함
 -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20대 미만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16만명 감소했고, 20~30대 인구나 64세 이상 고령인구도 각각 6천명, 2천명씩 감소했으며 40~64세 인구나 약 7천명 줄어들었음
- 전체 기간(2000~2018년) 동안 총인구증가지역의 세부유형별로 평균 순이동량을 살펴보면 유형 I의 경우 20대 미만 인구가 1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30대 인구는 4만 5천명, 40~64세 인구는 2만 2천명, 65세 이상 인구는 약 6천명이 평균적으로 유입되었음
 - 유형II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40~64세 인구가 약 2만명 줄어들었음
 - 유형III은 20~30대 인구가 약 2천 7백명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약 2천 4백명이 유출된 반면 20대 미만과 40~64세 인구는 약 2천명과 1만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간(2000~2018년) 동안 총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순이동량은 먼저 유형IV의 경우 40~6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유출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형V의 경우에는 전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30대 인구가 유형IV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1만명, 유형V의 경우에는 약 2만명이 감소하였음

〈표 2-17〉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00~2018년)

(단위: 천명)

구분	유형	20대 미만	20~30대	40~64세	65세 이상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5.0	11.7	4.2	1.6
	유형Ⅰ(++)	17.3	45.2	22.5	6.2
	유형Ⅱ(+)	-4.2	-7.4	-19.4	-2.4
	유형Ⅲ(-)	1.8	-2.7	9.6	1.0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6.4	-16.4	-6.9	-2.2
	유형Ⅳ(--)	-2.7	-11.3	2.4	-0.8
	유형Ⅴ(+)	-10.0	-21.5	-16.1	-3.6

〈그림 2-18〉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 비교(2000~2018년)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된 평균 순이동량을 시도별 연령대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구와 광주는 20~30대와 40~64세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짐
- 반면 인천, 세종, 경기와 특히, 제주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8〉 시도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00~2018년)

(단위: 천명)

유형	20대 미만	20~30대	40~64세	65세 이상
서울	-13.0	-12.6	-31.2	-8.9
부산	-3.2	-21.8	-9.5	-1.7
대구	0.5	-19.6	-10.4	-1.2
인천	0.9	11.6	0.8	2.5
광주	4.8	-10.9	-5.7	1.2
대전	1.2	-2.3	-8.1	0.7
울산	-3.8	2.5	-3.0	1.4
세종	58.1	75.5	65.9	8.3
경기	14.4	49.5	17.5	6.4
강원	-0.5	-6.2	2.7	0.3
충북	0.0	-4.6	5.3	0.8
충남	2.3	1.4	7.7	0.7
전북	-2.2	-15.5	1.0	-0.5
전남	-3.5	-11.0	1.8	-0.9
경북	-3.1	-9.7	3.5	-0.2
경남	-0.5	-2.4	4.8	0.9
제주	6.7	5.3	18.9	1.8

□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13~2018년)

-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의 최근 6년간 경향을 보면 전체기간의 경향과 동일한데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30대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3천명 유입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았음
 - 반면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30대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4천 6백명이 유출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증가지역의 세부유형별로 보면 유형 I의 경우 전체기간과 동일하게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인구의 유입이 평균적으로 약 1만 4천명으로 많게 나타남
 - 유형 II의 경우 전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40~64세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9천명 감소함

- 유형Ⅲ의 경우 40~64세 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4천명이 유입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구유입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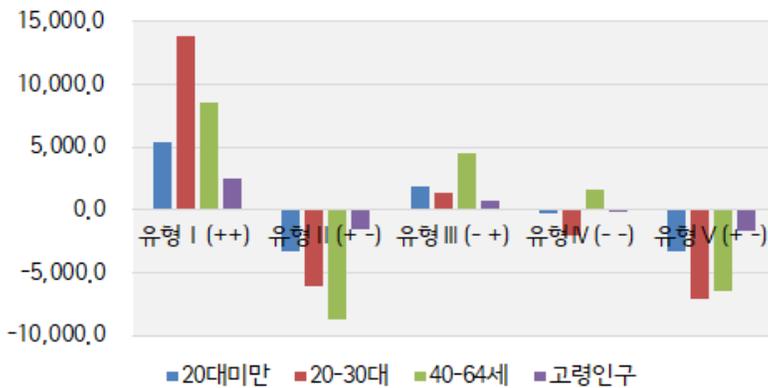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체기간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형Ⅳ의 경우 40~64세 인구가 약 1천 5백명 유입되었고 유형Ⅴ는 전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일어남

〈표 2-19〉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2013~2018년)

(단위: 천명)

구분	유형	20대 미만	20~30대	40~64세	65세 이상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3	3.0	1.4	0.6
	유형Ⅰ(++)	5.4	13.8	8.6	2.5
	유형Ⅱ(+)	-3.3	-6.1	-8.8	-1.6
	유형Ⅲ(-+)	1.9	1.4	4.5	0.8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1.8	-4.6	-2.5	-0.8
	유형Ⅳ(--)	-0.3	-2.1	1.5	0.0
	유형Ⅴ(+)	-3.3	-7.1	-6.5	-1.6

〈그림 2-19〉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연령대별 평균 순이동량 비교(2013~2018년)



- 최근(2013~2018년)의 평균 순이동량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인천, 세종, 경기, 제주의 경우에는 전체기간(2000~2018년)과 동일하게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음
- 광주와 울산의 경우 64세 미만 인구는 유출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냄
 -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의 경우 30대 미만 인구는 유출되지만 40대 이상 인구는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20〉 시도별 연령대별 최근 평균 순이동량(2013~2018년)

(단위: 천명)

유형	20대 미만	20~30대	40~64세	65세 이상
서울	-5.3	-3.9	-13.4	-4.4
부산	-0.2	-4.0	-2.8	-0.7
대구	-0.1	-5.2	-3.6	-0.5
인천	0.2	2.5	0.6	1.1
광주	0.0	-5.2	-2.5	0.3
대전	-3.3	-4.8	-5.9	-0.2
울산	-1.5	-2.0	-2.1	0.2
세종	53.1	73.0	57.4	7.7
경기	3.3	10.5	4.7	2.3
강원	0.3	-1.4	1.4	0.2
충북	-0.2	-0.7	2.3	0.5
충남	0.5	1.2	3.0	0.6
전북	-0.1	-3.4	1.0	0.1
전남	-0.2	-1.7	1.5	-0.1
경북	-0.5	-2.4	1.8	0.2
경남	-0.2	-1.5	2.0	0.5
제주	6.9	11.6	15.4	1.5

3. 연령대별 비율변화

□ 유소년인구 비율변화와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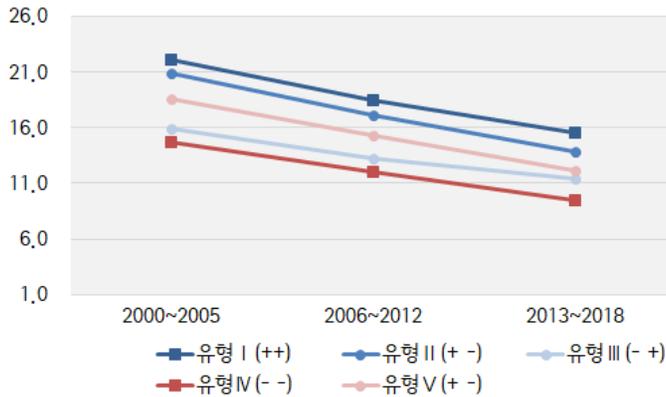
- 총인구증가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율은 2000~2005년 19.7%에서 2013~2018년에 13.6%로 약 6.1%가 감소하였으며 전체기간(2000~2018년) 평균은 16.5%로 나타남
 - 유형 I의 경우 2000~2005년 22.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유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3~2018년 15.6%로 약 7%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유형 II는 2000~2005년 20.9%에서 2013~2018년 13.8%로 약 7.1%가 감소했고 유형 III은 2000~2005년 16.0%에서 2013~2018년 11.4%로 약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도 총인구증가지역과 마찬가지로 2000~2005년 16.7%에서 2013~2018년에는 10.8%로 유소년인구비율이 감소했으며, 총인구증가지역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유형 IV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유소년인구비율이 9.4%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V는 12.2%로 나타남

〈표 2-21〉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유소년인구 비율

(단위: %)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9.7	16.3	13.6	16.5
	유형 I(++)	22.2	18.5	15.6	18.7
	유형 II(+)	20.9	17.1	13.8	17.3
	유형 III(+)	16.0	13.3	11.4	13.5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16.7	13.6	10.8	13.7
	유형 IV(--)	14.7	12.0	9.4	12.0
	유형 V(+)	18.6	15.3	12.2	15.4

〈그림 2-20〉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유소년인구 비율 변화



〈그림 2-21〉 시도별 기간별 유소년인구 비율 변화



- 시도별로 유소년인구 비율변화를 살펴보면 전체기간(2000~2018년)의 경우 울산 19.1%, 세종 19.0%, 제주 18.4%, 광주 18.3%, 대전 18.0% 순으로 높았음

- 최근(2014~2018년) 유소년인구 비율변화는 전체 기간(2000~2018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유소년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경북 10.1%, 전남 11.1%, 부산과 강원이 11.3%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합계출산율은 전체기간(2000~2017년) 동안 유형Ⅳ가 1.54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유형Ⅱ는 1.24명으로 가장 낮았음
-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형Ⅳ의 경우 2000~2005년보다 2013~2017년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표 2-2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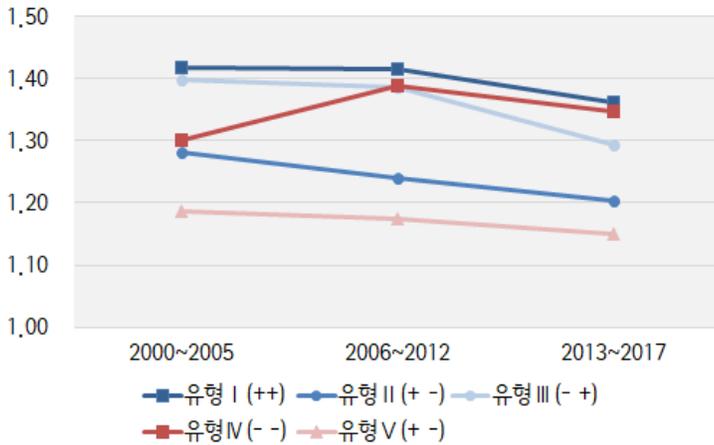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7년	2000~2017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37	1.35	1.29	1.34
	유형Ⅰ(++)	1.42	1.41	1.36	1.40
	유형Ⅱ(+/-)	1.28	1.24	1.20	1.24
	유형Ⅲ(-+)	1.40	1.39	1.29	1.36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1.24	1.28	1.25	1.49
	유형Ⅳ(--)	1.30	1.39	1.35	1.54
	유형Ⅴ(+/-)	1.19	1.17	1.15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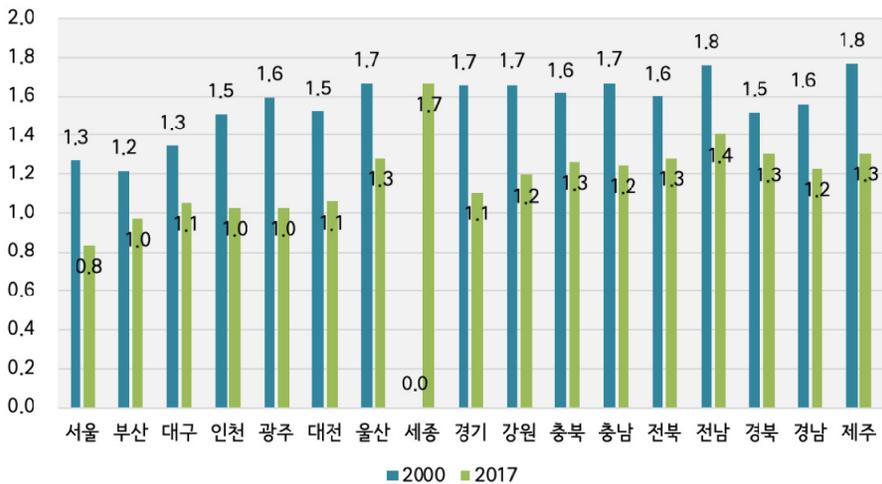
-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2000년과 2017년 단일년도를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전 지역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경기의 경우 2000년 1.7명에서 2017년 1.1명으로 감소하였고 광주도 1.6명에서 1.0명으로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 대전, 강원, 제주의 경우 2000년 대비 2017년 합계출산율이 0.5명 감소하였으며 부산, 경북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는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합계출산율 변화



〈그림 2-23〉 시도별 합계출산율 변화(2000년, 2017년)



□ **생산가능인구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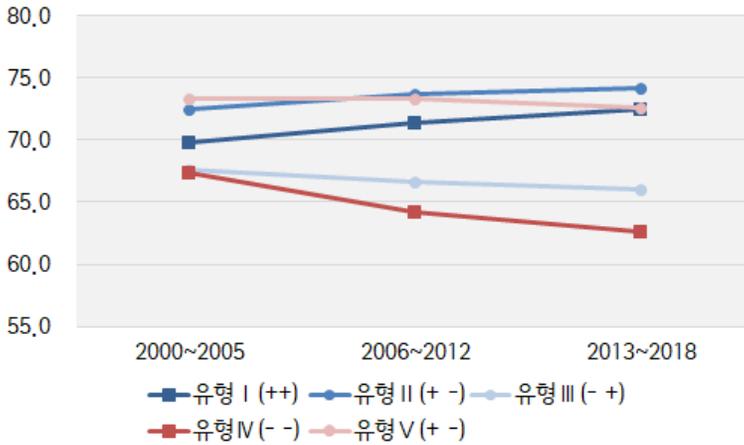
- 총인구증가지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70.5%로 2000~2005년 70.0%에서 2013~2018년 70.9%로 다소 증가하였음
 - 유형 I의 경우 2000~2005년 69.8%에서 2013~2018년 72.4%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유형 II는 72.5%에서 74.2%로 증가하였음
 - 유형 III의 경우에는 2000~2005년 67.6%에서 2013~2018년 66.1%로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감소하였음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체기간 평균은 68.9%이며 2000~2005년 70.3%에서 2013~2018년 66.1%로 약 4.2%가 감소하였음
 - 유형 IV의 경우 2000~2005년 67.3%에서 2013~2018년 62.7%로 약 4.6%가 감소했으며 유형 V는 73.3%에서 72.6%로 0.7%가 감소하였음
- 유형 I과 유형 II는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형 III, 유형 IV, 유형 V는 감소하고 있음

〈표 2-23〉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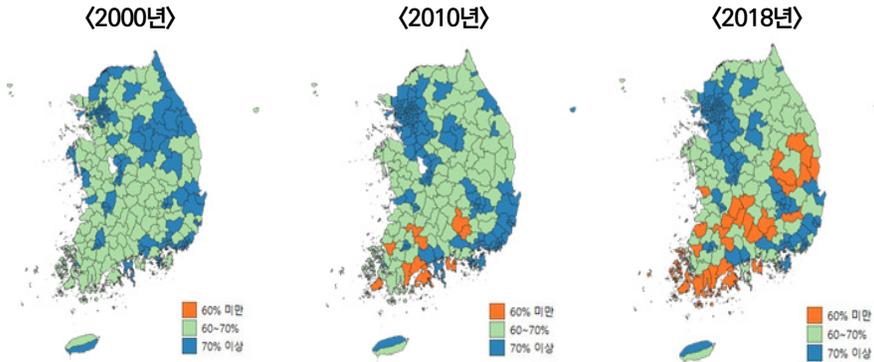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70.0	70.6	70.9	70.5
	유형 I(++)	69.8	71.4	72.4	71.2
	유형 II(+/-)	72.5	73.7	74.2	73.5
	유형 III(-+)	67.6	66.6	66.1	66.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70.3	68.8	67.6	68.9
	유형 IV(--)	67.3	64.2	62.7	64.7
	유형 V(+/-)	73.3	73.3	72.6	73.1

〈그림 2-2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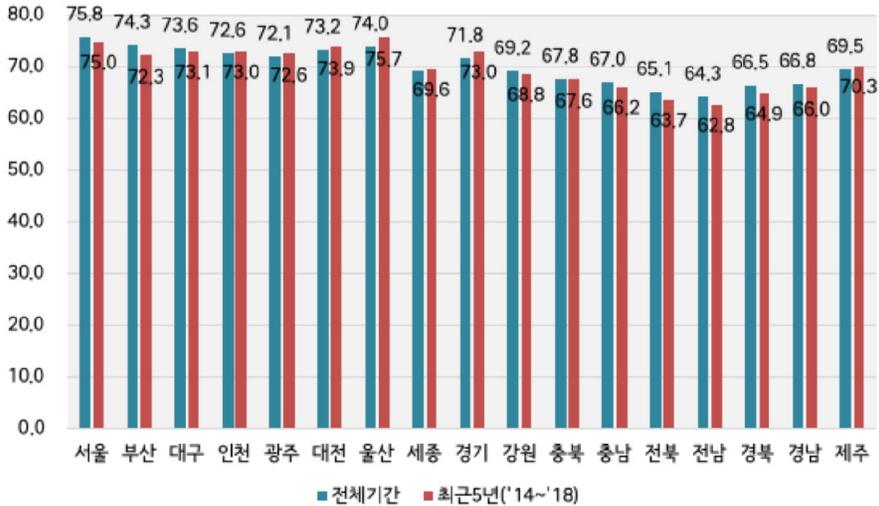


〈그림 2-25〉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변화



-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전체기간(2000~2018년)보다 최근(2013~2018년)에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더 낮아진 반면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2013~2018년)에 더 높아졌음

〈그림 2-26〉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



□ 고령인구 비율과 고령화지수

- 총인구증가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0~2018년 전체 평균 13.0%로 나타났는데 2000~2005년 10.4%에서 2013~2018년 15.5%로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유형Ⅰ의 경우 2000~2005년 8.0%에서 2013~2018년 12.0%로 높아졌는데 최근 6년간 평균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
 - 유형Ⅱ는 2000~200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평균 6.6%로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편이었고 2013~2018년 평균 12.0%로 약 5.4%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유형들보다 고령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 유형Ⅲ은 2000~2005년 평균 16.5%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2013~2018년 22.6%로 다른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전체기간 평균 고령인구비율이 17.4%이고, 2000~2005년 13.0%에서 2013~2018년 21.5%로 약 8.5%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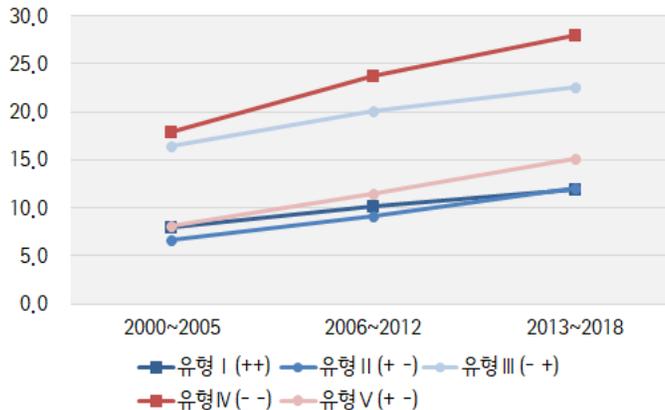
- 유형Ⅳ의 경우 2000~2005년 평균이 17.9%로 같은 시기 다른 유형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는데 2013~2018년 평균 27.9%로 약 10.0%가 증가하여 여전히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Ⅴ는 2000~2005년 평균 8.1%에서 2013~2018년에 15.2%로 약 7.1%가 증가하였음

〈표 2-24〉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고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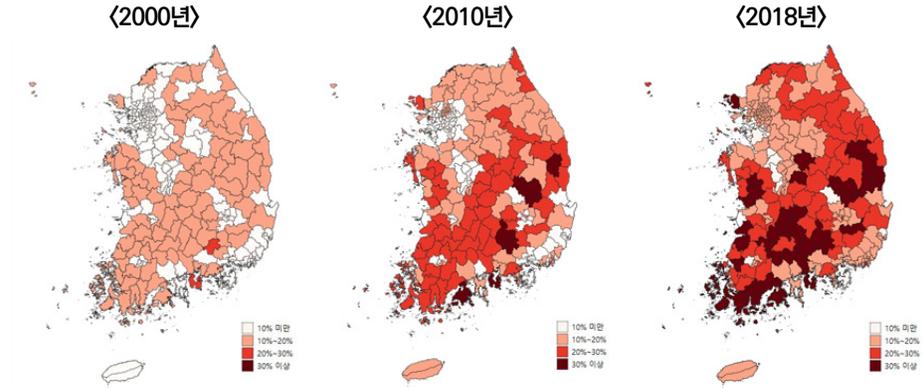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10.4	13.1	15.5	13.0
	유형Ⅰ(++)	8.0	10.1	12.0	10.0
	유형Ⅱ(+ -)	6.6	9.1	12.0	9.3
	유형Ⅲ(- +)	16.5	20.1	22.6	19.7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13.0	17.6	21.5	17.4
	유형Ⅳ(--)	17.9	23.8	27.9	23.3
	유형Ⅴ(+ -)	8.1	11.4	15.2	11.6

〈그림 2-27〉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고령인구비율 변화



〈그림 2-28〉 연도별 고령인구 비율변화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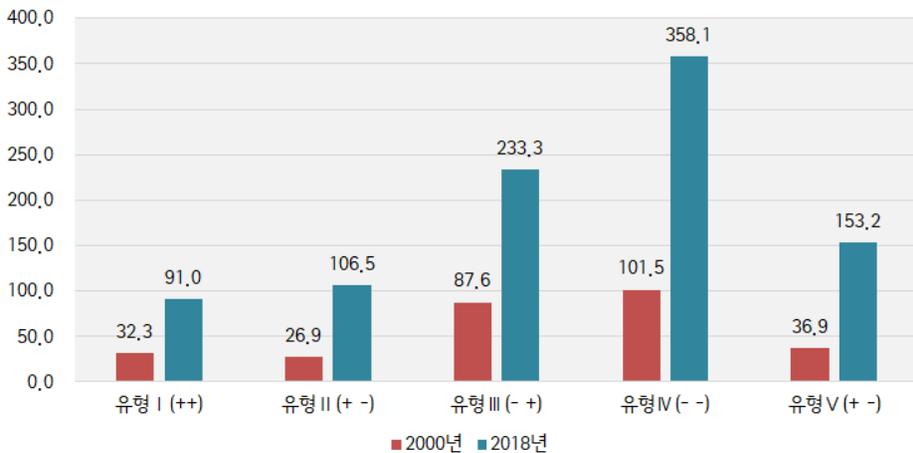
- 고령인구 비율은 전 유형에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형Ⅳ의 고령인구 비율 증가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그림 2-29〉 시도별 기간별 고령인구비율 변화



- 고령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비율인 고령화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유형 I, 유형 II와 유형 V는 각 32.3%, 26.9%, 36.9%로 양호하나 유형 III은 87.6%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형 IV는 101.5%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유형 I의 고령화지수가 유일하게 100.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0.0% 이상으로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유형 III과 유형 IV는 고령화지수가 각 233.3%와 358.1%로 심각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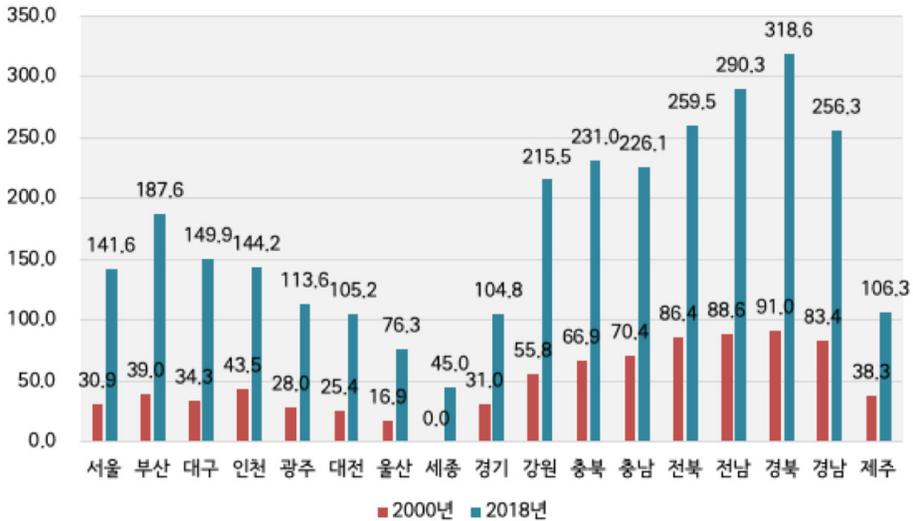
〈그림 2-30〉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고령화지수 비교



- 시도별 고령화지수를 2000년과 2018년 단일년도 비교하면, 2000년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와 경기, 제주는 40.0% 미만으로 고령화지수가 낮았는데 2018년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와 경기, 제주 모두 고령화지수가 100.0%를 넘어섰음
-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은 2000년 고령화지수가 50.0% 이상으로 특광역시

나 경기, 제주보다는 높았지만 100.0%미만으로 낮았지만 2018년 현재 200.0%를 넘어서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냄

〈그림 2-31〉 시도별 고령화지수 변화 비교



□ 20~30대 젊은인구 비율

- 20~30대 젊은인구 비율을 보면 총인구증가지역의 경우 2000~2018년 전체기간동안 평균 29.1%로 전체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000~2005년 32.8%에서 2013~2018년 25.9%로 약 7%가 감소하였음
- 유형 I은 2000~2005년 평균 35.2%에서 2013~2018년 27.8%로 약 7.4%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유형 II는 평균 35.6%에서 28.7%로 약 7.9%, 유형 III은 평균 27.6%에서 21.2%로 약 6.5% 감소하였음
- 전반적으로 20~30대 젊은인구 비율이 감소했지만 특히, 유형 II의 젊은인구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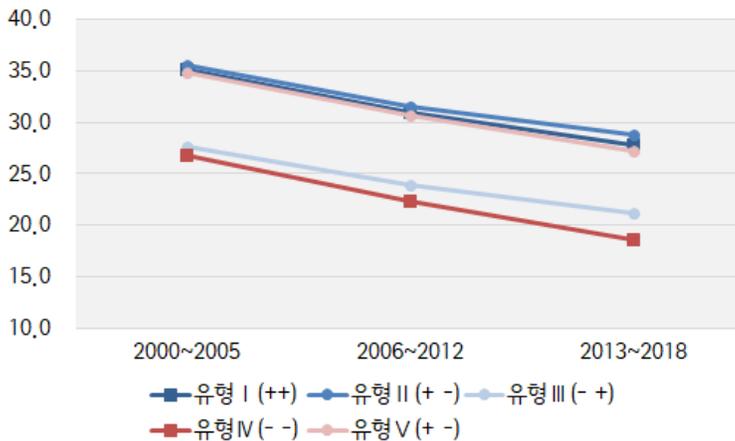
- 총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전체기간 평균은 26.7%로 총인구증가지역보다 낮게 나타났고 2000~2005년 평균 30.8%에서 2013~2018년 22.9%로 약 8.0% 감소하였음
- 유형Ⅳ는 2000~2005년 평균 26.8%에서 2013~2018년 18.5%로 약 8.3%가 감소했고, 유형Ⅴ는 34.8%에서 27.3%로 약 7.5% 감소하였음

〈표 2-25〉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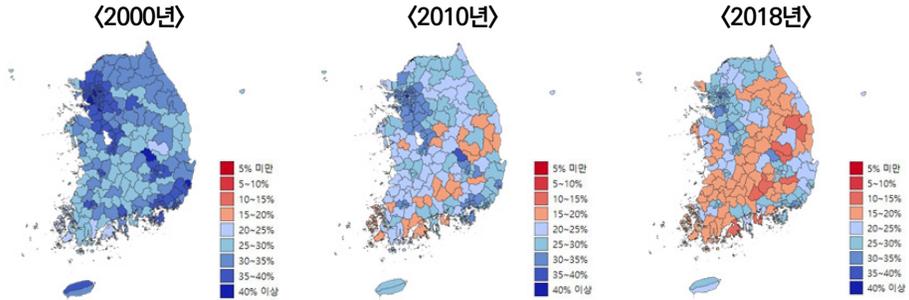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유형	2000~2005년	2006~2012년	2013~2018년	2000~2018년
총인구 증가지역	평균	32.8	28.8	25.9	29.1
	유형Ⅰ(++)	35.2	30.9	27.8	31.3
	유형Ⅱ(+ -)	35.6	31.6	28.7	31.9
	유형Ⅲ(- +)	27.6	23.9	21.2	24.2
총인구 감소지역	평균	30.8	26.5	22.9	26.7
	유형Ⅳ(--)	26.8	22.3	18.5	22.5
	유형Ⅴ(+ -)	34.8	30.7	27.3	30.9

〈그림 2-32〉 지역인구감소 유형별 기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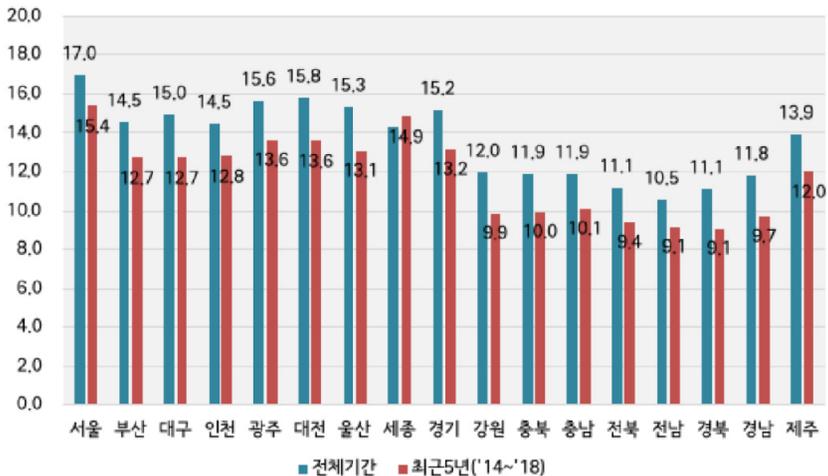
〈그림 2-33〉 연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변화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 시도별 젊은인구 비율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역에서 전체기간보다 최근 5년(2014~2018년)의 비율이 감소하였음
 - 특히 젊은인구 비율이 전체기간 대비 최근 5년 감소한 지역으로는 경남 (4.4%), 경북과 전북(4.2%), 대구, 충북, 제주(각 4.0%)가 있음

〈그림 2-34〉 시도별 20~30대 젊은인구 비율 변화



제4절 지역인구감소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1. 총인구증감량과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 자연증감량 감소보다는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박진경·김상민, 2017; 박진경, 2019a와 b)
 - 2000년 대비 2017년 인구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 자연증감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0.952와 0.528이고, 2013년 대비 2017년의 사회증감량 상관계수는 0.963으로 상관관계가 더 커짐
 - 최근(2013년 대비 2017년) 총인구증감량과 자연증감량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340으로 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별로 없음

〈표 2-26〉 총인구증감량과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구분		인구증감량	자연증감량	사회증감량
2000~2017년	인구증감량	Pearson상관계수	1	0.528***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자연증감량	Pearson상관계수	0.528***	1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사회증감량	Pearson상관계수	0.952***	0.247***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2013~2017년	인구증감량	Pearson상관계수	1	0.340***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자연증감량	Pearson상관계수	0.340***	1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사회증감량	Pearson상관계수	0.963***	0.123***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주: *는 90%수준에서, **는 95% 수준에서, ***는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2. 합계출산율과 자연증감량 및 사회증감량의 상관관계 분석

- 합계출산율은 인구증감량이나 인구증감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음
 - 합계출산율과 인구증감률과의 피어슨상관계수는 2013~2017년 자료의 경우 0.290, 2017년 자료의 경우 0.322여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합계출산율과 인구증감량과의 관계 역시 2013~2017년 자료의 경우 0.250, 2017년 자료의 경우 0.254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음
- 합계출산율과 자연증감량과의 피어슨상관계수는 -0.15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합계출산율과 총인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호를 띠고 있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은 총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음

〈표 2-27〉 인구증감량과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

구분		합계출산율 (2013~2017년)	합계출산율 (2017년)
인구증감률 (2013~2017년)	Pearson상관계수	0.290***	0.322***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인구증감량 (2013~2017년)	Pearson상관계수	0.250***	0.254***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총인구 (2018년)	Pearson상관계수	-0.319***	-0.346***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자연증감량 (2013~2017년)	Pearson상관계수	-0.152***	-0.206***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사회증감량 (2013~2017년)	Pearson상관계수	0.327***	0.333***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주: *는 90%수준에서, **는 95% 수준에서, ***는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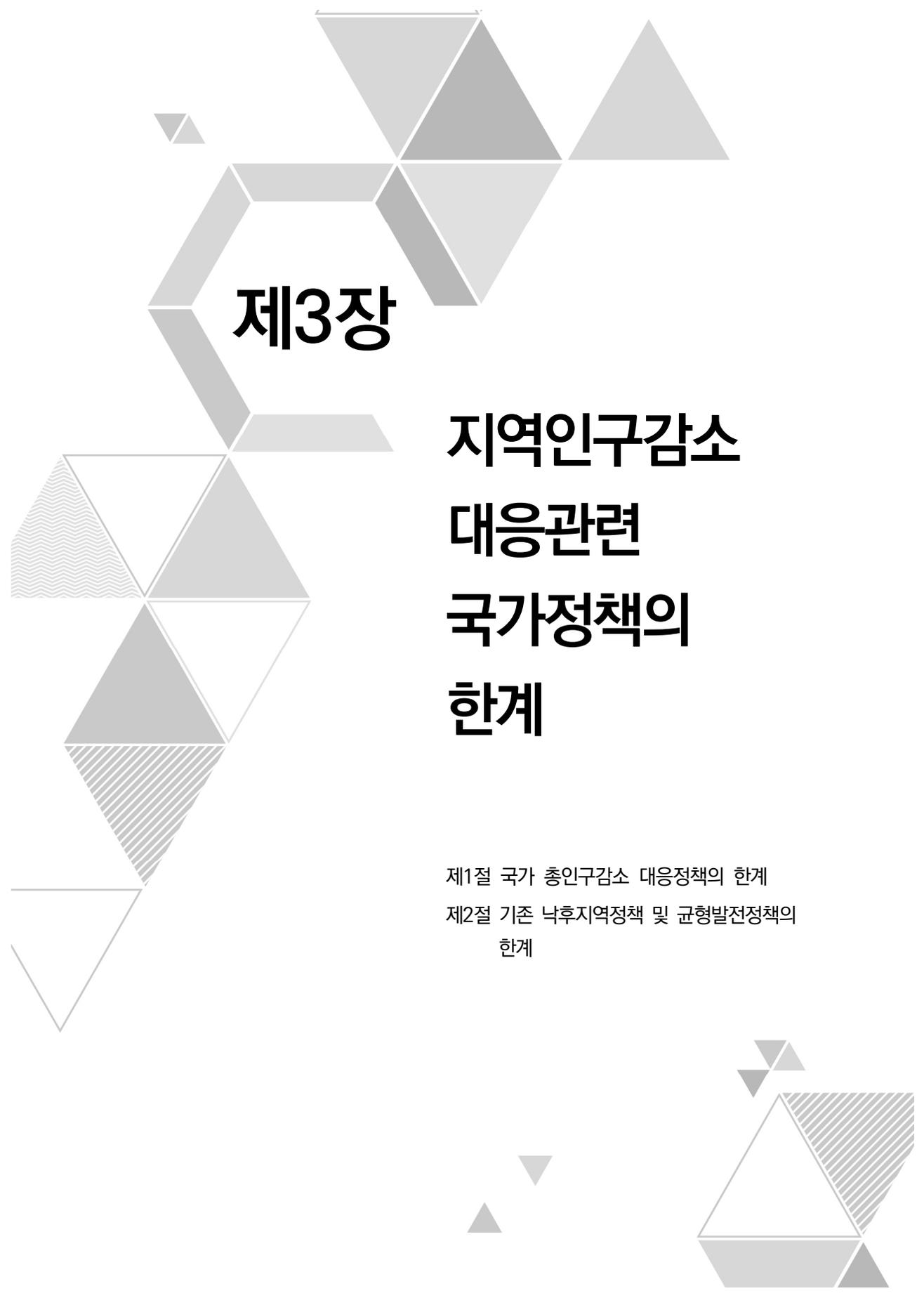
3. 20~30대 젊은인구 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 자연증감량은 합계출산율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 (-0.265)가 별로 없고, 고령인구 증감량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0.889)
- 사회증감량과 생산가능인구 증감량 및 20~30대 젊은인구의 순이동량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서 지역의 인구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젊은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사회증감량과 20~30대 젊은인구의 순이동량과의 피어슨상관계수는 0.944이고 생산가능인구 증감량은 0.922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28〉 20~30대 젊은인구 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의 상관관계

구분		자연증감량 (2000~2017년)	사회증감량 (2000~2017년)
유소년인구 증감량 (2000~2018년)	Pearson상관계수	-0.499***	0.649***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생산가능인구 증감량 (2000~2018년)	Pearson상관계수	0.572***	0.922***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고령인구 증감량 (2000~2018년)	Pearson상관계수	0.889***	0.255***
	유의확률(양쪽)	0.000	0.000
20~30대 젊은인구 증감량 (2000~2018년)	Pearson상관계수	-0.089	0.900***
	유의확률(양쪽)	0.183	0.000
20~30대 젊은여성인구 증감량(2000~2018년)	Pearson상관계수	-0.163**	0.861***
	유의확률(양쪽)	0.014	0.000
합계출산율 평균 (2013~2017년)	Pearson상관계수	-0.265***	
	유의확률(양쪽)	0.000	
20~30대 순이동량 (2000~2018년)	Pearson상관계수		0.944***
	유의확률(양쪽)		0.000

주: *는 90%수준에서, **는 95% 수준에서, ***는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제3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가정책의 한계

제1절 국가 총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한계

제2절 기존 낙후지역정책 및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제3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가정책의 한계

제1절 국가 총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문제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경제활력대책회의 산하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이라 할 수 있음
 -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⁴⁾은 대표적인 중앙정부 인구정책으로 전국 공통의 출산·양육, 보건·사회복지 위주 ‘출산을 제고정책(완화)’이라 할 수 있음
 - 2019년 3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4)는 9월 현재, 4대 전략 및 20개 정책과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2019.9.18.)하였는데, 이는 효율성 위주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적응)’이라 할 수 있음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한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정책, 브릿지플랜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⁵⁾이 1.08명으로 낮아진 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고,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2010년 간 추진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11~2015년 간 추진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브릿지 플랜 2020)에서는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5)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인구학적으로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동안 낳을 평균자녀수를 의미함

-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이 수립되어 2016년부터 추진 중(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1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아동·가족, 양육·보육·돌봄으로 구분 가능하며, 보건·사회정책 위주의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층적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 이 중에서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
 - ※ 지방자치단체간 인구가동, 사회적 인구증감, 인구유입과 유출 등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Zero-Sum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에 포커스
 - 2016년을 기준으로 공통사업 중에서 약 44.3%, 자체사업의 약 69.4%를 차지하는 사업⁶⁾이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비 지원, 기저귀 분유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 임신·출산·보건·양육지원 정책에 한정(박진경·김상민, 2017)

〈그림 3-1〉 저출산 대책의 핵심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6) 공통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단독사업을 의미

-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 1.05명(OECD 최하위 수준), 2018년부터는 0.97이 될 것으로 전망
 - 2014년에 이미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19위, 세계 최하위(CIA, 2014)
 - 만혼·비혼 증가와 합계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인구 증가로 2019년부터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발생(통계청, 2019)
 -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코리아신드롬”이라 하며 한국을 “인구소멸국가 1호”로 언급(2006)

〈그림 3-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데드크로스 발생



자료: 통계청(2019.3),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 전국 공통의 출산율 제고사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저출산 대책은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출산율 제고’사업으로 지역의 특성 반영에는 한계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시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이어서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도 미흡
- 또한 임신·출산을 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초저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해당
-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9에서 2017년 0.99로 감소, 특광역시 의 경우에는 2000년 1.36에서 2017년 0.97로 감소하여 초저출산인 반면 비수도권이거나 비특광역시이거나 군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 각각 1.34, 1.37, 1.42로 저출산 상태이기는 하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
- 전국적으로 20~30대 젊은 여성인구는 2000년 대비 2016년에 1.5백만명이 감소했으나 수도권의 젊은 여성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젊은 여성인구의 54.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표 3-1〉 지역별 합계출산율

구분		합계출산율			
		2000년	2010년	2017년	2013-2017(평균)
합계		1.48	1.23	1.05	1.17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1.49	1.21	0.99	1.12
	비수도권	1.56	1.38	1.23	1.34
특광역시/비특광역시	특광역시	1.36	1.12	0.97	1.09
	비특광역시	1.64	1.44	1.25	1.37
시/군/구	시	1.61	1.35	1.18	1.31
	군	1.63	1.50	1.32	1.42
	구	1.34	1.09	0.95	1.06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표 3-2〉 인구규모별·성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명, 천명)

구분		성비(명)			20-30대 여성인구수			20-30대 여성인구 비율		
		2000	2016	증감	2000	2016	증감	2000	2016	증감
전국	합계	99.2	100.2	1.0	8,309	6,765	-1,544	17.6%	13.3%	-4.3%
	수도권	98.7	100.7	2.0	3,711	3,712	2	7.9%	7.3%	-0.6%
	비수도권	99.6	99.6	0.1	4,598	3,052	-1,546	9.8%	6.0%	-3.8%
자치구	소계	99.3	102.0	2.6	4,164	3,193	-971	18.5%	14.3%	-4.2%
	특별시	99.6	103.6	4.1	1,953	1,531	-421	18.9%	15.4%	-3.5%
	광역시	99.2	100.7	1.5	2,211	1,661	-550	18.1%	13.4%	-4.7%
도시형	소계	98.8	100.0	1.2	1,449	1,252	-197	18.9%	14.1%	-4.8%
	50만 이상	98.9	100.5	1.6	991	868	-123	19.0%	14.5%	-4.5%
	50만 미만	98.7	99.1	0.4	458	384	-74	18.7%	13.4%	-5.2%
농촌형	소계	100.0	98.7	-1.3	624	409	-215	13.1%	9.2%	-3.9%
	5만 이상	99.5	98.6	-1.0	379	275	-105	13.8%	10.0%	-3.9%
	5만 미만	100.7	99.0	-1.7	245	134	-110	12.2%	8.0%	-4.2%
도농 복합형	소계	98.7	98.1	-0.7	2,072	1,911	-162	17.0%	12.6%	-4.4%
	50만 이상	98.1	98.1	0.1	735	791	56	18.3%	13.5%	-4.8%
	50만 미만	99.1	98.1	-1.0	1,337	1,119	-218	16.4%	12.0%	-4.4%

주: 1) 성비= 여성인구수/남성인구수 × 100

2) 젊은여성(20~30대) 인구비율 = 20~30대 여성인구수/총인구수 × 100

3)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 국가인구정책과 지방인구정책의 괴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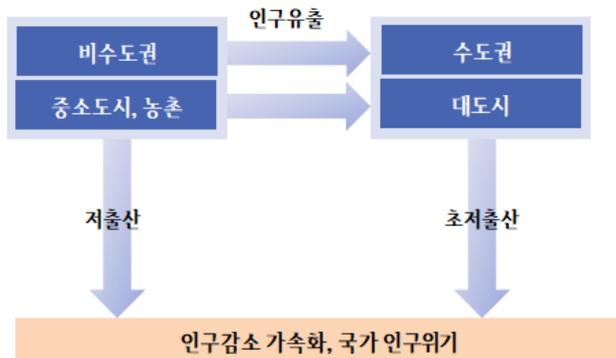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과 박진경(2019)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감량 감소보다는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0년 대비 2017년 인구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 자연증감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0.952와 0.528이고, 2013년 대비 2017년의 사회증감량 상관계수는 0.963으로 상관관계가 더 커짐
 - 합계출산율은 인구증감량이나 인구증감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사회증감량과 20~30대 순이동량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0.94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출산율 제고정책에 따라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구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젊은인구의 사회적 유출 대응까지 도모하고 있으나 중앙에서는 지역인구의 사회유출을 제로섬게임으로 인식,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자연증감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증감량 변화는 0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구정책과 괴리가 발생

□ 지방인구위기는 국가의 인구위기로 귀결

- 그러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의 출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초저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어서 국가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국가전체 차원에서의 총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대도시지역으로의 사회적 유출 및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국가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그림 3-3〉 지방과 국가의 인구위기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2. 경제활력대책회의 인구정책 TF의 한계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2019.9.1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더불어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경제활력대책회의 산하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이라 할 수 있음
 - 2019년 3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4)는 9월 현재, 4대 전략 및 20개 정책과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2019.9.18)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2019.9.18)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정책(적응)’이라 할 수 있음
 -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의 4대 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 고령인구 증가 대응으로 인구구조변화 ‘적응력(Adaptability) 강화’ 정책임

□ 효율성 위주의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 중심의 시책이라고는 하나, 효율성 위주의 중앙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
 - 10개 작업반 중에서 지자체 정책과 해당되는 지역반의 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 전략의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는 공공생활서비스 체계 개편,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으로 한정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저출산대책과 마찬가지로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은 국가 전체의 총인구 관리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구정책과 괴리가 발생

〈그림 3-4〉 인구정책 TF의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4대 핵심전략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생산연령인구 확충		1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고용반) 2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고용반) 3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외국인정책반)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저출산 완화	4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저출산고령사회위)
	학령인구 감소 적응	5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교육반) 6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교육반)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	7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국방반) 8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국방반)
	지역활력 제고	9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지역반) 10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지역반) 11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지역반)
고령인구 증가 대응		12 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산업반) 13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산업반) 14 주택정책 방향 전환(국토반) 15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국토반) 16 주택연금 활성화(금융반) 17 퇴직·개인연금 활성화(금융반)
복지지출 증가 관리		18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재정반) 19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반) 20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복지반)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9),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2절 기존 낙후지역정책 및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1.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낙후지역 지원정책

□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정책

- 전후 우리나라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성장거점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지역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집적이익을 분산시키고 지역격차를 교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성장거점 중심의 불균형적 국토개발에 따른 지역격차문제,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분권, 포용,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참여정부 이후 정책의 기조와 철학은 달랐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 속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왔음(김현호·박진경, 2019)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낙후지역의 발전과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 발전시책,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 및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 등이 대표적인 시책에 해당됨
 - 아울러 지역 고유자원의 차별화된 상품화를 통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70개 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활력 사업, 지역의 특화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도 이 부류에 속함

〈참여정부 신활력지역 사업〉

- 낙후지역의 저발전의 원인을 미약한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로 지목
- 인구감소 저발전 7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당 3년간 90~60억원 지원
-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할당하는 Family Doctor제 도입

〈표 3-3〉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낙후지역 지원 관련정책

구분	주요 시책
노무현 정부	- 70개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 9년간 30-15억원씩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소득창출 도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을 통해 저발전 지역의 발전 도모
이명박 정부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저발전 지역의 발전 도모 - 도시활력지역, 일반농산어촌 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4원화 시책 추진
박근혜 정부	- 취약지역 구조개선 프로젝트인 농촌형, 도시형 새들마을 사업 추진 -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인 행복생활권 시책추진

자료: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현재의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

-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정책은 성장촉진지역 사업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시·군 70개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균특법 제2조6호에 의거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점수가 낮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선정
- 2019년 현재 지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인구(인구밀도와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지방소득세 및 GRDP), 재정(재정력지수), 접근

- 성(지역접근성 및 생활SOC 접근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변경된 지표로 평가 결과, 예천군, 태안군, 창녕군, 나주시가 제외되고, 정선군, 공주시, 안동시, 영암군이 신규로 지정됨

2.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 성장촉진지역사업의 내용적 한계

- 기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지역사업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개설 등 전형적인 개발시대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의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복지, 생활서비스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해 발생
 -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자리, 생활환경 및 의료, 복지, 교육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 소홀히 취급되어 지역개발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워짐
 - 참여정부 시절 초기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신활력지역 사업은 저발전의 원인을 소득 및 일자리 부족에 두고,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소프트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균특회계 사업은 그렇지 못함
- 또한 국토공간정책과 달리 균특법상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집행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계획추진의 실효성은 높은 반면, 한번 계획된 내용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음
 - 때문에 소프트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균특회계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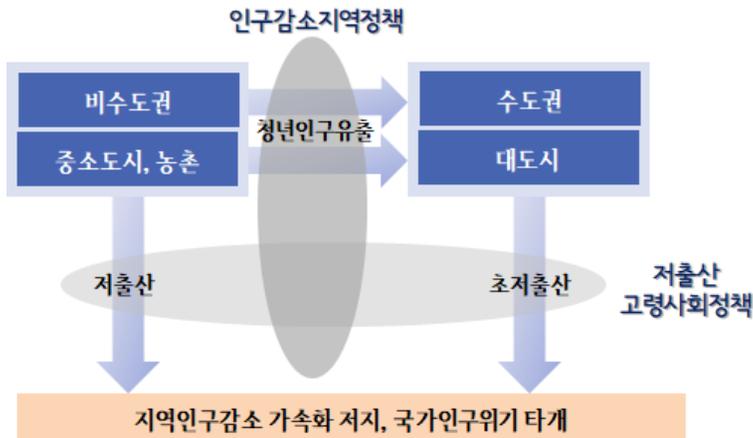
□ 지역인구감소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

-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총인구증감, 자연증감, 사회증감의 세 요소를 고려한 지역인구감소 유형을 분석하면, 2000년 대비 2017년에 총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은 유형 IV와 유형V임(〈표 2-3〉 참조)
 - 총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유형 IV는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이 모두 감소하여 총인구도 감소하는 가장 심각한 지역에 해당
 - 유형 V는 자연증감량은 증가하지만 사회증감량이 더 많이 감소하여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
- 2000~2017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를 포함하는 229개 지역 중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62.4%(143개)
 - 가장 심각한 유형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자연 및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유형 IV(76개 지자체가 해당하며, 군지역이 59개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임
- 00-17년 대비 최근 5년 간 총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43개 → 145개로 증가(박진경, 2019.8)
 - 00-17년에 유형 II에 속한 지자체는 22개였으나 최근에는 7개로 감소, 유형 III은 9개에서 23개로 증가
 - 유형 IV는 76개에서 53개로 감소, 유형 VI은 0개에서 25개로 증가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과 박진경(2019.8)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감량 감소보다는 사회증감량 감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0년 대비 2017년 인구증감량과 사회증감량과 자연증감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0.952와 0.528이고, 2013년 대비 2017년의 사회증감량 상관계수는 0.963으로 상관관계가 더 커짐(〈표 2-26〉 참조)
 - 합계출산율은 인구증감량이나 인구증감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고령인구증감량과 상관관계가 높음(0.889)
 - 사회증감량과 20~30대 순이동량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서(0.944) 지역

의 인구위기대응을 취해서는 젊은인구의 유입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지역인구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젊은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인구위기대응대책은 개발시대, 고착화된 인프라사업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
 -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주민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한 대책 필요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정책은 인구유출의 원인, 즉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과 관련되므로 이 원인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 중심이어야 함

〈그림 3-5〉 지방과 국가의 인구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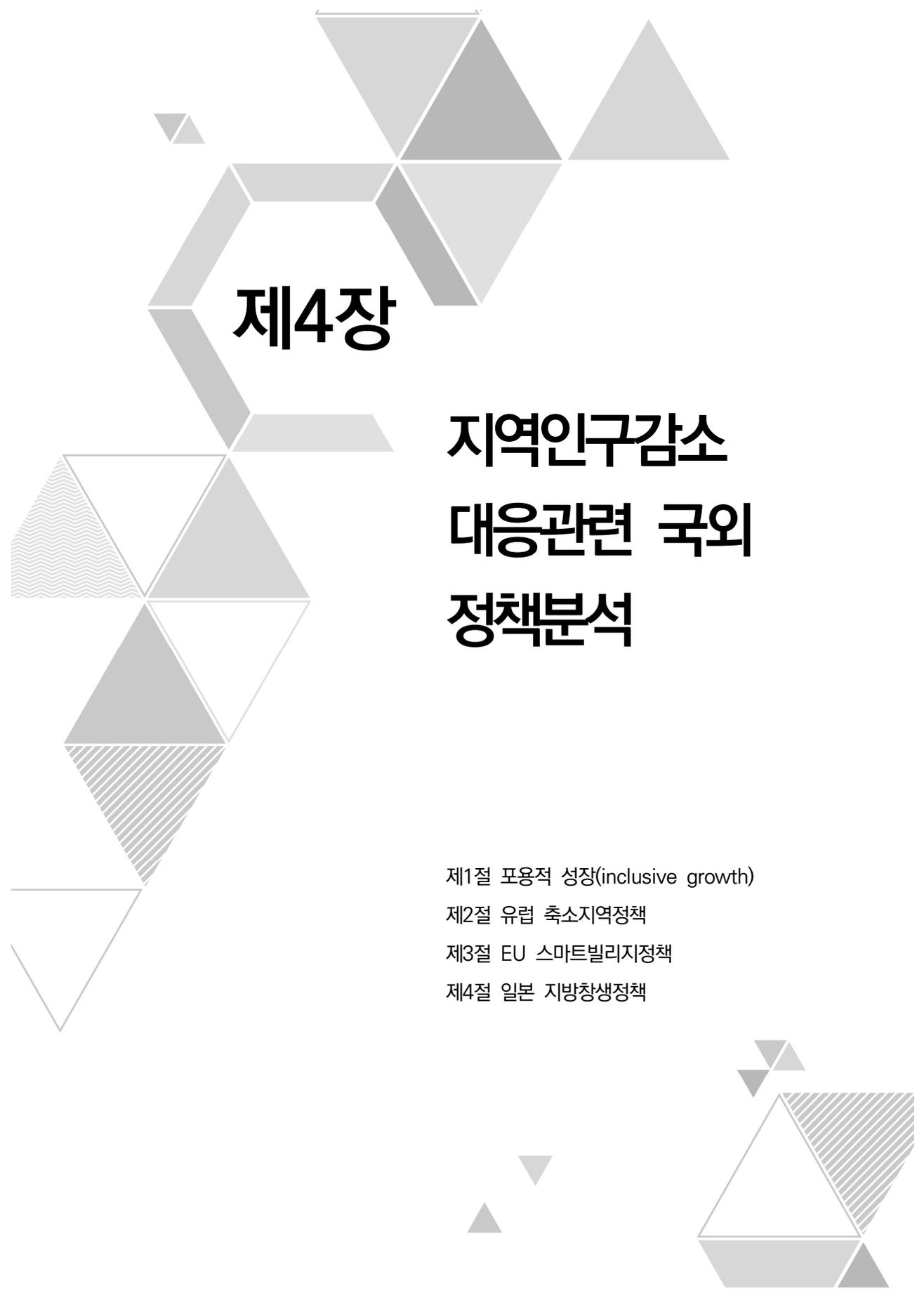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와 접근방식이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구정책이 필요함
 - 현재 지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등의 인구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교육복

지, 일자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반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출산·양육지원정책과 지역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역발전정책 추진 필요

- 지역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포함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대응,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정책분석

제1절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제2절 유럽 축소지역정책

제3절 EU 스마트빌리지정책

제4절 일본 지방창생정책

제 4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정책분석

제1절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1.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 논의 배경

- 최근 UN은 국제사회발전을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보다 종합적이며 통합과 전체론적 접근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으로 전환
 - UN은 SDG를 ‘전례 없는 기회가 중요’하며 ‘굉장히 야심차고 전환적 비전’이라고 하며,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어젠다의 17개 SDG와 그와 연관된 169개 목표를 제시’, 포용성이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이 되고 있음(UN, 2015)
- 개발시대 격차문제 해결 없이는 더 나은 발전은 없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임
 - 대도시 및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 하에 최근 EU 지역정책에서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개념도 새롭게 등장
- 2000년대 초부터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 논의가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인 요인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들 수 있음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으로 자유시장적 경제체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 논의가 증폭되었고, 사회의 양극화 등 격차문제가 중요 이슈가 되었음
 - 특히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를 앞세운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시발점이 되었음(김현호, 2019)

- 포용적 성장 논의가 확대되면서 World Bank, OECD, UN-HABITAT 등 국제 기구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발히 제시
 - 미국, 유럽,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G20 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포용적 성장’이 정책적 화두가 된 이유는 IMF가 2011년부터 발표한 일련의 연구결과에 기인하는 바가 큼(김현호, 2019)

〈표 4-1〉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의 정의

구분	정의
World Bank(2009)	- 포용성장이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해 또 다른 성장의 방식을 의미하며, 기존의 공유성장개념은 소득분배만을 강조한 반면, 포용성장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와 균등한 배분을 달성
OECD(2018)	- 포용적 성장은 경제적 성장의 수혜가 널리 공유될 뿐 아니라 성장의 과정 자체가 저소득층, 저기업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의료와 같은 비소득 기반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방식으로 빈곤감,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 포용달성 방안 :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사회적 참여
World Economic Forum (2015)	- 모든 경제 분야에서 근로자 대부분에게 생산적인 고용기회를 주고, 빈곤을 감소시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산출물의 성장을 지칭 - 보다 많은 사람과 보다 많은 지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받게 하는 성장
RSA(Inclusive Growth Commission)(2017)	- 성장의 혜택과 기여에 가능한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가 가능케 하는 성장
European Commission (2017)	-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결속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고용, 기술교육 투자, 빈곤퇴치, 노동시장 합리화, 교육훈련, 사회보호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IMF(2017)	- 성장을 추세와 분배의 관점에서 균등성 개선에 기여하는 성장으로 정의
ADB(2014)	- 광범위한 성장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모든 계층(특히 저소득층)이 창출된 기회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을 포용성장으로 정의

자료: 김현호(2019),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의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OECD의 포용적 성장

- OECD(2014)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을 그동안 도외시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성장의 방식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음
 - 포용성장을 제시하는 목적은 빈곤의 감소, 불평등의 해소, 참여의 확대, 지속 가능성 추구 등임
 - 동시에 소득(income), 재산(wealth), 기회(opportunities) 측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
-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같은 소득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역들을 고려하여 성장하는 방식을 제시
 - 포용적 성장을 위한 프레임에서 경제적 성장이란 목표이자 다차원적인 이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실질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 조세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이 중요함을 언급
- 아울러 OECD(2018)은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실의 형평성 있는 공유와 지속(sustain and share equitably the gains of growth)이 중요함을 지적(김현호, 2019)

〈표 4-2〉 OECD의 포용적 성장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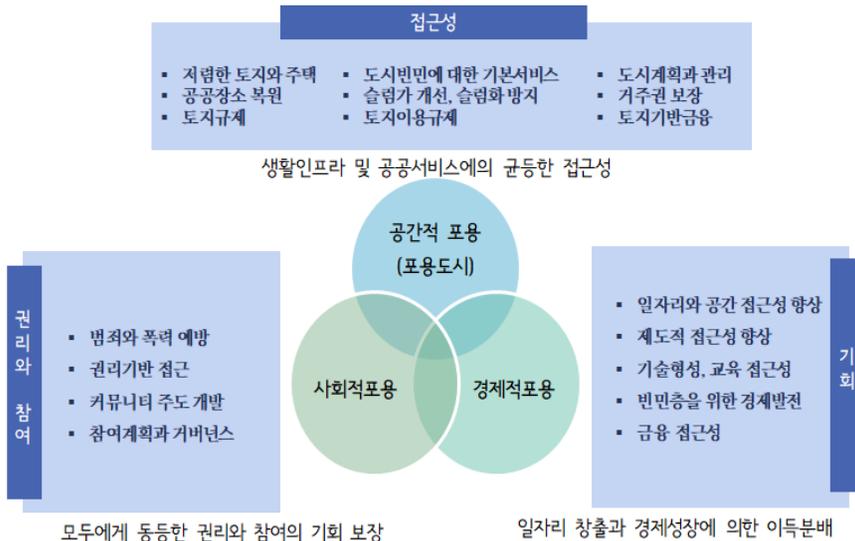
'포용'의 개념	그동안 도외시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성장 방식(OECD, 2014)
포용적 성장 개념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 의료 같은 소득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역들을 고려하는 성장방식
포용적 성장 목표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
추진전략	경제적 성장= 목표, 다차원의 이슈들이 다루어지는 과정 자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실질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 조세개혁, 사회안전망구축 등

자료: OECD(2014), 「Report on the OECD Frame Growth」. Paris: OECD.

3. 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

- World Bank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빈곤 종식과 번영공유(promoting shared prosperity)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의 방식으로서 포용적 성장을 제시(World Bank, 2009와 2015)
 -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와 균등한 배분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
-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포용,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의한 이득의 분배를 의미하는 경제적 포용, 지역의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공간적 포용을 강조
 -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결정에 대한 공동체 참여 확대, 지역역량강화,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

〈그림 4-1〉 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



제2절 유럽의 축소지역정책

1. 유럽의 축소지역 논의

□ 축소 지역(Shrinking Regions)의 의미

- 지역 축소(Shrinkage)현상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단일화된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주로 인구학적 측면과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이하 축소지역에 관해서는 Ilona Raugz et al., 2017 참조)되어 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축소’ 는 인구의 감소를 뜻하는 표현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로 발생되며,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탈과 실업률의 증가와 정주환경 열악 등이 원인으로 작용
 -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출산율 감소와 남아있는 인구의 노후화로 연결됨
 - 특히 농촌지역은 노동의 집약과 고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심 지역으로의 우수인력 인구유출현상이 심각하며 구조적으로 인구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를 말함
 - 유럽 국가들은 인구학적 쇠퇴(Demographical Decline) 현상에 크게 주목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도시로 정의하기도 함
- 즉 유럽 축소지역에 대한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의 징후로서, 인구 감소, 경제 침체, 고용 감소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뜻함
- 축소지역 논의는 이후 스마트 축소(Shrink Smart) 개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환
 - 농촌 지역 쇠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에 의존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쇠퇴된 도시의 재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후하고 쇠퇴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덜 개발하고 불필요한 도시 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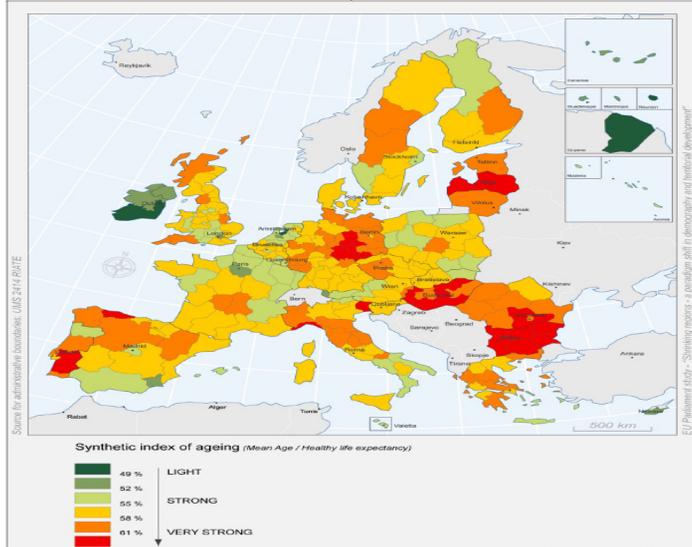
(Shrink Smart)를 지향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변화

- ‘스마트 축소’를 지향하는 정책은 덜 개발하는 것(to do nothing)을 지향함
- 즉, 건물 토지 사용을 적게 하고 도시의 인구와 고용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이 아닌 축소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농촌지역의 내생적인 잠재력(endogenous potential)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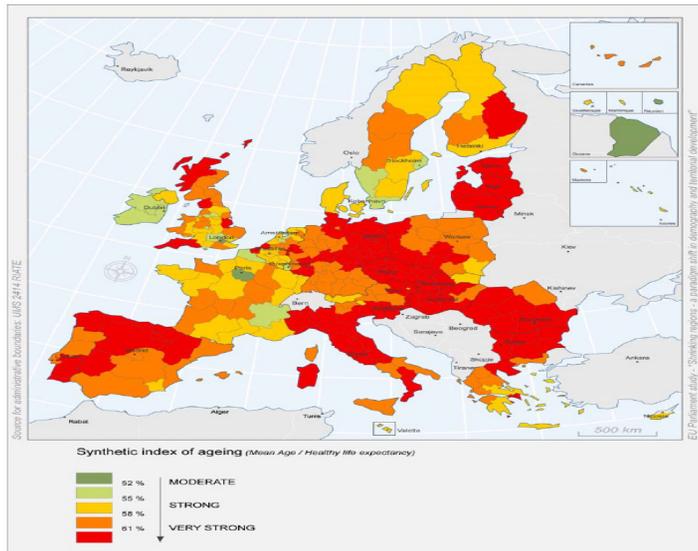
-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럽에서는 최근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
 - EU는 일본, 러시아와 함께 향후 인구증가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EU, 2008)
- 고령화의 심화
 - 고령화 속도 또한 일본 다음으로 빨라, 2030년까지 EU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되며(OECD, 2014: 44), 노동인구는 12% 감소할 것(OECD, 2012: 3)으로 예상
- 지역별 고령화 지수 지도를 보면 2005년에는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령화 지수 값이 50~60% 사이로 무난한 상태
 - 그러나 2030년에는 고령화 지수값이 크게 증가하여 유럽 지역의 대부분이 지수값 60%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한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EU, 2008)

〈그림 4-2〉 유럽 지역별 고령화 지수(2005년)



자료: EU(2008: 40)

〈그림 4-3〉 유럽의 지역별 고령화 지수(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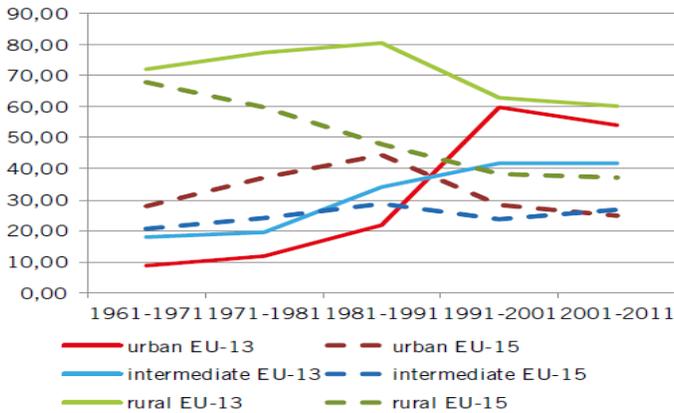


자료: EU(2008: 41)

□ 축소지역의 확대

- 유럽은 2011년부터 유럽전역의 40% 이상이 인구감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EU-13 국가들(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중 중·동부 유럽의 60%는 인구감소 현상을 경험
 - EU-15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중 서유럽 국가들은 농촌 지역의 35% 이상이 축소현상을 경험

〈그림 4-4〉 EU-13과 EU-15 국가들의 축소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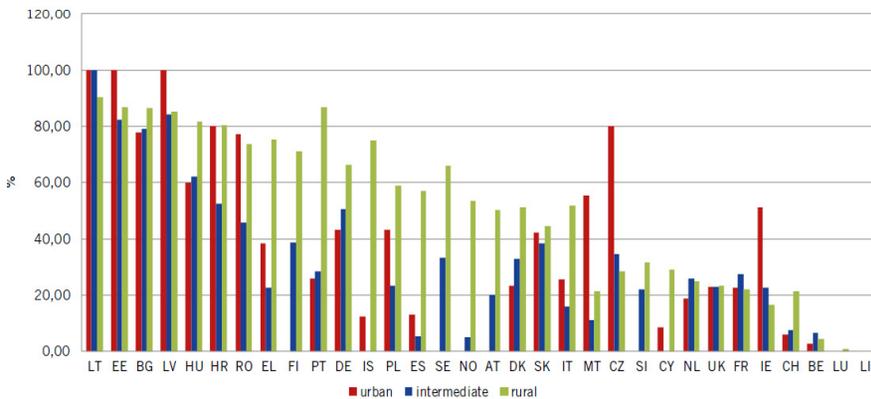


* 주: 빨간색 선(도시지역), 파란색 선(도시-농촌 중간지역), 초록색 선(농촌지역)
 **EU-13 국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포함
 ***EU-15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 포함

- 국가별 지역 축소현상 수준을 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의 축소 비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
 - 리투아니아(Lithuania), 에스토니아(Estonia), 불가리아(Bulgaria), 라트

- 비아(Latvia),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의 경우 도시지역의 축소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
-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도시지역의 축소비율은 100%에 달하고 있어, 인구 감소 수준이 심각
 - 반면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축소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또한 농촌지역의 축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5〉 2001-2011 유럽의 축소지역(도시 및 농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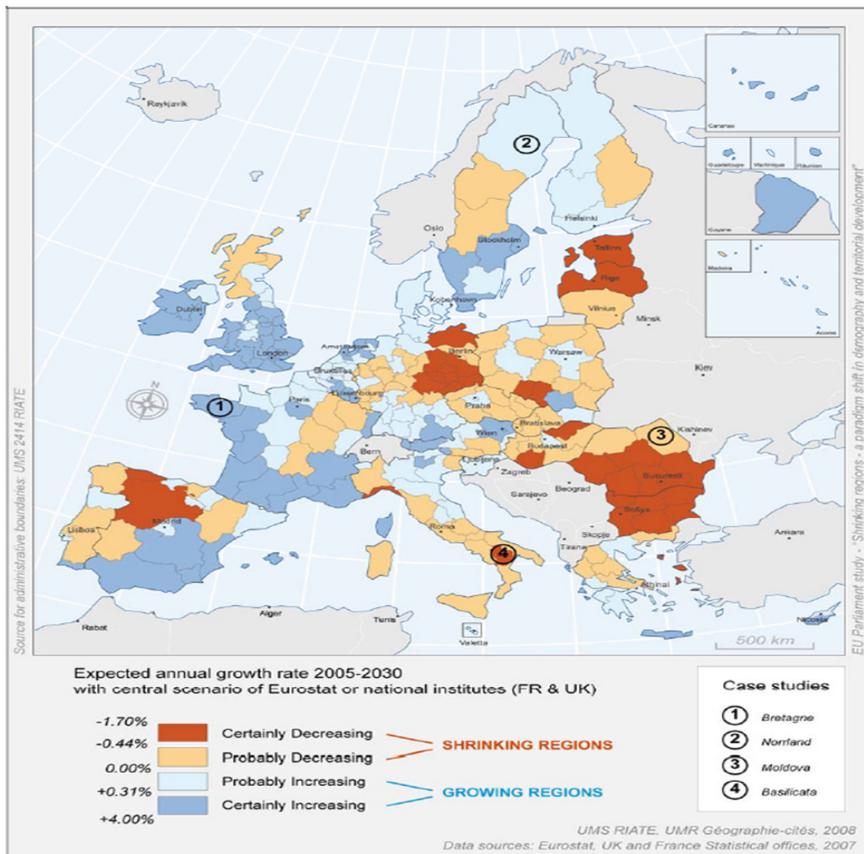


- 도시 및 농촌지역간 상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역 축소현상은 2030년까지 모든 EU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갖게 될 특징으로 예측되고 있음(EU, 2008: IV)
- 아래 그림은 2030년 기준 유럽 국가별 축소지역을 예측한 자료인데, 축소 지역은 구소련 국가들과 지중해 주변국들에 주로 위치하지만, 모든 EU 회원국에는 향후 25년간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 최소 한 곳 이상 존재
- 인구감소 추세는 현재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옛 산업지역이나 현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

장 중인 지역도 포함

-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제상황이 열악하며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므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EU, 2008)

〈그림 4-6〉 유럽의 지역별 축소 예상 지역(2005~2030년)



자료 : EU(2008: IV)

2. 유럽의 축소지역 정책대응

□ 다층적 측면에서의 정책대응

- 유럽의 축소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를 고려한 다층적 측면에서 접근(강동우 외, 2018)
 - 유럽연합(EU), 개별 국가, 지역, 로컬, 지역 간 경계 등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축소문제를 구체화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축소현상에 대한 수준별 핵심 이슈가 다를 수 있는데, 유럽 연합(EU)의 측면에서는 인구 추세 파악과 전망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 개별 국가의 측면에서는 국가 보조금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 그리고 지역의 측면에서는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

〈표 4-3〉 축소지역에 대한 유럽의 다층적 접근

수준	핵심 이슈
유럽연합 (EU)	인구 추세 파악과 전망을 위한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 필요
국가 (national)	정책에 따라 개인 간, 장소 간에 사회적, 경제적 이전이 발생가능. 국가 보조금(subsidy) 정책은 지속가능한가?
지역 (regional)	인구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재편이 필요. 이를 위한 지역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로컬 (local)	고령화나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자체적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 개별적인 대응은 다른 지역과의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이나 자원의 낭비를 유발. 마을이나 도시의 커뮤니티와 같은 중간 단계의 기관이 필요. 로컬 정부가 이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계 (cross-border)	경계 단계간 유럽 외부와의 경계, 유럽 내 국가 간의 경계, 국가 내 행정단위 간의 경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제약이 없다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 인구감소나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은 대륙 간, 국가 간, 지역 간의 협력에 대한 반대나 반감을 초월할 수있을 정도인가?

자료: EU(2018: VIII-XI); 강동우 외(2018: 186)

- 다층적 접근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강조
 -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축소지역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확대
 - 지역 상위(supra-regional: EU 및 개별 회원국), 지역 하위(infra-regional: 지방정부 및 광역도시권), 또한 지역 간(transregional: 경계지역 및 주변지역)의 개입과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축소지역의 다층적 거버넌스 접근은 수직적일 뿐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을 포함하며, 정치·행정 단위 간 경계에서의 불연속성을 방지

□ 국가차원에서의 기본적 대응전략

- 다부문 간 통합형 공간정책(multi-scale integrated strategic spatial planning) 추구 강조
 - 축소지역에 전문적인 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의 설립 및 유치로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에 기반한 공간 계획 정책 시행의 필요성 대두
 - 도심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제한하면서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구축 필요성도 제기⁷⁾
-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과 인구학적 체크리스트(Demographic checks)⁸⁾ 개선
 -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과 예측(forecasting)은 정책의사결정자들(political actors)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7)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거점으로 하위 중심지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시행 필요

8) 우리나라의 인구영향평가(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시스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때문에,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인구체크리스트(demographic check)’ 를 개발하여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인구통계에 대한 진행사항 파악 필요
 - 장기적인 관점(Long-Term Perspective)의 적용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far-seeing)에서 총체적(holistic), 일관된(coherent) 전략적 접근 필요
 - 제도적 역량 강화 필요
 - 축소지역은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정착형 기업(local entrepreneurialism) 육성 및 역량 강화촉진 필요
 -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 개선
 - 미래 축소지역이 당면한 변화의 모습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또한 다양한 의사결정주체들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 강조
 - 대체 경제와 스마트한 다양성을 개발
 - 축소지역은 경제적 개발과 로컬의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내생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

□ 축소지역 맞춤형 대응전략

- 지역 내생적 자원의 동원(Mobilising endogenous resources)
 - 축소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경제의 다양화, 지역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 예로 농촌지역은 천연자원, 지역유산, 신재생에너지, 관광 등을 활용하여 농촌경제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 환경 개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혁신과 ICT 촉진(Promoting Social Innovation and ICT)
 - ICT를 비롯한 기술 및 지식기반 활동을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는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스마트한 방법(smarter way)을 활용함을 의미

- 축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ICT를 활용하여 감소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접근 필요
-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지원기관인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는 퇴직자와 실직자를 위한 신속대응서비스를 통해 ICT 및 디지털 기술교육 제공
-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정책 추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젊은 계층의 사회적 멘토로서 역할수행을 통해 경제성장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생태계 서비스 및 녹색경제 조성(Fostering Ecosystem Services and the Green Economy)

- 그린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고 오염지역을 감소시켜 '그린'의 장점을 특화시킨 공간 조성
- 저탄소개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개발, 관광 문화 활동 등 대기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차원에서 축소지역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측면의 접근 필요

○ 통합적 장소중심 접근의 현실화(Realising Integrated Place-Based Approaches)

- 수도권외의 비대한 성장은 정치와 제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소의 불평등과 사람의 불평등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규모의 지역과 도시들은 각자 다양한 경로를 거치며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
- 장소 중심 접근법은 특정지역의 특성에 맞춘,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매개요인으로 역할
- 이러한 접근법은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관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 대표적인 예로 「EU Action for Smart Village」가 있으며 농촌 지역의 자

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ICT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주도형 정책 사례

〈그림 4-7〉 유럽의 축소지역 정책대응

내생적 자원 활용, 지역정착형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유산, 천연자원, 관광 등 내생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다양성 제고 ▶ 축소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정착형 기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금융 활성화
사회혁신과 ICT 촉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보다 smart한 방법으로 효율화, ICT 적극 활용 ▶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정책 추진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업기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촉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참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주체간 협력적 파트너십,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 강조 ▶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인구접근을 위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

자료: 박진경(2019.8),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세미나.

3. 국가별 정책대응 현황 및 사례

□ 국가별 대응현황

- 국가별로 축소지역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각 국가별로 인구상황에 따른 대응방향 역시 조금씩 차별적
- 대부분의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축소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표 4-4〉 축소지역에 대한 유럽 각 국가별 대응방향

국가	인구 및 축소 상황	대응 방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기대수명, 낮은 출산율 • 이미 고령화 진행 • 노동력 부족 예상됨 • 동부 : 인구 유출로 인해 빠르게 축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관심이 높아 다양한 수준의 정부 정책 존재 • 대부분의 정책은 구체적인 해결책 보다는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문제에 집중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 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이슈 아님 • 지역정책은 주로 비도시지역의 쇠퇴에 관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 인구증가 • 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이슈 아님 • 쇠퇴하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논의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기대수명, 낮은 출산율 • 이미 고령화 진행 • 국제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짐 • 지방정부에서는 지속가능성, 농업 관련 정책 등과 함께 다루어짐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지역은 인구증가 예상 • 주로 국토의 주변부 중소 도시,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이슈 아님 • 주로 주택 정책을 통해 대응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출산율, 높은 사망률 • 지난 20년간 약 5% 인구감소 • 지속적인 인구감소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상황이 심각하나 인구 문제만을 다루는 정책 없음 • 몇몇 국가 정책에서 다른 분야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다루어짐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과 출산율 • 상대적으로 젊으나, 고령화의 속도도 빠름 • 국가 전반적으로 국제이민으로 인한 유출 많음 • 주요 도시에서 주변 배후지로 인구 이동 • 외곽 농촌지역 인구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국가 계획에서 출산율 증가와 이민 유도를 목표로 함

자료: Adapt2dc(2014);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2010); EUKN(2010); European Commission(2008); 강동우 외(2018: 186).

□ 국가별 대응사례

- 헝가리의 「Complex Development Program」
 - 헝가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Tamasi 지역을 대상으로 2007부터 2013년까지 EU자금을 토대로 개발된 사업
 - 헝가리의 「Complex Development Program」은 장소기반의 접근방식(place-based approach)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 시행
 - EU의 핵심투자정책인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예산 중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⁹⁾ 예산과 European Social Fund(ESF)¹⁰⁾을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 스웨덴의 고용,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를 위한 「Coherent Policy¹¹⁾」
 - 스웨덴 농촌지역 정책(Swedish rural policy)은 농촌지역의 잠재력과 강점에 집중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추구¹²⁾
 - 첫째, 시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둘째, 지속가능한 고용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
 - 셋째,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 되어 질 수 있는 기회의 증가
 -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비즈니스가 국가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네트워킹을 토대로 상호작용할 필요성 강조하며, 교육 및 훈련센터에 대한 투자, 공공부문 일자리의 재배치 인센티브를 통한 숙련된 노동자의 농촌지역 유입 유도 등과 같은 사항을 강조
- 이탈리아의 「Gran Sasso Science Institute, Abruzzo」
 - 이탈리아 아브루초(Abruzzo) 지역에서는 2000-2015년 사이 15세-34세 연령의 인구 60,000명 가량이 감소한 반면 64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이탈리아 타 지역이나 유럽 평균보다 매우 높아지는 현상 발생하러 이탈리아

9)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되는 펀드의 성격 지남

10) 고용과 교육기회의 개선, 사회 통합 등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돈을 의미

11) 결속정책

12) For Sweden's R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인구유출 경험

- 아브루초 지역은 이탈리아 정부가 주도하는 ‘Cassa per il Mezzogiorno (남부 지역을 위한 펀드)’의 투자를 통해 인프라와 자동차 및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기반을 건설해 나갔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를 토대로, 지식, 정보의 창출 활용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동부 유럽으로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변모
- 아브루초 지역 내에 위치한 대학과 지식산업 관련 기관들은 지역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적 자산으로 평가되며, 아브루초 지역에는 핵물리학 및 입자물리학 등으로 유명한 Gran Sasso Science Institute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지식경제의 육성을 목표로 고학력 인적 자원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 위한 정책 시행

〈그림 4-8〉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역



출처: ESPON(2017)

제3절 EU의 스마트빌리지정책

1. 스마트 빌리지의 개념

□ 등장배경

- 2016년 9월초 340명의 유럽 농촌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아일랜드 코크(Cork)에서 유럽 농촌지역의 미래 비전을 선포
 - ‘농촌지역의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 아래 농촌지역의 기대와 열망을 제시한 「코크(Cork) 선언 2.0」을 발표
 - 비전의 달성을 위해 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을 디지털화하며 연결하는 IT정책 개발 필요성을 제기
 - 아울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되, 각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기능적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
-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개념의 도입 및 확산
 - 「Cork 2.0 Action Plan」 발표를 통해 통합적, 다부문적(multi-sectoral), 영역적(territorial), 장소기반적(place-based)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
 -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촉진하고 지역 사업과 삶의 질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s)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확대 필요성 제기
 - 혁신의 촉진 ICT 기반의 신기술 적용 확산, 신규창업 육성 필요

□ 개념 및 특성

-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는 이미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농촌지역 공동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ICT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마을을 의미
 -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는 각 지역의 비즈니스 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과 솔루션 개발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스마트 빌리지의 솔루션은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one-size-fit-all)가 될 수 없고, 지역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
- 특히 스마트 빌리지는 농촌과 공동체들이 그들 지역에 존재하는 장점과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
 - 농어촌에서 인구유출 저지
 - 젊은인구의 유입 촉진
 - 일자리 기회 향상
 -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및 인프라 시설 충족
 - 농어촌지역의 기술향상을 통한 지역연계 증대 및 연결성 확보
 - 지역균형발전 추구
 -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그림 4-9〉 EU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프로젝트



출처: EU action for Smart Village (2017, available from https://ec.europa.eu/agriculture/sites/agriculture/files/rural-development-2014-2020/looking-ahead/rur-dev-small-villages_en.pdf, https://www.euromontana.org/wp-content/uploads/2017/04/HernandezLuque_EuropeanCommission_Smartvillages.pdf)

- 스마트 빌리지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디지털 및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 기술, 지식

의 더 나은 활용과 혁신을 통해 향상되는 것을 강조

-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혁신은 삶의 질 증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자원의 더 나은 이용, 환경적 부담 감소, 농촌지역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가치사슬(value-chain)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스마트 빌리지는 특히 온라인 기반의 학습, 건강 및 보건 등의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환경적·생태적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 해결책 도출, 새로운 기술 및 ICT를 활용한 지역 생산체계의 향상, 농업·식품 연계 프로젝트(agri-food projects)의 스마트 특성화 전략, 관광 및 문화 활동 등 포괄적 측면에 초점을 둠

〈표 4-5〉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구축의 핵심전략

구분	내용
다방면 지원의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과 혁신은 스마트 빌리지 구축의 핵심전략으로 삶의 질 향상, 공공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영향 최소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제품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에서 지원 가능
온라인 인프라 구축	- 도시-시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주민에 대한 인적역량 강화 등이 핵심전략
전략 다각화	-지역특성과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전략의 다각화 필요

자료: OECD(2014), 「Report on the OECD Frame Growth」, Paris: OECD.

2. 스마트빌리지 계획(Smart Village Initiative)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스마트 빌리지 계획은 국가과학학술원(national science academies)과 그들의 국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이하 내용은 Holmes, 2017의 내용을 정리)
- 유럽연합 국가과학학술원 네트워크와 EASAC(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은 주요한 협력조직임

○ 주요 목적

-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건(Rahmenbedingungen: framework condition)을 찾는 것으로 1) 생계유지, 2) 의료, 교육, 깨끗한 물과 위생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3) 역량강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농촌 사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의 공급하는 것과 정보통신 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통한 연결성(connectivity) 확보는 다른 개발계획과 적절히 통합되었을 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스마트 빌리지는 21세기의 혜택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합치되는 농촌개발을 지향

○ 스마트 빌리지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6개 지역(동, 서 아프리카, 남, 남동 아시아, 중남미)에서 최전방 활동가(기업가, NGO, 개발기관, 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공동체), 정책결정자 및 규제기관, 금융기관, 과학, 공학 및 인문학 국제전문가 등과 함께 30회의 워크숍과 역량 강화활동을 진행

- 70여개 나라의 1,000 명 이상의 참가자들과 함께한 워크숍은 경연대회, 온라인 세미나, 영향연구, 미디어와 미래전망 워크숍(forward-look workshops),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해 보강됨
-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지리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전국 그리드 확장 같은 거시적 방안보다는 가구(개인) 또는 소기업 단위의 전력생산 방안에 초점을 맞춤

□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 스마트 빌리지 계획의 주요 조사결과와 시사점은 1) 통합 및 협력강화, 2) 정책지원, 3) 시장형성, 4) 자금확보, 5) 과학과 기술, 6) 역량강화의 총 6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통합 및 협력강화

- 현재 에너지 접근성, 연결성, 의료 및 교육, 생산적 소기업 등과 같은 마을 단위 개발 계획은 협력이 적거나 아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개발의 혜택이 잘 나뉘지지 않음
 - 예를 들어 전력 접근성 향상을 통해 생성된 소규모 기업은 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며, 그들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전력 확보 방안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전력 접근성과 연결성은 마을 학교와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재정이 확보된다면 미니 그리드 설치 등을 가능하게 하여 이익 창출과 결산에 도움이 됨
- 즉 종합적 마을 개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스마트 빌리지 컨셉은 통합적 접근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
 - 농촌 및 도시개발은 마을과 도시 간 연결을 촉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며, 특히 최저생활 수준의 경작에 의존하는 마을 주민의 경제상황을 보다 열린 교환경제로 발전시킬 필요
-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
 - 예를 들어, 정부 부처 간, 지역, 광역 및 중앙 정부 간, 다양한 개발 기관 간,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이 필요. 정부 내에서 이러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고위급 직책 신설 고려 가능
 - 효과적인 학계의 지원도 필요한데,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공학 등 학제 간 연구 활성화 필요
- 최전방 활동가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국제 개발 기관 간 협력의 부족
 - 개발 기관 간 협력은 최전방 활동가들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 감소와 프로젝트 규모 확장에 도움이 됨

② 정책지원

-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규제는 빠른 농촌 전력화를 가능하게 하며 상당한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음
 -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정책 프레임워크는 전력, 난방, 청정 조리(clean cooking)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정치적 헌신이 필요
-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는 안정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투입을 적절히 편성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야 하며 규제는 단순하고 능률적이어야 함
 - 중앙정부의 국가 에너지 접근성 향상 계획을 염두하여 어느 지역이 국가 전력망 및 액화석유가스 네트워크에 포함되는(될 예정인)지 사전에 인지
 - 농촌 전력보급이 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전력망외(off-grid) 요금에 대한 규제는 개발자가 비용을 회복할 수 있을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때 정부 보조금 및 마을 주민의 구매력(affordability)과 도시 소비자와의 형평성(equity)을 고려
- 민간부문을 농촌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고 이익 창출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
 -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는 'one-stop shop'을 통해 면허, 허가, 정보 및 조언을 제공

③ 시장형성

- 동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개인 가구 수준으로 제공하는 기술 (pico-solar light)은 영리원칙 상업매매에 따라 팔리고 있으며 빠른 규모 확장을 가능하게 함
 - '쓴 만큼 돈 내기(pay-as-you-go)' 또는 '서비스 받고 돈 내기(pay for

- services)’ 접근 방식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용을 감소시키고 기기의 효율성을 증진
-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에너지 기기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역 공동체의 상당수가 이 기술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가구가 필요한 다른 서비스의 영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전력 접근성 달성을 위해서 가구단위 기술의 배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금융 혜택, 정부 및 개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
 - 정부와 개발기관은 효과적인 시장과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 사회의 극 빈곤층을 고려하면서도 시장형성이 가능한 보조금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와 개발기관은 미니 그리드 비용(기술 개발, 규모의 경제, 설치비용, 금융비용 등)을 감축 및 이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필요 지원금 수준의 감소 및 완전한 영리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④ 자금확보

- 전국적 전력 접근성 확보와 현대식 청정 조리 기술 개발을 2030년 까지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증대 필요
 - 개발도상국 정부와 개발 기관의 재원적 한계를 고려하면 추가적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조달해야하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마련된 국제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 정부와 개발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며 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가치사슬을 이용이 필요
 - 프로젝트 실시와 확대를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 은행 및 투자자, 개발 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⑤ 과학과 기술

- SDG 17번째 목표인 역량강화를 고려하여 정부와 개발기관은 대학과 최전방 활동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그들이 에너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이러한 연구 활동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찾은 우선순위, 기회 및 어려움을 고려해야하며 소박한 혁신(frugal innovation)과 적정 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역 문제에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함
 - 워크숍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연구 및 개발 분야는 태양 홈 시스템과 미니 그리드 관련 부문임
- 또한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방안이 마련될 필요

⑥ 역량강화

- 기술과 역량 부족은 농촌 에너지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과 주요 서비스의 확산을 막으며, 기술과 역량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교육, 경영 혁신 및 개발, 농업, 의료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와 에너지 부처가 협력할 필요
 - 정부는 기업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및 직업 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해야하며 지역 공동체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고려

3. 스마트 빌리지 구축동향

유럽국가들의 스마트빌리지 구축동향

- 유럽 국가들은 각 나라의 지역 특성과 지역 비즈니스 수요, 구축목적에 따

- 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 중(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 독일의 경우 스마트 빌리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근접지역간계약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
 - 핀란드는 혁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스마트 빌리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마다 스마트 빌리지 추진 방식이 조금씩 상이
- 추진 방식은 상이하지만 스마트 빌리지 구축의 핵심 전략은 디지털기술과 혁신, 지역주민의 주도, 지역특성에 따른 다각화라는 점에서 공통적

〈표 4-6〉 유럽 국가별 스마트 빌리지 추진형태 및 예시

국가	추진 형태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 예시
독일	R&D 기반 실증사업	지역생산제품 및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구축 자원봉사와 연결한 물품 전달 서비스
프랑스	근접지역간 호혜계약	도시의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활용 지역 바이오에너지 생산, 도시에 공급
핀란드	스마트 빌리지 혁신연구	시골마을 비농업 활동을 위한 창업보조 시골마을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화(판매, 홍보 등)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알프스 산악지역 커뮤니티 카풀 플랫폼 개발 원격교실, 원격진료 스마트 플랫폼 개발

출처: EU(2017) Action for smart village;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 빌리지'

4. 특징 및 시사점

- 유럽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추진
 - 사회현안 해결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기존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것이 바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
 - 디지털 신기술과 혁신은 스마트 빌리지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공유경제형 생산-유통 프

로세스의 개선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유럽 스마트 빌리지는 한 가지 형태(one-size-fit-all)의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으며 지역특성과 서비스 수요에 맞춰 전략 다각화
 - 농업단지를 위한 스마트팜, 공업단지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대체에너지 생산 등 지역개발 모델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 개발 가능
- 도시-농촌,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인적·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본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헬스케어 등 도시의 발전된 서비스를 시골에서 활용하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호혜 기반 구축
- 지역주민이 프로젝트를 직접 수립하여 EU의 투자승인을 받는 식의 상향식(bottom-up) 프로젝트
 - 지역주민들이 스마트 빌리지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지역개발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의 동기를 부여
 - 아울러 지역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지역행동그룹(Local Action Groups)에게 실행과제 추진 및 관리를 맡겨 성공확률을 높임
- 그러나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이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량강화가 또 하나의 관건임
 -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정보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
- 스마트 빌리지 디지털 솔루션은 지역정보와 요구사항이 반영된, 수익이 창출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
 - 디지털화의 경제성 지표를 발굴, 더 많은 기업이 서비스 디지털화가 주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움 필요

제4절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1.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2014.5, 일본창생회의(日本創成會議), “소멸가능성도시” 리스트 공표

- 일본생산성본부 산하 일본창생회의·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 마스다 히로야는 도쿄 1극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약 1,727개 시구정촌의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함
 - 합계특수출생률의 95%가 젊은 여성(20~39세)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구"의 감소는 인구의 재생산력을 저하시킬 것이므로 젊은 여성인구가 50%이상 감소할 경우 출생률이 상승할지라도 인구 유지는 어려우며, 최종적으로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박진경·이소영, 2016)

□ 2014.7, 국토교통성, “무거주화지역” 전망

- 국토교통성은 2014년 7월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을 공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19%가 무거주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박진경·이소영, 2016)
 - 무거주화지역을 포함하여 장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은 현재 거주지역의 약 63%가 될 것이라고 예측

□ 도쿄 일극집중 경향 지속

- 2018년의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수는 13만 6천 명으로 23년 연속 전입 초과를 기록¹³⁾
 - 2018년 도쿄권의 인구는 3,658만 3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0%가 집중

13) 총무성(2019년 1월 31일 공표),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 2018년 결과」

되어 있음¹⁴⁾

-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수의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2018년은 15~19세(2만 7천 명)과 20~29세(9만 9천 명)을 합쳐 약 12만 명이 전입되어 초과하였고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음¹⁵⁾
 - 반면, 여성의 전입초과수가 증가경향에 있다는 점을 주목함
- 과도한 도쿄 일극집중은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생활의 편리성, 사람과 정보교류의 직접성등 집적의 메리트를 넘어서, 긴 통근시간·높은 주택가격·부족한 보육서비스나 고령자의료서비스 등의 생활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
 - 더욱이 도쿄에 사람과 자원이 일극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도쿄지역의 거대 재해에 따른 피해 자체가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침

□ 지역경제 현황과 소득격차 문제

- 완전실업률은 모든 도도부현에서 개선되어 유효구인배율은 사상 처음으로 모든 도도부현에서 1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도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활동의 경향은 지역 간에 편차가 있어, 도쿄권과 그 외 지역간의 일 인당 소득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성장의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방일외국인여행자수는 2018년 3,119만 명으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¹⁶⁾, 2018년 방일외국인여행소비액은 4조 5천억 엔을 넘었음¹⁷⁾

14) 총무성(2019년 4월 12일 공표), 「인구추계(2018년 10월 1일 현재)」

15) 총무성(2019년 1월 31일 공표),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 2018년 결과」

16) 일본정부관광국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또한 6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여 2018년에는 9,000억을 초과¹⁸⁾
- 이러한 해외 교류의 활력을 활용하여 지방창생을 도모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2) 마을·사람·일 창생법 제정

□ 일본정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생산성본부 산하 일본창생회의·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는 소멸 자치단체 리스트를 토대로 「원스톱 저출산·지방활력전략」 마련
 - 20~39세의 젊은 여성 인구를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지표로 판단하고 그 장래추계를 지자체별로 시산

□ 마을·사람·일 창생법 제정

- 소멸 자치단체 리스트가 공표된 이후 일본정부는 즉각적으로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 창생법」 제정(박진경·이소영, 2016)
 - 마스다 히로야의 소멸가능성도시 리스트 발표 후 아베 총리는 2014년 9월, ‘지방창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내각부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설치
- 마을·사람·일 창생법의 목적(제1조)
 -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에 제동
 -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시정하여 각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
 - 향후에도 활기찬 일본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정
-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17) 관광청, 「방일 외국인 소비동향조사」

18)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2018년)」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 구조 확립

- 일자리의 창생은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임금, 안정된 고용형태, 보람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고용의 질’ 중시
 - 사람의 창생은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방에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지방에의 이주·정착을 촉진함과 더불어, 안심하고 결혼·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 제공
 - 마을의 창생은 지방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중산간 지역 등 지방 도시, 대도시 등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제를 해결
 - 이를 위해서 ①자립성 ②장래성 ③지역성 ④직접성 ⑤결과 중시의 5대 원칙을 수립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5개년 계획 수립
- “지방창생”은 지방의 일자리가 사람을 불러모으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불러모으는 전략에 포커스
- 마을·사람·일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도쿄 일극집중 시정, 청년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 실현, 특성에 맞춘 지역과제 해결 등 3가지로 설정

〈그림 4-10〉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법



3) 국가판과 지방판 창생종합전략 수립·추진

□ 국가판 “장기비전(2060)”과 “창생종합전략” 수립·추진

- 국가의 장기비전은 2060년에 약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비전” 제시
 - ① 도쿄 대도시권으로의 집중 시정(지방으로의 이주희망 장애 제거)
 - ②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 실현(18~34세는 90% 정도가 결혼을 희망하도록 하고, 부부의 예정 자녀수는 평균 2.07명, 독신자의 희망 자녀수는 남성 2.04명, 여성 2.12명으로 실현하여 출생률을 1.8정도 수준 까지 향상)
 - ③ 지역특성을 즉각적으로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
- 국가의 목표수치는 지방판 종합전략을 토대로 설정

□ 지방판 “인구비전(2060)”과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추진

- 지방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인구동향분석과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2060년까지 중장기 장래 인구전망, 즉 “인구비전” 제시
 - ① 인구동향분석 : 시계열에 의한 인구동향분석, 연령계급별 인구이동분석
 - ② 장래인구추계 : 인구추계, 자연증감·사회증감의 영향도 분석
 - ③ 인구변화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산업, 재정 등
 - ④ 인구장래전망 : 결혼 등의 희망, 이주 희망 등, 지향해야 할 장래 방향
- 지방의 인구비전 책정을 위해서 국가는 각종 인구데이터와 워크시트 제공 (RESAS)
- 지방은 지방의 인구비전을 토대로 2015-2019년까지 5개년 정책목표 및 시책을 책정하여 “지방판 종합전략”을 마련
 - 각 지역의 인구동향, 산업실태 등에 근거하여 종합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

2. 제1기, 제2기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1) 제1기 지방창생 기본방침(2015~2019)

□ 생애주기에 맞춘 지방창생의 충실·강화

- 지방창생은 저출산 고령화에 제동을 걸어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력 확보를 목표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2017년 12월 22일 개정되었으며, 이하 종합전략이라 함), 도도부현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및 시정촌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이하 지방판 종합전략이라 함)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의 달성을 위해 정책 패키지와 개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창생은 2014~2015년 국가 및 지방 ‘전략수립’ 단계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전개’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7년에는 5개년 종합전략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
 - 2018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과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 들게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와 기업의 본사 기능 이전 촉진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정책 메뉴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의 활용 등을 통해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 파악하고, 시책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지방창생을 추진해야 함
 - 국가로서는 앞으로도 ‘마을·사람·일 창생본부’가 지방창생 시책 추진의 사령탑이 되어 관계부처와 연계하면서 의욕과 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 인재지원, 재정지원이라는 ‘지방창생판 세 개의 화살’로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함

□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의 수립·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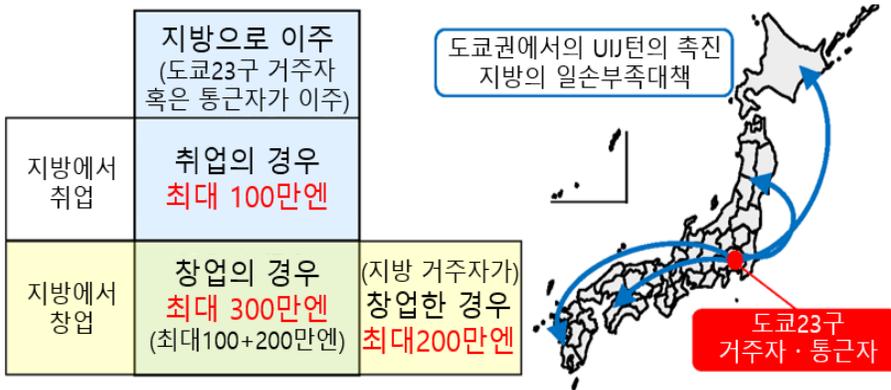
-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회의’ 설치

- ‘마을·사람·일 창생담당대신’ 산하에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회의’를 설치 하였음
- ‘지방에서 개인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는 질적인 측면은 물론 ‘지방의 인력 확보’라는 양적인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활약·외국 인재의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논의

○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UIJ턴¹⁹⁾ 시책의 획기적 강화

- UIJ턴에 의한 창업 취업 확대(6년간 6만 명)
- 도쿄권에서 도쿄권 외 지역으로의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을 촉진
- 일손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 지원
- 지방창생추진교부금과 채용관련 보조금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 제공

〈그림 4-11〉 UIJ턴 추진을 위한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자료 :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9.6), 「마을·사람·일 창생기본방침 2019에 대하여」.

19) UIJ턴 현상은 다음 3가지 인구이동현상을 총칭함.

- ① U턴 현상 :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후, 다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
- ② I턴 현상 : 지방에서 도시로, 혹은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
- ③ J턴 현상 : 지방에서 대규모의 도시로 이주한 후, 지방 근교 중규모의 도시로 이주하는 것

- ‘지역부흥협력대’ 확충(6년 후 8천 명)
 - ‘지역부흥협력대’ 응모자를 확대하고, 대원수를 확충방안 마련
 - 지금까지의 창업 지원에 추가해 사업승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임기 종료 후의 지역 정주 및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
-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의 충실화
 -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은 장래 UIJ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
 - 초·중·고등학교별로 관련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
 - 선진적 장기시책(4박 5일 등)에 대한 지원확충을 검토
-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 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 무직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창업 취업 촉진 및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인재 매칭을 지원
 - 지방창업추진교부금이나 채용 관련 보조금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생산성 혁명에 기여하는 지방창업거점정비교부금’을 활용한 ‘리커런트 교육(Recurrent Education)’용 연수시설 등의 정비 지원
-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 지방창업 시책에 의한 방일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특산물 수출 확대·채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인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창생에 종사하는 외국 인재에게는 재류자격에 대해 ‘포괄적인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새롭게 부여
 - 일본 내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인재 포인트제’의 확충과 재류 자격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
- 매력적인 지방 마을만들기 추진
 - 지방 중추중핵도시는 상당한 인구규모, 산업활동, 주민생활기반, 국제적투자자의 유입 등으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주변시정촌을 포함한

지역전체의 경제, 생활을 지탱하고, 도쿄권의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기능이 기대됨

- 한편, 도쿄권으로의 인구전출상황을 보면 정령지정도시 등의 중추중핵도시로부터의 인구가동이 많음
- 중추중핵도시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그 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활용한 지원을 실시

○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한 '마을'의 재생

- 컴팩트+네트워크형성을 위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등 관련 시책과 더불어, 교외주택단지의 마을만들기 시책을 강화해야함
-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공공기관, 기업, 주민(고령자, 여성을 포함한 다세대), NPO등 다양한 마을만들기의 주체 구축
- 고령자가 안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의료·복지시설이나 생활편리시설, 지역교통기능을 검토
- 주택단지를 구획지어, 원스톱으로 토지이용 등을 협의·처리하여 빠른 과제 해결이 가능한 제도 구축
- 빈집이나 공공시설 등의 자원의 유효활용을 위한 대책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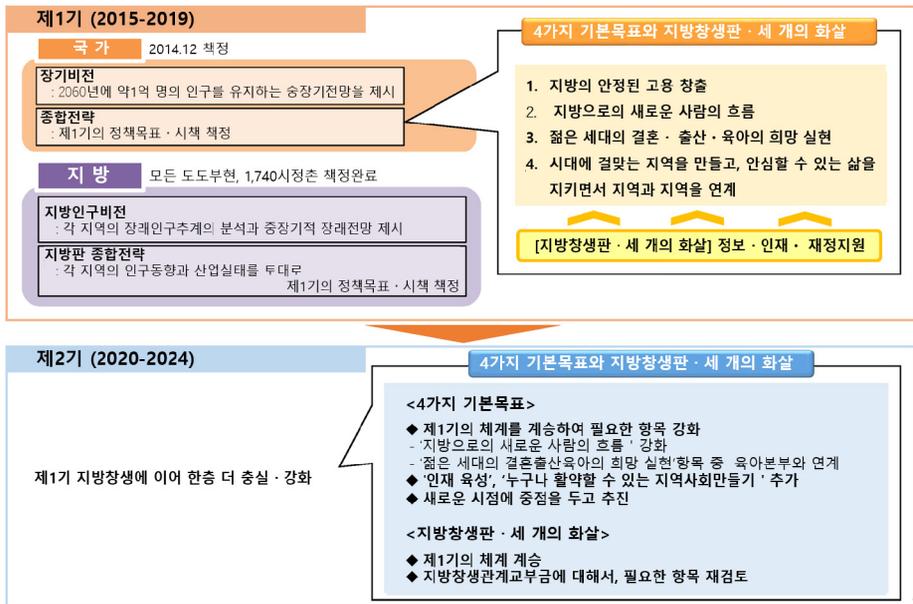
□ Society5.0의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인공지능(AI)나 IoT 등의 기술혁명 속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자세로서 'Society5.0²⁰⁾'을 제창
- 구체적으로는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융합시켜, 지역·연령·성별·언어의 구분없이 다양하고 잠재적인 니즈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0) 내각부의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으로써 제창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수렵사회(Society1.0), 농경사회(Society2.0), 공업사회(Society3.0), 정보사회(Society4.0)에 이어 사이버 공간(가상 공간)과 피지컬 공간(현실 공간)을 고도 융합한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양립하는 인간 중심의 초스마트사회(Society5.0)"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6』, 2016년 5월 24일 내각결정)

- 경제적발전과 사회과제의 해결을 양립하여, 사람들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한 인간중심의 사회로서 Society5.0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저출산·고령화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에서야말로 Society5.0의 실현을 통해 각 지역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자립하는 지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토강화 등 안전·안심 관련 시책과 연계하여 지방창생을 추진

〈그림 4-12〉 일본 제1기와 제2기 국가와 지방의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9.6), 「마을·사람·일 창생기본방침 2019에 대하여」.

2) 제2기 지방창생의 새로운 시점(2020~2024)

지방으로의 사람·자금의 흐름 강화

- 제1기에서의 지방이주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시책과 더불어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추진
-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기부, 지역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진하여, 지방에의 자금의 흐름을 강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힘으로

- ‘지방에서 세계로’의 관점을 토대로 지방창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미래기술의 발전, 소비나 관광수요의 증대, 2019년 럭비월드컵,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2025년 오사카·관서 만국박람회의 개최로 지방과 세계의 직접 교류의 기회 확대
- 지방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한층 깊은 침투와 주류화를 도모함
- 전국의 지방공공단체가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사회 및 환경의 종합적 상승효과를 창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를 통해 지방창생 SDGs를 위한 ‘자율적 선순환’의 형성을 추진

인재의 양육·활용

- 지방창생의 기반을 인재의 발굴·육성·활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민간과의 협동 강화

- 제1기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산관학금노연사(産官學金勞言士)를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기업과 주민, NPO 등 민간 주체

가 지역만들기를 담당한 좋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제2기에서는 민간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를 주체로 하는 시책과 더불어 민간의 주체적 시책과도 연계를 강화

□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 여성, 고령자, 장애인,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외국인 등 누구나 거처와 역할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
-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을 맺는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의 형성은 새로운 발상이나 비즈니스를 발현시키는 힘이 됨
-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고령자수의 증대에 대비한 대응 검토

□ 지역경영

-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밖 시장에서의 수입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의 효율적인 경제순환을 창출
- 도교권과의 지역격차개선을 위하여 지역의 매력적이고 다양한 고용기회의 창출과 소득향상을 실현
- 지역의 경제사회구조 전체를 부감하여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지역을 경영하는 것이 필요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자원 활용·매니지먼트강화, 지역내 에너지·순환자원 등의 활용추진 등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3) 지방창업판·세 개의 화살 지원

- 정보·인재·재정의 지원
 - 지방창업은 각각의 지방이 '자조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스스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
 - 국가로서는 의욕과 열의가 있는 지역에게 정보·인재·재정의 3가지 측면(지방창업판·세 개의 화살)에서 지원

□ 정보지원

- 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SAS)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을 개발·제공
 - 지역이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에 적절한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시화함
 - RESAS는 산업맵, 농림수산업맵, 관광맵, 인구맵, 지자체비교맵으로 구성됨
 - <https://resas.go.jp/>로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이용가능
- 도시재생의 가시화 (i-도시재생)
 - 마을만들기의 과제나 효과, 미래상을 주민이나 투자자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도시재생 가시화 정보기반 'i-도시재생'기술(지리정보나 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방창업 추진

□ 인재지원

- 지방창업 인재지원제도
 - 지방창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 민간인재를 시정촌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하는 제도
 - 시정촌장의 보좌역으로 지방 창업에 관하여 시정촌 지역·주민·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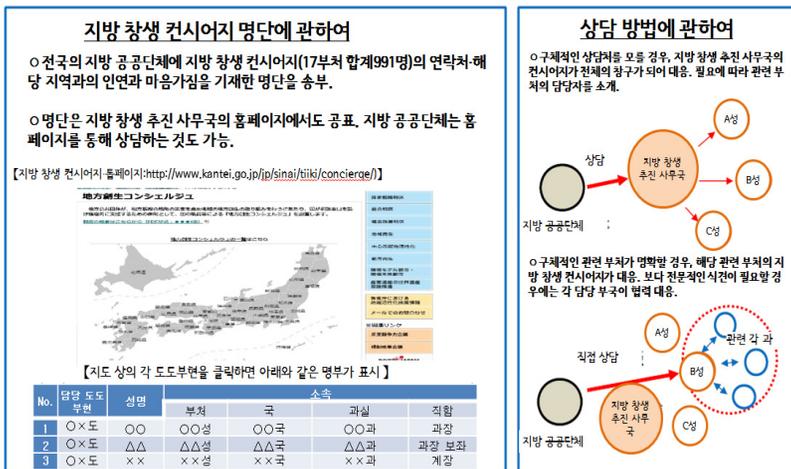
종합 전략에 기재된 시책의 추진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함

- 2016년도에는 응모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장기화하고, 민간인재의 모집대상을 일반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2015년에는 69개 시정촌에, 2016년도에는 58개 시정촌에 파견

○ 지방창생 컨시어지(Concierge)

- 지방관 종합 전략에 따라서 시책 전개를 진행시키고, 지방 창생에 대응하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해당 지역에 애착심을 가진 국가 공무원을 선임하여 '지방 창생 컨시어지'의 구조를 2015년 2월 27일 구축(2016년 1월말 현재 17개 부처 합계 991명)함
- 지방의 상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꼼꼼하며 성실하게 대응

〈그림 4-13〉 지방창생 컨시어지제도



자료: 박진경·이소영(2016),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창업 칼리지(College)

- 지방창업의 실천적 지식을 e-러닝 형식의 콘텐츠로 제공
- 지방창업 관계자가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한 Web 사이트 ‘지방창업 연계·교류 광장’의 콘텐츠 대폭확충과 보급 추진

□ 재정지원

○ 지방창업관계교부금 지원

- 지방창업추진교부금은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법정교부금으로, 지방공공단체에 복수년도 안정적, 계속적으로 지원
- 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은 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 및 사립대학개혁 종합지원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지역의 젊은이의 수학 및 취업을 촉진을 도모

○ 지방재정조치

- ‘마을·사람·일 창생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에 1조원을 계상했는데, 2020년에도 계속하여 예산이 유지되도록 함

○ 세금 제도

- ‘고향세’는 고향과 지방공공단체를 응원하는 납세자의 마음을 가교로 서로 돕게 하는 제도이자 세금의 쓰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제도
- 2016년에 창설된 ‘지방창업 응원세제(기업판 고향세)’의 경우, 관광진흥, 이주·정주, 인재 육성 등의 사업을 촉진한 우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2018년부터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역 창업과 이주·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형의 ‘고향세’ 제도 활용을 촉진
- 2019년부터는 지방창업교부기금과 병용하거나 기금 적립 요건 완화 등의 운용개선을 실시
- ‘지방거점 강화 세제’는 2018년의 세제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무실의 이전 및 확충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3.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새로운 목표와 주요내용

1) 제1기 창생종합전략(2015~2019)의 4가지 기본목표

- 국가의 목표수치는 지방관 종합전략을 토대로 설정
 - 기본목표 1. 지방의 안정된 고용창출
 - 기본목표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 기본목표 3.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실현
 - 기본목표 4. 시대에 걸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키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

〈표 4-7〉 일본 제1기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2015~2019)의 4가지 기본목표

장기비전 (중장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문제의 극복: 2060년 1억명 인구확보 목표, 도 교일극집중 시정 • 성장력 확보: 2050년 실질 GDP성장률 1.5~2% 유지
정책 패키지	기본 목표(KPI)	주요 추진시책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1. 지방의 안정된 고용창출 (젊은 층 고용창출수, 여성 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 비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 지방에 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 ICT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지방이주건수, 기업의 지방 거점 및 고용자수, 지방대학 진학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주 촉진 -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세대의 결혼·출산·육 아의 희망실현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 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계속 취업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안심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작은 거점수, 정주자립권 협정체결, 입 지적정화 계획 수립, 중 고·리폼시장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형 촌락생활권) 형성 지원 -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 콤팩트화와 네트워크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정주 자립권 형성 촉진 -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자료: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제2기 창생종합전략(2020~2024)의 새로운 목표와 분야별 주요내용

□ 기본목표 1. 지방의 안정된 고용창출

- ‘지역인재지원전략패키지’를 통한 인재의 지역전개
 - 인재채용 측 : 선도적 사업 검토 등 지역기업의 인재 니즈 발굴 강화
 - 인재공급 측 : 도교권의 기업의 개척·연계강화를 통해서 상주시킬 뿐만 아니라 부업·겸업을 포함하여 인재공급 대폭 확대
 - 창업지원과 지역기업의 사업승계대책을 추진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 Society5.0의 실현을 위한 기술(미래기술)의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기회의 창출을 도모
 - 특히, 지역경제의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발굴·성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 이노베이션의 창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의 활성화, 지역상사의 확대 등을 추진
- ‘해외로부터 버는’ 지방창생
 - 해외현지의 수요개척(지역특산품 수출)과 지역 내 소비획득(방일 외국인 확대)을 지방창생의 성장 엔진으로 하여 ‘해외로부터 버는’ 시책을 관계부처가 일환이 되어 지원
- 지방창생 담당조직과 협동
 - NPO, 기업 등 지역만들기를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에 대해 그 체계를 명확화하고, 이주지원이나 기업지원 등의 시책내용을 유형화·가시화하여 지방창생 관련 담당조직의 활동을 가속화함
 - 전국적인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조직간 연계를 촉진
 -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표창 제도 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검토
- 고등·대학교에서의 인재육성
 -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만한 젊은 세대 육성 시책 강화

- 원격교육과 같은 미래기술을 활용한 학습의 폭 확대, 학습기회 확보 등 학습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의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과 제해결에 관한 심층학습, 지역유학,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추진

□ 기본목표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 기업의 본사기능이전 강화

- 과도한 도쿄 일극집중을 제어하고 지방에서의 안정되고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거점강화세제 도입
- 도쿄에서 지방으로 기업 본사기능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총동원하여 종합적, 근본적인 방침 검토

○ 기업관 고향납세의 활용촉진을 통한 민간자금의 지방 환류

- 기업이 기부를 통해 지방창생 시책을 응원하는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관 고향납세)는 기업과 지방공공단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효과적임
- 기업이 지방창생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으로도 이어짐

○ 정부관계기관의 지방이전

- '정부관계기관이전기본방침(2016년 3월 22일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결정. 이하 '이전기본방침'이라고 함)을 토대로, 중앙청사 및 연구기관·연수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
- ICT를 활용한 새틀라이트 오피스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중앙청사 직원의 지방 근무를 촉진하는 방침 검토

○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 지역과의 관계를 요하는 도시주민과 지역의 니즈와의 매칭 지원이나 지역과 인재를 이어주는 코디네이터의 설치 등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위한 종합적 방침 검토
- 이주·취업뿐만 아니라 부업·겸업을 포함함 다양한 형태로 도시부의 인재를

지역기업에 전개·환류하는 지역인재지원사업 추진

- 지방공공단체에의 민간인재파견
 - 소규모 시정촌에 국가공무원을 파견하는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가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이나 관광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공단체에 전문인재를 파견하는 새로운 시책의 구축을 검토
- 지방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통근시간, 가처분소득, 주택가격등의 지방 생활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도표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
 - 취직·이주 시에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기본목표 3.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실현

- 개개인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저출산 대책
 - 각 지방공공단체가 육아서포트체제, 일하는 방식, 주환경등 지역별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시책을 전개하는 ‘지역어프로치’를 통해 저출산 대책 강화
- 여성, 고령자, 장애우, 외국인등과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 연령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류할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여성·고령자의 신규취업지원 시책, 재외의 친일외국인재의 지방공공단체와의 원활한 매칭, 외국인재의 활약과 공생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선도적 시책을 지원

□ 기본목표 4. 도시에 걸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키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

- 교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만들기

- 중심시가지, 교외주택지, 중산간지역등의 지역특성에 맞춘 콤팩트화와 네트워크형성 추진
- 인구감소 추세에서도 행정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계 중핵도시권을 형성하는 등 지역간 연계 추진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지역순환공생권의 구현화 추진
- 매니지먼트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유희시설, 빈 점포, 빈 집등 지역자원을 기업, 주민과 공유화하는 공유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존 자원의 활용 촉진
 - 공공 공간을 민간비즈니스에 개방하거나, 민간 공간을 방재·감재 등 공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공간의 용도혼재나 다기능화를 실현하는 민·관 담장 허물기를 추진
- Society5.0의 실현을 향한 기술의 활용
 - MaaS,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ICT 활용 추진
- 스포츠·건강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의 스포츠 투어리즘의 개발, 경기장시설, 정보제공력, 프로 스포츠팀 등의 유효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

□ 기본목표 5. 연계시책 등

- 지방창생을 위한 국가전략특구제도 등 추진
 - 국가전략특구제도를 기초로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슈퍼 시티’ 구상을 실현하고 지역한정형 샌드박스제도 창설
 - 종합특구제도에 대해서는 특례조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활용을 촉진
- 규제개혁, 지방분권개혁과의 연계
 - 규제개혁추진회의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개혁실시계획(2019년 6월 21일 각의결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분야, 수산분야, 금융분야 등의 지방창생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혁 사항을 착실히 실시

-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지방창생 가속화
 - 지방창생의 모델이 될 만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방창생시책 진행을 가속화하여 제2기 종합전략에 반영
- 국토강화 등과의 연계
 - 국토강화 등 안전·안심 관련 시책과 연계
 - 민간기업에서도 BCP나 다양한 인재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

〈표 4-8〉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의 제1기와 제2기 주요 추진시책 비교

기본 목표(KPI)	주요 추진시책	
	제1기 창생종합전략	제2기 창생종합전략
1. 지방의 안정된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 지방에 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 ICT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지원전략패키지'를 통한 지역전개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 해외로부터 버는 지방창생 - 지방창생 담당조직과 협동 - 고등·대학교에서의 인재육성('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만들기'를 통한 젊은 세대 육성시책 강화)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주 촉진 -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 취업 확대 - 지방대학 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본사이전 강화(지방거점강화세제 도입) - 기업판 고향납세의 활용촉진을 통한 민간자금의 지방환류 - 정부관계기관의 지방이전 - 관계인구의 창출, 확대 - 지방공공단체어의 민간인재파견 - 지방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3. 젊은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저출산대책 - 여성, 고령자, 장애우, 외국인 등과 공생하는 마을 만들기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형 촌락 생활권) 형성 지원 -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 콤팩트화와 네트워크형성, 연계중추 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만들기 - 매니지먼트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기술의 활용 - 스포츠·건강마을만들기 추진
연계시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창생을 위한 국가전략특구제도 등 추진 - 규제개혁, 지방분권개혁과의 연계 -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지방창생 가속화 - 국토강화 등 안전·안심관련 시책과의 연계

자료: 박진경(2019.11),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 국내외사례", 지방소멸위기극복 국회토론회.

4. 지방창생 추진체계

내각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설치

- 2014년 9월, 내각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설치
 -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는 종합전략의 입안 및 실시·검증, 기타 지방창생 관련 시책 기획·입안, 종합·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내각총리대신(본부장), 지방창생 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이상 부분부장), 기타 모든 장관(본부원)으로 구성됨(김현호 외, 2019)
- 자문기구인 ‘마을·사람·일 창생회의’는 총리대신(의장), 지방창생 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이상 부의장), 창생회의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국무대신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지속적 사회 창생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지방창생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사무국과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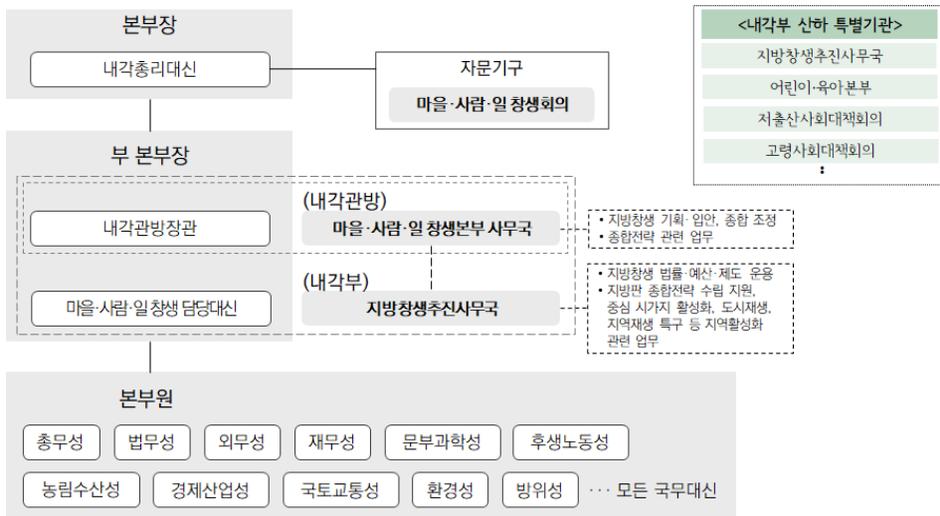
-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의 사무국은 내각관방 산하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사무국’ 설치
 -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2016년 1월, 별도로 내각부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지방관 종합전략 수립 지원, 중심시가지 활성화·도시재생·지역재생·특구 등의 4대 지역활성화 관련업무를 수행
 -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사무국’은 지방창생의 기획·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지방창생에 관한 법률·예산·제도의 운용 업무 담당

국가의 상위 아젠다정책으로 지방창생정책 추진

- 일본의 경우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을 담당하는 저출산사회대책회의,

고령사회대책회의 등은 내각부 산하 특별기관으로 두고 있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창생정책이 최상위의 국가의 아젠다 정책이라 할 수 있음

〈그림 4-14〉 일본 지방창생정책 추진체계



자료: 김현호 외(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균형위. 박진경(2019.11),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 국내외사례”, 지방소멸위기극복 국회토론회.

5. 부처별 지방창생 추진사업(2019년 예산기준)

-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종합전략 등을 고려한 부처별 개별시책에 부과되는 교부금, 마을·사람·일 창생사업비(지방재정계획), 사회보장 충실과 관련된 예산 등 지방창생 관련예산을 모두 합하면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총 2조 9,562억 엔에 달함

□ **지방창생추진교부금** ----- **1,000억 엔**

- 지방관 총합전략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선도적 활동을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창생의 충실·강화 추진
- 지방창생교부금을 활용해 동경권에서의 UIJ턴 촉진 및 지방의 담당자부족 대책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 관련 부처의 시책과 각종 금융기관의 자금 융통과도 연계
 - 관계시책
 - 후생노동성 : 중도채용등지원조성금 (UIJ턴 코스)의 신설
 - 국토교통성 : 주택금융지원기구의 플랫폼 35 지역 활성화형 확충(지방이주 지원)
 - 중소기업청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신규개업자금등의 대출 이율 인하

□ **지방대학·지역산업의 창생** ----- **101.3억 엔**

- 수장의 리더쉽 하에 산관학연계에 의한 지역 중핵적산업의 진흥과 전문인재육성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활동을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
- 이 지원으로 인해 일본 전국 그리고 세계의 학생이 모이도록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대학만들기'를 추진하여 관련 시책과 함께 지역 청년의 수학·취업을 촉진

□ **총합전략 등에 따른 개별시책(지방창생추진교부금 제외)** ----- **7,568억 엔**

-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의 정책패키지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 ①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창출 ----- 2,172억 엔
 - ②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 627억 엔
 -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실현 ----- 2,436억 엔

- ④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2,333억 엔

- 각 부처사업을 모듈화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패키
지화하여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에 일괄 신청

〈표 4-9〉 각 부처별 종합전략 등에 따른 개별시책 사업 수(2019년 예산 기준)

구 분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창출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지역에 맞는 지역만들기	총 사업수
내각관방	2	3	0	0	5
내각부	7	5	4	7	23
총무성	14	7	0	7	28
외무성	10	0	0	2	12
문부과학성	8	15	4	5	32
후생노동성	12	2	24	1	39
경제산업성	16	0	0	5	21
국토교통성	14	1	0	19	34
농림수산성	8	0	0	0	8
환경성	8	0	0	3	11
방위성	0	1	0	0	1
금융청	1	0	0	0	1
소비자청	0	1	0	0	1
합 계	100	35	32	49	216

자료 : 일본 지방창생 웹페이지 www.kantei.go.jp

□ 마을·사람·일 창생 사업비(지방재정계획) ----- 1조 엔

-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주적·주체적으로 지방창생에 힘쓸
수 있도록 2015년도이후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에 ‘마을·사람·일 창생 사업
비’(1조 엔)을 계상
- 2019년도에도 계속하여 1조 엔 정도의 사업비를 유지

□ **사회보장 충실** ----- **1조 994억 엔**

- 어린이·육아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개호 서비스의 제공체제 개혁 등을 촉진

<그림 4-15> 일본 지방창생정책 관련예산(2019년 기준)

지방창생추진교부금	1,000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 종합전략을 토대로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선도적인 활동을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창생의 충실·강화 ➢ 추진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활용하여 도쿄권에서의 UIJ턴 촉진 및 지방의 담당자부족대책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 관계부처의 시책과 각종 금융기관의 자금 유통과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시책 : 후생노동성 : 중도채용등지원조성금(UIJ턴 코스)의 신설 : 국토교통성 : 주택금융지원기구의 플랫폼 35 지역 활성화형 확충(지방이주지원) : 중소기업청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신규개업자금등의 대출 이율 인하 	
종합전략 등을 고려한 개별시책(지방창생추진교부금 제외)	7,568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의 정책패키지별 내역(각 부처사업 모듈화,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을 창출 (2,172억 엔), ②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627억 엔)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자녀 교육 지원 (2,436억 엔), ④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2,333억 엔) 	
마을·사람·일 창생사업비(지방재정계획)	1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주적·주체적으로 지방창생에 힘쓸 수 있도록 2015년도 이후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에 '마을·사람·일 창생사업비'(1조 엔) 계상 (<u>우리나라 교부세 해당</u>) 	
사회보장 충실(2016년에는 7,924억엔)	1조 994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육아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개호 서비스의 제공체제 개혁 등을 촉진 	

자료: 박진경(2019.11),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 국내외사례”, 지방소멸위기극복 국회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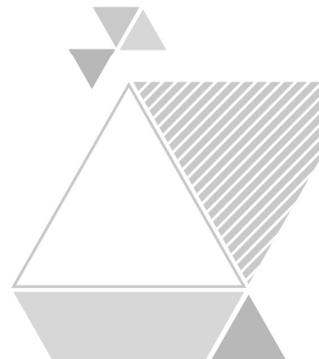
제5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사례조사

제1절 인구활력 사례조사

제2절 경제회복 사례조사

제3절 공간혁신 사례조사



제 5 장 지역인구감소 대응관련 국외 사례조사

제1절 인구활력 사례조사

1. 이탈리아 고급인력 유입 프로젝트(Youth Guarantee)

□ 추진배경

- 이탈리아 아브루초(Abruzzo)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사이 15~34세 연령의 인구 60,000명 가량이 감소한 반면 64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이탈리아 타 지역이나 유럽 평균보다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인구유출 경험(이하 Plan.Tsekoura, M., 2019의 자료를 정리)
 - 이탈리아 정부는 아브루초(Abruzzo) 지역이 경험한 지진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자연환경, 지식경제 관련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고학력 인적 자원의 유입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이탈리아 아브루초(Abruzzo)지역은 3개의 대학과 핵물리학 및 입자물리학 등 유명한 National Laboratories of Gran Sasso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잠재력이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음
 - 또한 2009년에 6.3의 강진을 경험한 적이 있어 자연환경과 지식산업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 내포

□ 추진내용

- 이탈리아 정부는 아브루초(Abruzzo)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과 고급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Garanzia Giovani(Youth Guarantee)²¹⁾」 프로젝트에 3,100유로를 투입하여 15~29세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기준 약 1만 8천 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Garanzia Giovani(Youth Guarantee)」 프로젝트는 전문지식이나 기술 보유자, 해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EU시민,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EU시민 등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과세 기준을 70~80% 줄여주는 세금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고급인적자원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
 - 이탈리아의 아브루초(Abruzzo)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를 토대로 지식, 정보의 창출 활용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모토를 토대로 우수한 인적자원, 특히 젊은 고학력 이민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 이탈리아의 아브루초(Abruzzo)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유연성 있게 집행하고 유입을 원하는 구체적인 타깃 그룹을 설정하여 철저한 우선지원 관리시스템 도입
- 이탈리아의 아브루초(Abruzzo)지역은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부대책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 분야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
 -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²²⁾을 참여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 조정 기구인 「Struttura di Missione」를 설치하여 청년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대책에 대해서 논의

21) Garanzia Giovani Project

22) 지역의 청년단체,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경력지도 서비스기관 등

〈표 5-1〉 이탈리아 아브루초의 정책 타깃 그룹

구분	15세~29세 그룹의 유형	유입을 원하는 타깃 그룹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	학위가 없는 집단	×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집단	○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청년	전문적인 기술자격이 없는 집단	×
	전문적인 기술자격이 있는 집단	○

출처: Italia Government(2018), Italian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1991년 아브루초 지역의 인구는 1,249,054명에서 2019년 현재 기준 1,311,580으로 이탈리아의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증가한 양상 보임
 - 한때 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지역에서 아브루초는 이탈리아 남부의 다른 지역은 물론 동부 유럽으로부터 고향력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변모

〈표 5-2〉 아브루초 지역의 인구 변화율 1991-2019

Name	Status	1991	2001	2011	2019
Abruzzo	Region	1,249,054	1,262,392	1,307,309	1,311,580

자료: 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Italia(web)

-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디자인은 지역 차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단위에서의 제대로 된 정책 전달 체계의 수립, 충분한 역량 및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지역으로의 유입을 원하는 구체적인 타깃 그룹의 선정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함

2. 스웨덴 스마트 지역돌봄 프로젝트(The IMPROVE)

□ 추진배경

- 노인들의 돌봄서비스 분야 공급부족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 사회적 소외감 완화를 위해 최근 스웨덴에서는 돌봄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스웨덴의 The IMPROVE 프로젝트는 EU의 INTERREG PROGRAM²³⁾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등장
 -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베스테르노를란드 주(VASTERNORRLAND)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노인들의 e-health services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추진내용

- IoT(사물인터넷) 및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블루투스 및 모바일 프로그램을 사용해 열쇠 없이도 자물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노인들이 거주하는 가정에 보급
 - 밤 시간에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 방문하는 봉사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스마트 자물쇠를 사용해 노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이러한 스마트 장치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
-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통해 치매환자에게 가이드를 제시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장치 보급
 - 노인들에게 음성을 통한 가전 제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72 시간동안 활동한 노인들의 생활패턴이 데이터로 전송 및 기록되어 추적

23) EU 가입국가간 지역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유럽 지역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대부분의 기금이 사용됨

된 빅 데이터를 토대로 노인 개개인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접근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노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와 니즈(Needs)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돌봄(Community Care) 효과 극대화
- 스마트 제품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 간호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 용품을 활용해 노인들이 위기에 처했는지의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어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

3. 영국 Intermediate Care Southwark(ICS) 프로그램

□ 추진배경

- 영국은 2026~2028년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고령화로 높아지는 복지 수요 대응은 한계에 직면
 - 병원 및 요양기관을 찾는 노년층은 매년 늘어나지만 이를 감당하기엔 개인도 정부도 역부족
- 영국 보건부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제정 후 커뮤니티케어를 더 강화하는 식의 개혁 추진
 - 영국 런던 서덕지역(Southwark)은 이용자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돌봄 시스템 도입에 관련된 시범지역으로 선정
- 살던 곳에서 편하게 진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장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과 재정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시작됨

- 지역 고령 환자들이 스스로 거동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거실, 계단 등 주거 공간 곳곳에 필요한 시설과 도구를 지원 설치해주고, 건강상태 회복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주는 것을 목적으로 등장한 사업으로서 민간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임

□ 추진내용

- 영국 런던 서덕지역(Southwark)에서는 서덕지구통합돌봄지원(ICS: Intermediate Care Southwark) 서비스 운영
 - 서덕지구통합돌봄지원(ICS) 프로그램은 의료와 돌봄 조직이 분리되어 운영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등이 고령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고령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도구를 지원 설치해주고 건강 상태를 통합적으로 돌봄
 -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제공받아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음
- 서덕지구통합돌봄지원(ICS: Intermediate Care Southwark) 프로그램은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로서 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서비스로 운영됨
 - 서덕지구통합돌봄지원(ICS: Intermediate Care Southwark) 서비스는 총 4곳²⁴⁾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동의 운영 모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4개 기관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최적화하여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추진 중

24) Southwark Council Adult Social Care, 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NHS Southwark CCG, Southwark Council Commissioners

〈그림 5-1〉 ICS 돌봄현장



출처: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740402&menuId=MENU00928>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노인이 초기에 치료받을 있게 도와줌으로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 발생
 - 과거에는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여 운영되는 식의 이원화 프로 세트에서 ICS 프로그램을 통해 윈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 적인 운영 가능
- 지역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 을 바꾸는 시도로 평가됨

4. 프랑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스쿨

□ 추진배경

- 기술과 역량 부족은 농촌의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성장을 방 해하는 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역량 부족현상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부족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

기 위한 배경으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게 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스쿨 등장

- 계속되는 지역의 인구고갈 문제는 지역의 경제쇠퇴로 이어지고 단순 노동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되는 동시에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하이테크놀로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정보통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디지털 온라인 전문학교 설립²⁵⁾
 - 프랑스는 디지털 기반의 IT 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모델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구안

□ 추진내용

- 프랑스 도르도뉴(Dordogne)지역에서는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핵심기술을 습득하면서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 교육의 핵심은 농촌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들²⁶⁾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스쿨 형태로 운영
 - 100% 온라인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
 - 비판적 사고, 창의성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을 습득하는 훈련프로그램 또한 동시에 운영되며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체험 및 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수업도 운영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어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IT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5) LEADER의 지원으로 운영됨. LEADER는 유럽연합(EU)의 지역개발 이니셔티브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26) small rural business

- 으로써, 농촌 등 외곽지역의 인구감소 저감에 기여하려는 목적
-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
 - 웹(Web) 베이스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현장형 교육과정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

5. 오스트리아 Web-based Education for Farmer 프로젝트

□ 추진배경

-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에 직면
 - 농업과 빅데이터의 결합은 농산업 모든 과정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 농업에도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소통과 정보획득 방법, 첨단 기술 등을 통해 기존의 농업 전반에 변화 예상
 - 소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지원 필요

□ 추진내용

-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인의 역량 제고, 인적자원 육성, 정보화 촉진과 더불어 IT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농업 정보화를 성취하기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시행
 - 실제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practical solution)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10,000명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인을 돕기 위한 매칭 수업 진행
 - 영농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눈높이 온라인 컨설팅 제공
- 교육 콘텐츠 서비스는 24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서비스로 운영되며 농업에 관련된 전문 강사와 연계·개발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급변해가는 스마트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공유 및 이해 촉진 효과 발생
 - 특히 젊은 계층의 농민들에게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 농사가 가능해지는 길잡이 역할 제공
- 급변해가는 스마트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공유 및 이해 촉진 효과 발생
 - 인터넷을 활용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새로운 판로개척 수단을 익힘으로써 지역농촌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6. 일본 총무성 지역부흥협력대

□ 추진배경

- 2009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도시민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무성이 주관(이하 김현호·박진경, 2019 참조)
 - 도시지역에서 인구 과소 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생활의 거점을 옮긴 사람을 지자체가 ‘지역 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함

□ 추진내용

- 대상지역
 - 대상자의 전출지와 전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 전출지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 내의 도시지역, 정령 지정 도시지역 등
 - 전입지 : 3대 도시권 외의 모든 시정촌 및 3대 도시권의 조건 불리지역
- 절차
 - 대원이 되려면 자치단체의 협력대 모집 정보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에 신청

한 후 전형(서류 전형, 면접 등)을 거쳐야 함

- 지자체가 지역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원으로 활동
- 활동 내용 : 지역 브랜드와 특산품 개발 PR 등 지역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 생활 지원 등

○ 지원내용

- 대원이 되면 1년간 인건비 최대 400만엔(약 4,023만원)을 지원하고 3년까지 활동할 수 있음
-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대원모집, 대원의 활동경비를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함. 3년이 넘으면 특교세 지원은 없지만 계속 거주 가능
- 최종 년도 또는 임기 종료 다음 해의 창업 경비로 1인당 100만엔 지원

〈표 5-3〉 지역부흥협력대의 대원수 및 지자체 수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원	89	257	413	617	978	1,511	2,625	3,978	4,830	5,359
지자체수	31	90	147	207	318	444	673	886	997	1061
도도부현 수	1	2	3	3	4	7	9	11	12	11
시정촌 수	30	88	144	204	314	437	664	875	985	1,050

출처: 총무성 홈페이지

자료: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도입 첫해 89명에 불과 했으나, 2018년 말 997개 지자체에서 4,976인으로 증가
 - 2015년 말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활동기간을 마친 후 약 60%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이 가운데 47%가 취업을 하고 17%가 창업, 18%가 귀농한 것으로 확인(총무성, 2015)
- 총무성이 2년에 한번씩 대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 시행

7. 일본 오츠노미야대학 지역디자인과학부 인재육성

□ 추진배경

- 지역의 인재육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이융합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역활성화의 핵심거점 대학으로서 기능강화를 도모할 필요(이하 내각부,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지역의 마을만들기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 국립대학법 인운영비교부금 연계

□ 추진내용

- 2016년부터, 오츠노미야대학에 「지역디자인과학부(입학정원 140명)」를 신설하여, 지역의 과제를 이해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린 마을만들기 전문직업인을 양성
 - 마을만들기의 프로를 키우는 특색있는文理융합교육 :
 - 「실천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과 마주보는 힘, 지역을 조사분석하는 힘,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힘을 종합적으로 양성(1년차 학부공통 과목 6과목 실시)
 - 지방자치단체, 기업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과제에 도전하는 「지역프로젝트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 문과/이과의 테두리를 넘어, 3개 학과 혼합 그룹이 지역에 나가 각종 조사, 분석, 해결책을 제시
 - 전공과목의 100% 액티브러닝화
 - 토론, 현장조사, 프리젠테이션 등의 액티브 러닝을 도입한 수업을 통해 학생의 주체적,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지역을 디자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실무 응용 능력을 강화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분야횡단적 3개 학과의 인재육성
 - 커뮤니티 디자인학과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이나 제도등을 디자인(행정관, 금융, NPO등)
 - 건축도시 디자인학과 : 실천적인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주거공간을 디자인(건축회사, 설계사무소 등)
 - 사회기반 디자인학과 : 실천적인 건설기술을 바탕으로 사회기반 디자인(기술관료, 컨설턴트등)

〈그림 5-2〉 오츠노미야대학 지역디자인과학부

2016년도 지역디자인과학부 설치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 지역과 대학의 허브가 되는 「지역디자인센터」설립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NPO등과의 연계구축 코디네이트(2016년도 전기 32건)
 -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분석 조사의 제공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현내 분석 데이터 축적,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각종 데이터 제공)

- 전문지식을 가진 교원과의 매칭을 통한 지역 싱크탱크 기능 강화(교원카르테를 작성하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자체, 기업, NPO등과의 코디네이트 기능을 실현)
- 지역의 미래를 과학의 힘으로
 - 마을만들기와 그 기반의 건설과 관련된 폭넓은 전문기술을 배우는 새로운 학문분야 「지역디자인과학」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고, 보다 좋은 지역의 미래를 형성

8. 일본 촌락기능재생사업, 촌락지원요원 파견

□ 추진배경

- 지역에서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촌락이 증가하여 자치회 및 촌락의 기능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이하 총무성, 2015의 과소대책 사례집 참조)
 - 자치회 간의 합의 형성을 통해 지역 협력체의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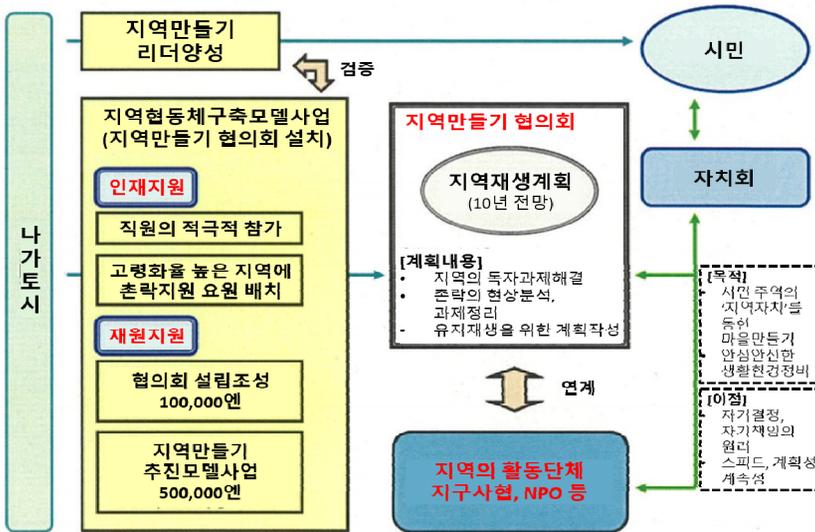
□ 추진내용

- '지역협력체구축모델사업'으로써, 복수의 자치회의 합의하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만들기 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현황파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인적 지원과 재원지원을 실시
- 인적지원
 - 지역 담당 직원의 참가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촌락 지원 요원'을 배치
 - 협의회의 직원을 중심으로 단체 설립의 의식양성, 워크샵/연구회 개최 등 현이 실시하는 인재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견인 역할을 하는 인재 양성

○ 재원지원

- 협의회 설립조성 상한 100천 엔
- 지역만들기 추진 모델 사업비 조성 상한 500천 엔

〈그림 5-3〉 촌락기능재생사업의 흐름



자료 : 나가토시(2017.3), 「제2차 나가토 협동 액션플랜」.

〈그림 5-4〉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촌락기능재생사업」



자료: 총무성(2015), 「과소대책사업(소프트 부문)을 활용한 사업분야별 사례집」.

- 우츠가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활동 예
 - 통행을 방해하는 휴경지의 무성한 대나무를 벌채하여 대나무 숯과 대나무 식초를 제조하는 활동을 실시
 - 야마구치 현립대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써 추진할 예정

〈표 5-4〉 협의회 설립 현황 (2017년 3월 시점)

단체명	인구	65세이상 인구	고령화율	세대수
이타모치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1,295	482	37.22%	554
시라가타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773	291	37.65%	353
토리 마을만들기 협의회	1,267	656	51.78%	587
경관만들기 위원회	1,064	532	50.00%	467
마키 스키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563	259	46.00%	236
사카이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1,489	521	34.99%	688
미스미 시민 협동 추진 협의회	5,374	2,140	39.82%	2,258
히요키 마을만들기 협의회	3,934	1,563	39.73%	1,661
우츠가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761	424	55.72%	374
무카스쿠 지역 협의회	1,362	773	56.75%	720

자료 : 나가토시(2017.3), 「제2차 나가토 협동 액션플랜」.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역주민 스스로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역 활동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여 지역자치 발전에 기여
 - 현재 현내 10개 단체가 설립되어 각각의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실시
- '시의 지역협동체설치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도 말에 약 50%, 2016년도 말에 약 65%를 점하고 있고, 2020년도까지는 8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학계연계, 기업연계를 통한 추진으로 '작은 거점' 형성의 분위기 고취

9. 일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인재 육성지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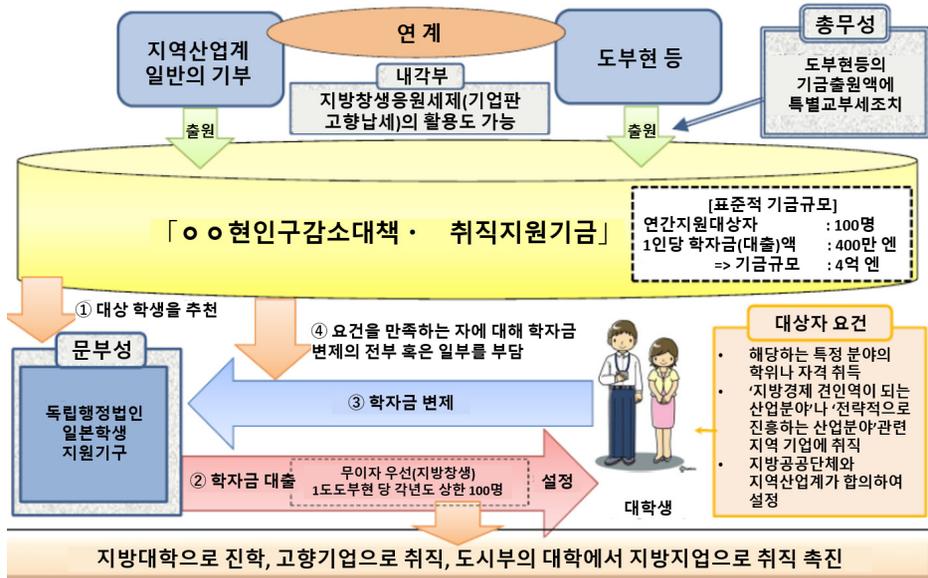
□ 추진배경

- 나라사키현에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현내 취직과 정착 촉진 프로젝트를 시작함(이하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대학 졸업자가 나가사키 현내에 취직할 경우의 학자금 변제 지원 실시 (2016년부터 실시)

□ 추진내용

- 청년의 현내 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변제 지원사업을 제도화
 - 지역의 중핵기업 등을 담당하는 리더 인재의 확보를 위해 현내 산업계와 연계하여 '나가사키현 산업인재육성기금'을 창설하여, 현내에 제조업, 건설업, 관광관련산업, 보험업·금융업등의 분야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학생 때 받은 학자금의 변제를 지원
 - 청년의 현내 취직을 촉진함과 동시에 진학 등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된 인재 U턴 취직으로 연결
- 지원 내용
 - 대학을 졸업하여 현내의 지원대상기업에 취직하여 3년 경과 후에 지원금의 1/2을 지원
 - 다음 3년 경과후 나머지 1/2을 지원
- 현립대학의 대상 학자금 변제액 1/2 (상한 1,400천 엔/인)

〈그림 5-5〉 기금 활용을 통한 학자금변제지원사업의 이미지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원후보자 중 해당 년도 말에 졸업한 현내 취직자 (2016~2019년 : 55명)
- 지방창생 관련 사업분야를 전개하는 기업이 기업판 고향납세를 이용한 지원
- 학생의 학자금 변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년의 현내 취직을 촉진하고 진학 등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된 인재의 U턴 취직을 촉진

제2절 경제회복 사례조사

1. 독일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

□ 추진배경

- 독일정부는 시골마을의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개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제로 디지털화를 선정(이하 Steffen Hess.(2018)를 참조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의 내용을 정리)
-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영향으로 시골지역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와 중앙 및 지방정부는 협업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선정해 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 인구의 유입 가능성 저조, 비즈니스 환경의 취약성 개선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독일의 디지털 빌리지(Digital Villages) 프로젝트 시작
- 독일의 디지털 빌리지는 농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 하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독일의 아이젠버그(Eisenberg), 골하임(Gollheim) 및 베츠도르프 게바르드샤인(Betzdorf Gebhardshain)의 3개 지역을 디지털 빌리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시골마을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음

〈그림 5-6〉 독일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및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



〈독일 스마트 빌리지 개념도〉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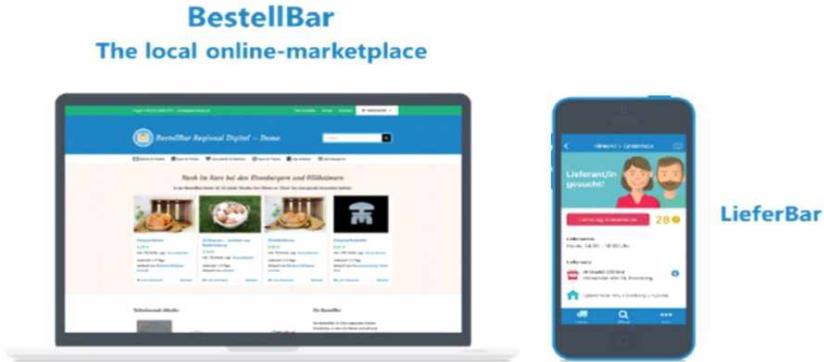
출처: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de.pdf

□ 추진내용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는 2015년 독일 내무부와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까지 총 450만유로 투입 완료
-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역상품 판매 및 교통, 통신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의 핵심
- 독일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
 - 첫째, 지역상품 및 지역제품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베스텔바(BestelBar)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디지털 빌리지 마켓플레이스 베스텔바(BestelBar)에서는 지역의 빵집, 유기농 야채상 등 지역 고유의 식료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주로 참여
 - 둘째, 베스텔바에 주문이 생성되면 물품을 배송 및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자동적으로 배송상태 및 배송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리퍼바(LieferBar) 앱 개발 및 도입
 - 셋째, 지역의 뉴스를 전달하는 DorfFunk 앱 서비스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모든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도하면서 동시에 앱 설치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매체로 활용

〈그림 5-7〉 디지털빌리지 마켓플레이스 베스텔바(BestelBar)와 배달앱 리퍼바(LieferBar)



출처: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de.pdf

〈표 5-5〉 독일 디지털 빌리지 주요 서비스

서비스	내용
베스텔바(BestelBar)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등록하는 지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배달앱 리퍼바(LieferBar)	베스텔바에 주문이 생성되면 리퍼바에도 자동 등록, 배송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전달
디히탈러(DigiTaler)	배달 자원봉사자에게는 사용가치가 높은 가상화폐 디히탈러(DigiTaler)를 지급,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봉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
DorfNews	지역 뉴스 및 지역 이벤트 공지가 가능한 웹포털로, 웹과 소셜 미디어의 뉴스 소스를 자동으로 통합하여 서비스
DorfFunk앱	DorfNews 뉴스포털에서 특정 관심 지역에 대한 모든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앱
디지털빌리지 플랫폼 운영	디지털 빌리지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마을과 지역정부를 지능적으로 연결

출처: EU(2017), Action for smart village;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 빌리지'를 참고로 정리

〈그림 5-8〉 독일 디지털 빌리지 플랫폼



출처: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de.pdf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생생한 실험실 접근법 (experimental approach)을 사용
 - 프로젝트 첫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컨셉을 정립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에는 마을지역 출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전문가, 지역공무원,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혁신 인프라와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시도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독일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생태계(rural

ecosystem)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성장 구현

- 성공요인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 인프라와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
 - 리빙랩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현실성 높게 구성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방정부간 의사소통에도 크게 기여
 - 디지털 서비스는 IT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2. 독일 ‘작은 생각(thinking small)’의 힘

□ 추진배경

- 1970년 석탄, 철강과 같은 산업 중심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 하면서 아테나 지역의 일자리 수는 9,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소, 인구 역시 32,000명에서 18,000명으로 급격히 감소
 - 이러한 인구감소는 주변지역 상권쇠퇴로 이어졌으며, 물리적인 인프라 (physical infrastructure) 시설의 쇠퇴 또한 노동가능 인력의 유출에 영향을미침
- 1990년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아테네 지역은 ‘recreating’이라는 전략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주력

□ 추진내용

- 스포츠센터, 도서관, 학교 등 수많은 서비스 시설들이 문을 닫고 도시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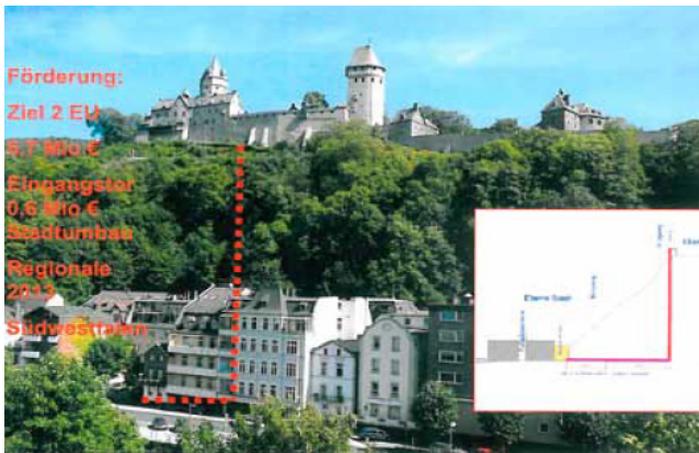
- 점 쇠퇴해 가고 있을 무렵 자선재단(charitable foundation)으로부터 인구고령화에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후원이 시작됨
- 프로젝트는 어떻게 아테네 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연구로 10개의 전략과 300개의 구체적인 시책(actions) 시행
- 협력적인 활동(collaborative actions)을 전제로 아테네 지역의 노령인구의 수요(needs)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책에 집중
- 이러한 재구상(re-envisioning)의 과정을 거쳐 아테네 지역은 ‘어떻게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전략을 구상
 -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과 작은단위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의 투자·집행은 시민들이 더욱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더욱 개선되어지는 모습보임
 - 시민주도적인 활동(citizen-led action), 시민간의 협력(working collaboratively)이 마을을 재생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
- 재구상(re-envisioning) 과정은 마을의 많은 자산들을 활용한 사례의 확산으로 이어짐
 - 아테네 마을 강가 앞의 보기 좋은 전망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 및 카페 등을 오픈하여 인구유입 유도
 - 마을 위 절벽에 위치한 성(castle)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
 -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 네트워크를 통해 방문자가 공공기관 건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재는 빈 상가건물을 예술·공예작품 이나 팝업스토어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계획 중

〈그림 5-9〉 Courtesy of the City of Altena, Germany



- 마을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EU로부터의 지원금, 민간의 협력지원, 성(castle)소유자의 협력과정을 통해 이뤄진 성과

〈그림 5-10〉 Courtesy of the City of Altena, Germany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독일 아테나 지역은 지방정부로부터 분권화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 중 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업가적(entrepreneurial)전략을 바탕으로 관광과 로컬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재생계획 설계

- 정부에서 제공되는 어린이집(childcare) 서비스 시설의 수는 적었지만 최고의 시설과 케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테나지역에 위치한 중학교(secondary school) 역시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고 여러 장비 시설들을 보충, 우수한 수업이 진행되는 등의 좋은 평판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결과 보임
- 아테네와 같은 작은 마을은 주정부에서의 지원으로 구조(rescued)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스스로 노력해서 생존하는 개별 지자체 자체대응(regional support)이 필요²⁷⁾
- 도시축소 현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리더십(leadership)에 주목
 - 시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핵심
 - 시민, 정치인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비협조적인 태도(denial)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
 - 아테네 지역 시장(mayor)은 시민간의 협력적인 개입(collaborative interventions)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시민들의 개입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건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가능하게 함

3. 이탈리아 트렌티노(Trentino) 사회적 경제

□ 추진배경

-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지역 리더의 부재로 인해 농업환경의 위험성이 증가²⁸⁾
-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인력난, 자금난, 시장협소 및 경영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 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

27)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제로섬(zero-sum) 게임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비유

28) 이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1467-8292.2012.00464.x>

품개발 또한 어려운 측면 존재

- 이탈리아의 트렌티노 지역의 인구는 약 50만명으로 1인당 GDP가 3만 700유로로 유럽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산간 및 농업 지역임
 - 인구의 약 50만명 중 27만 명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있으며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나영삼, 2018)
- 트렌티노 협동조합연맹(Cooperazione Trentina)은 농업인 협동조합,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급식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장애인 돌봄협동조합, 농업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음

□ 추진내용

- 트렌티노 협동조합연맹은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 금융협동조합의 전략적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대출제도를 도입해 운영
-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농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창출
- 소비자협동조합은 마을매장을 지역소비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마을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 총 379개 매장이 운영중에 있음
- 도매유통협동조합인 SAIT는 마을매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로 물품을 로컬푸드매장으로 공급하는 역할
 - SAIT 조합원은 총 121천 명이고 총 380개의 직판장에 물품을 공급

- 연구기관인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담당하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사회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어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 창출
- 트렌티노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협동을 통한 시장의 개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핵심요소라고 언급
 - ‘교육받은 자가 다시 협동조합으로’ 라는 슬로건 하에 이뤄지는 교육이 트렌티노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4.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 추진배경

- 지역관리기업(régie de quartier)은 1970년대 프랑스 루베(Roubaix)시 알마야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전투적인 지역철폐반대운동에서 기원²⁹⁾
 - 지역철폐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군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구역을 재구조화시키는 조직으로서 도심민중작업장(atelier populaire urbain : APU)을 설립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시민단체로 성장
- 이후 도심의 쇠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바라

29) 이하 김신양(201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는 주민들과 지자체, 지역내 주요 주체들이 합의하여 지역관리기업을 설립 해왔음

□ 추진내용

- 지역관리기업의 활동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관리기업의 사명은 ‘지역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며, 보살피는 일’이라고 규정
 - 이 과정에서 지역관리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족했던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
- 경제사업
 - 지역관리기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사업은 지역관리기업의 사회적 사명을 실현하는 특별한 방식
 - “다함께 보다 잘살기 위한” 삶의 공간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경제사업을 통해 지역관리기업이 자리한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는 일자리를 창출
 - 경제사업의 대부분은 지역관리기업의 중요한 파트너인 지역의 사회적주택 사업자나 지자체에 의해 발주된 각종 수선, 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근린서비스: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대응으로 가사서비스, 공동기계작업장, 공동카센터, 협동카페 및 식당, 개인과 단체를 위한 교통서비스, 세탁방, 다림질, 제봉, 고물상, 구멍가게, 멀티미디어 센터, 재활용, 이발소, 집수리, 긴급수선 등의 활동에 참여
 - 시설물 유지관리: 녹지공간 관리, 외부공간 유지, 마을에서 위탁받은 시설물 유지활동, 공동공간에 대한 소규모 수선 및 개보수, 쓰레기수거함관리, 폐기물 수립, 분리수거 촉진, 공가 관리 등
- 지역사회사업
 - 지역관리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사업이 포함

- 중재활동: 지역관리기업은 중재활동(mediation)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안정, 예절, 연대, 상호이해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도모하는데, 중재활동을 하는 중재자(mediator)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의범절을 전파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 중재활동의 유형으로는 낮시간 감독자, 야간 감독자, 근린 감독자, 거리 감독자, 애완견 훈련가, 주차 감독자, 도심 환경요인, 문화간 중재 등을 포함
-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관리기업은 자연스럽게 지역관리기업과 주민, 참여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내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
-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주민조직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크리스마스나 카니발 축제 때 지역꾸미기, 발코니 화단 콩쿨, 지역의 포럼이나 축제에 참가, 만찬이나 연회의 조직, 일상의 삶에 대한 주민상담, 공동로비의 운영과 활성화, 마을 공동휴가 프로그램 등을 포함
- 직업훈련과 사회적 일자리: 고용안정센터 및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를 운영

○ 지역관리기업의 재원

- 지역관리기업은 약 80%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다음의 재원으로부터 재정을 확보
- 사회적주택사업자나 지자체와의 공공시장 계약
- 경쟁부문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약
- 기업의 하청을 받거나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 지자체의 보조금 또는 주택공급 단체의 보조금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주민 우호적 활동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

- 지역관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라는 집합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역관리기업의 활동들은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우호적으로 운영
 - 비록 활동들은 시장가격으로 제공되지만, 비용을 절감시키는 자원활동을 포함함으로써 동일비용에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주민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수혜도 받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서 유지와 수선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파손을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 창출
-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발전 촉진
- 지역관리기업의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함으로서, 경제적 흐름은 내부 순환을 이루고, 이는 지역발전을 견인
 -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하는데 개입함으로써, 지역관리기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
- 지역 내 사회적 관계 형성 촉진
-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일하는 사람들과 수혜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친밀성을 통해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를 강화시키고, 집단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발전
 - 경제적인 능력, 제도적 기회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 덕분에 지역관리기업은 스스로가 근린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관의 프로젝트 수행자들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지자체와 지역관리기업의 연계 고려 가능
- 프랑스에서는 지역관리기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것을 희망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관리기업의 모델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5. 벨기에 알른지역 사회적기업 Terre

□ 추진배경

- Terre는 6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며 30여년 된 기업임
 -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거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지만, 제 3세계 등 타 지역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Terre는 오랜세월 동안 민주적·참여적 기업운영 뿐만 아니라 세계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회적기업 사례임

□ 추진내용

- 최소한의 급여차이와 책임 중심의 구조
 - Terre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녀 급여차이가 없고 역할과 책임의 차이만 있는데, 급여수준 차이는 최저와 최고의 비율이 1:1.7 정도
 - 급여 책정 기준은 연수나 학위가 아닌 책임의 정도인데,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기술자라도 책임을 지는 지위가 아니면 운전담당 책임자보다 급여가 적음
 - 책임자를 정하는 방법 또한 일방적인 임명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3개월간의 실험기간을 두고 업무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지원자가 적격이라고 판단될 때 정식 임명
- 연대적 경제를 실현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대안경제를 형성
 - 필리핀에 Terre와 같이 주민 임파워먼트를 위해 일하는 유기농생산공동체 PDJ라는 조직이 있는데 1996년 Terre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Terre에서 지원
 - 지금은 오히려 PDJ가 더 발전하여 Terre가 운영에 시사점을 얻기도 함
 - 브라질 같은 경우 여성협동조합은 자원이 부족하여 Terre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음

- Terre는 여러 대륙과 제3세계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활발한 연대사업을 추진 중

○ 자원봉사 활성화

- 전문가를 원하는 다른 NGO들과는 달리 Terre는 순수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초점을 두며, ‘자기소매가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활용
- 조직의 공식적 도는 기업적 틀로 진행할 수 없는 실험 또는 연구과정에 있는 일에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용하여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서면 공식적 일자리 창출
- 즉 자원봉사를 일종의 ‘실험실’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속가능성 모색

○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자체 조사연구

- 2명의 연구원을 두고 노동조직 효율화 및 전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 민주적 참여경영 실현

- Terre의 참여경영 구조는 총회, 주간회의, 신입사원 정보제공, 월 정기모임,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총회는 연 3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주간회의는 의무사항
-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의사소통 담당자를 두어 기업의 문화, 전통, 논의내용 등에 대해 설명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민주적 사회적기업 운영의 모범 모델로 평가

- 민주주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고 임파워먼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자 노력
- ‘민주주의’란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섞여야 하고 이걸 합친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 믿음에 기반하여 조직 구성 및 운영

- 세계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추구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 3세계 등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대안경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6. 일본 새틀라이트 오피스(Satellite Office) 프로젝트

□ 추진배경

- 도쿠시마현으로부터의 전국 굴지의 고속브로드밴드환경의 실현과 사무실 개설·운영비용의 보조(통신비, 옛 민가(古民家) 개수비용 등)등의 지원을 활용하여, 과소지역에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정비, ICT 벤처기업의 유치를 추진(이하 내각부,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추진내용

- 전국 굴지의 고속브로드밴드환경을 조기 실현
 - 현이 총무성의 지원을 활용하여, 커버율 98.8%의 FTTH망과 공설민영방식의 광CATV(가입률88.3%)를 전역에 설치
- 현의 적극적인 옛 민가(古民家) 개수비, 통신비 지원
- 「카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지속적인 전개
 - 장기간 예술가나 영상크리에이터의 이주를 추진해온 지역 NPO법인 '그린바레'가 도도권의 IC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본격 전개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진출기업·이주자의 증가

- 토쿠시마현내 8시정에 40회사가 36거점에 진출
- 2016년 4월~9월동안 156세대 234명이 이주
- 60명 이상의 지역고용 창출
- 현이 오피스 개설 및 운영비의 지원(고민가 개수비, 통신비등)을 충실히 이행
- 멘토의 존재
 - 지역 NPO법인 '그린바레'의 오오미나미이사장의 열의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여러 문제를 극복해나감

〈그림 5-11〉 옛 민가와 창고를 개조한 토쿠시마현 카미야마초 새들라이트 오피스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7. 일본 옛 민가·빈 점포 등을 활용한 창업 촉진 마을만들기

추진배경

- 효고현 탄바시시는 역사가 있는 옛 민가가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지역 식재를 사용하는 레스토랑 등의 출점을 촉진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이하 내각부,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시와 마을만들기 회사(㈱마을만들기 카시와라)가 연계하여 점포의 개량정비사업을 추진

〈그림 5-12〉 효고현 탄바시 마을만들기 - 재임대 사업 사례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 추진내용

- 마을만들기 회사가 레스토랑을 직영
 - 포목 점터를 이탈리아 요리점으로 오픈 (연간 매출 3,000만 엔 초과, 방문객수 1만 4천명 초과로 성황, 개점 3년차부터 흑자)
- 지역과제 해소와 신규출점을 동시에 달성
 - 산림의 사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한 사슴을 지역 자원으로서 활용하여 탄바시산 사슴 고기 요리점을 오픈
 - 사용되지 않았던 역사문화시설에 프렌치 레스토랑을 출점하여 I턴 이주자가 지역에 취업
 - 마을만들기 회사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개수하여 출점자에게 재임대 (2000년~, 17건)
- 마을만들기 회사가 경관형성의 코디네이터
 - 죠카마치의 마을풍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회사가 시와 지역주민의 코디네이터가 되어 상점가의 점포 등을 역사 깊은 상가거리로 외관을 통일하는 경관정비사업을 추진(2001년~, 41건)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마을만들기 회사가 주체가 되어 행정은 지원
 - 빈집, 빈 점포의 소유자와의 협의부터 신규출점의 유치까지 마을만들기 회사가 주체적으로 실시
 - 점포 개수에 재정지원을 시가 지원
 - 마을만들기 회사가 시와 지역주민의 코디네이터가 되어 경관정비사업 추진
- 종합 전략에서 관련 KPI 설정
 - 챌린지 카페를 통한 신규창업 건수 20건/년(2019년)
 - 중심시까지 신규 창업자 2건/년(2019년)
- 타 지역에 있었던 '탄바 챌린지 카페'를 이전 예정
 - 신규출점이 활발한 카시와 지구로 이전하여 출점·창업을 촉진시킴
- 새로운 컨셉(외부에서 일부러 방문하고 싶어지는 가게 만들기)으로 옛 민가를 개수하여 지역 식재 레스토랑을 사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8. 일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옛 민가 활용 숙박시설 정비사업

□ 사업배경

-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빈 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 만들기를 고심하기 시작(이하 내각부,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클라우드 펀딩(투자형)을 통한 자금조달을 이용하여 옛 민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 총무성의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 교부금 제도를 활용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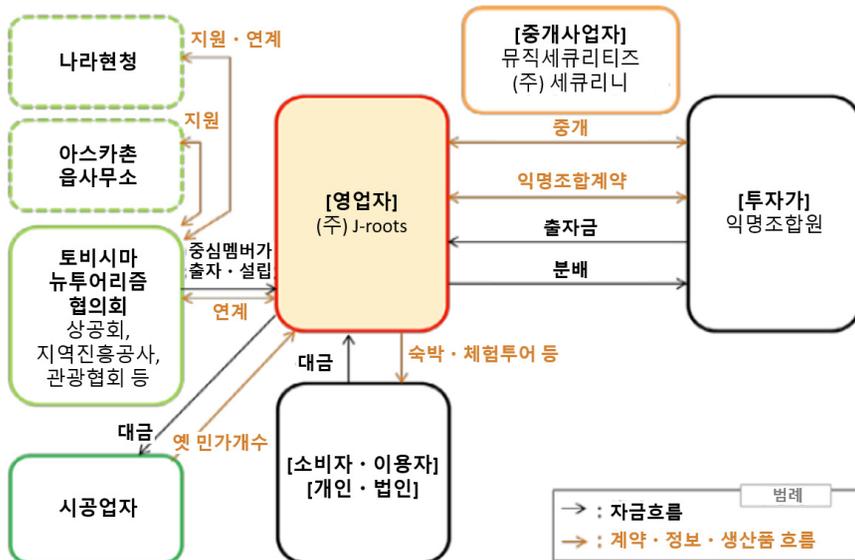
- 공가를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 만들기

- 아스카촌은 역사적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
- 역사풍토보존지구로 건축제한이 엄격하여 새로운 건설이 어려운 상황
- 마을에 존재하는 미활용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2011년 아스카촌상공회 및 촌내 관계기관이 아스카 뉴투어리즘 협의회를 설립

○ 클라우드 펀딩(투자형)을 통한 자금조달과 홍보

- (주)J-roots가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옛 민가의 리노베이션 비용(500만 엔), 내장·설비비용(200만 엔), 운영자금(800만 엔)의 일부로서 1,500만 엔의 자금달성
- 펀드 설명회 등을 통해 숙박시설의 개업 전부터 홍보, 팬 만들기
- 2015년 4월, 'ASUKA GUEST HOUSE' 오픈

〈그림 5-13〉 나라현 아스카촌 프로젝트 계획도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민관에 의한 체제 만들기와 관광객 유치 태세 정비
 - 2011년 아스카촌 상공회 및 촌내 관계기관이 아스카 뉴투어리즘 협의회를 설립하여 민가 스테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외의 교육여행을 유치
 - 2014년 협의회 멤버를 중심으로 옛 민가를 활용한 숙박시설의 운영주체로서 (주)-roots를 설립, 'ASUKA GUEST HOUSE'를 모델 케이스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공가 활용을 기대
- 자금조달을 위한 홍보
 - 자전거 투어와 향토요리 등을 포함한 펀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아스카촌을 방문하여 아스카촌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아스카촌의 매력을 어필하여 숙박시설 개업 전부터 팬 만들기를 실시
- 클라우드 펀딩(투자형)을 통해 옛 민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만들기의 자금의 일부(1,500만 엔)를 조달

〈그림 5-14〉 나라현 아스카촌 옛 민가활용 게스트 하우스



자료: (주)세큐리티 홈페이지 (<https://www.securite.jp/fund/detail/522>)

9. 일본 IoT를 활용한 새로운 기업간 연계 촉진

□ 추진배경

- 상품을 소량 제작하고자 하는 브랜드, 제조회사, 소매점 등의 사업자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직원 혹은 봉제 공장과의 양방의 니즈를 매치시킨 기성복 산업의 새로운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이하 내각부,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프로, 아마추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복 생산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추진
- 쿠마모토현 쿠마모토시는 인터넷과 IoT 등 테크놀러지를 구사하여 일본 최초의 의복 생산 플랫폼 사업을 개시함(2014년 3월)

□ 추진내용

- 다양한 의류 생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일본 내외의 '중소봉제공장'을 이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마켓의 개척부터 생산공장의 네트워크 까지 데이터로 프로세스를 관리
- 지금까지 도매업자가 담당했던 역할을 코어기업이 일관하여 맡아, 유통 경로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상품의 소량생산·단기간·저가격을 실현
-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고, 모든 업무는 인터넷 상의 개인 페이지 '마이 아틀리에'에서 실시
 - 현재, 봉제·가공의 제후 공장은 일본 내 200개소 달성
 - 향후, 단말을 통한 라인관리/주문관리, 센서도입, CAD/입체 재단기 등의 적극도입을 통해 IoT화를 한층 강화하여 ASEAN을 중심으로 해외 마켓 및 공장 인프라를 획득하고자 함
- 종업원은 인턴·아르바이트 포함 20명
 - 기성복 사업자의 요구를 듣는 콘세르쥬, 디자인을 CAD로 데이터화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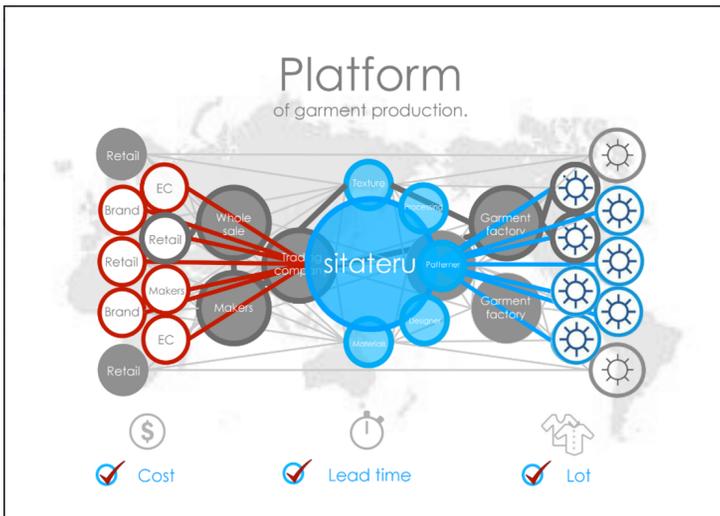
패터너가 재직

- 즉시 가동 가능한 공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리드 타임(발주부터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1.5개월로 단축
- 제3자 할당증자를 실시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성복 공장 전용 어플 개발, 클라우드 플랫폼 강화 등에 충당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사업자와 제봉 공장을 IoT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복잡, 다중 제조였던 기성복 유통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
- 사업자 측은 '단납기·저비용 그리고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공장 측은 '유희시설의 활용과 이익률의 향상'이라는 다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서비스 확립

〈그림 5-15〉 사업자(브랜드)와 생산자(공장)를 이어주는 매칭플랫폼 시타테루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제3절 공간혁신 사례조사

1. 스페인 카탈루냐의 COWOCAT Rural 프로젝트

□ 추진배경³⁰⁾

- 심각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연계·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collaborative space) 오픈³¹⁾
 - 이들은 협력공간에서 지역의 잠재되어 있는 자원, 유휴공간,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그림 5-16〉 COWOCAT Rural 프로젝트의 협력공유 공간



출처: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2018). Digital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Services

□ 추진내용

- COWOCAT Rural 프로젝트의 핵심은 협력공유공간 안에서 지역주민을

30) Begona Garcia. (2018). Digital Villages German Working Document,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enrd.ec.europa.eu/projects-practice/cowocatrural-promoting-coworking-rural-catalonia_en

31) 현재 스페인 지역에서는 총 14개의 공유협업공간이 운영되고 있음(2018년 기준)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전문 인력, 혁신적인 인력, 신생창업기업(new entrepreneurs)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개발에 집중하며 마을특성이 반영된 사업개발을 우선적으로 선정
- Cowocat Rural 프로젝트단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지역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에 의해 적극 연계 추진됨
 - 지역활동그룹(LAG)은 우수한 인적역량을 갖춘 지역 활동 그룹으로써 다양한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전략을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 담당
- Cowocat Rural 프로젝트를 통해 공유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은 마을(rural area)내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업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한가지 형태(one-size-fit-all)의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으며 지역특성과 서비스 수준에 맞춰진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지역주민이 원하는 마을사업이 상향식(bottom-up)의 방법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 지역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owocat Rural 프로젝트단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획 및 사업은 성공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전략이 제시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경제³²⁾(network economies)효과와 집적경제³³⁾(agglomeration economies)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32)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연계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 기대

33) 지역간 협력으로 동종 업종간의 직접을 통해 거리비용 감소 및 학습효과 기대

2. 벨기에 Multi-Service Hubs센터

□ 추진배경

- 작은 마을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멀티서비스를 구축³⁴⁾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는 접근 용이한 공공시설들이 위치해 있지 않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은행업무 우편업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설립
 - 기존의 행정수요 이외에 생활혁신공간을 조성하여 복합공간을 제공

□ 추진내용

-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에 증진키기 위한 목적으로 멀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멀티서비스허브(Multi-service hubs)를 설립하였음
 - 노인들을 위한 케어 서비스, 노인전용 커뮤니티센터, 식사공간, 휴게공간,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시설은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 법인단체(NGO)에 의해 관리되어짐
 - 정부와 비영리 조직간의 파트너십 체제 구축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벨기에의 멀티서비스허브(Multi-Service Hubs) 센터는 현재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De Lovie 라는 단체에 의해 지원되어짐
- 멀티서비스허브(Multi-service hubs)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발시키는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34) OECD(2010). OECD Rural Policy Reviews: Strategies to Improve Rural Service Delivery.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cfe/regional-policy/oecd-rural-policy-reviews-strategies-to-improve-rural-service-delivery.htm>

- 주민수요특성을 고려해 로컬 상점(local shop) 등을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창출
- 프로그램은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층이 이동 없이 지역내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문화, 체육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 또한 동시에 운영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마을 내 멀티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
 - 설치기준 등은 법적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계획 의지 하에 맡겨져서 운영되어짐
-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향상, 생활 서비스의 혜택, 운영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기대
-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활동거점으로 활용
 -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생활이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행정 및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 제공

3. 스페인 바로셀로나 On-demand 셔틀버스

□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곽 지역의 인구 감소현상은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비도시지역은 지역내·지역간 연결성이 부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음
 - 또한 공차가 많고 배차간격이 넓어 버스 보조금이 과다로 지출되고 있는 반면에 이용자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온디맨드 (On-demand bus) 셔틀버스 프로젝트 도입

-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개념 하에서 제안된 온디맨드 셔틀버스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공급 운영방안으로 대두
- 첨두시간이 아닌 경우 교외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외지역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가능 효과 기대
 - 많은 농촌지역에서 대중교통서비스가 항상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해결책으로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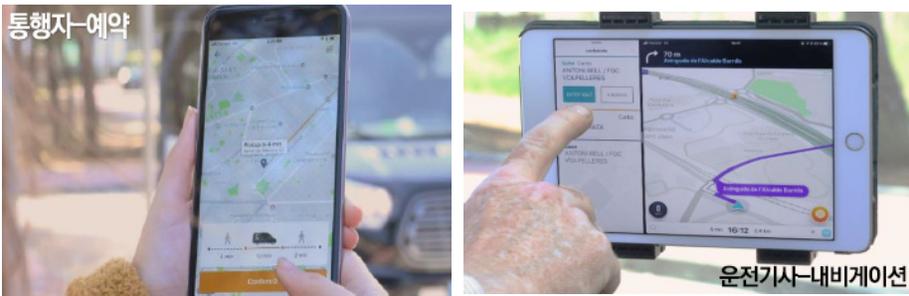
□ 추진내용

- 온디맨드 셔틀 버스를 지자체 및 교통계획가 및 컨설팅 회사와 제휴하여 운영
 - 지역택시회사와 협력하여 추가지원 제공가능하며 전기자동차와 결합하여 지역의 대기 질을 향상시키고 그린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
- 승객 수를 선택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면 차량의 도착시간과 목적지의 예상 도착시간이 제공되면서 동시에 운전기사는 픽업 포인트와 최종목적지까지의 정보를 제공받음
 - 앱으로 통행을 요청하는데 30초도 채 걸리지 않으며 운전자를 픽업 위치로 안내해 효율적인 운영가능
- 직접 원하는 노선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노선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배차간격이 긴 버스 노선에 온디맨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줌
- 많은 농촌지역에서 대중교통서비스가 항상 실행가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디맨드 버스 프로젝트는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필요할 때만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연료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촌 사용자의 75%가 Shotl App을 이용해 라이드를 요청했으며 26%는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사용되는 Shotl App



출처: <https://shotl.com/news/shotl-launches-in-malaga-spain>

4. 핀란드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 추진배경

- 핀란드는 전 인구의 약 1/3이 시골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의 기반시설 노후와 및 감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 시골지역 상점 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0%가 감소하였으며, 마을학교, 우체국 등의 기초시설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³⁵⁾

- 핀란드 정부는 이러한 농촌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화’에 초점
 - 2013년 총리실은 지식기반 전략연구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25만유로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시골 마을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및 다양화, 그리고 시범적용 연구’를 추진
 - 이 연구에 지역개발컨설팅(MDI), 핀란드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였고, 시범적용을 통해 농촌 지역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 추진내용

- 시골 마을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및 다양화, 시범적용 연구 주요 내용
 - 지역 주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디지털 역량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디지털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시사점 제시
 - 무엇보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정보 소외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노력의 필요성 강조
- 시골 지역의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지식정보와 지역 요구사항의 반영
 - 공공부문은 공통 플랫폼 구축 및 DB 접근 허용, 서비스 개발 관련 디지털 지식과 경험을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 주요 역할
 - 또한 디지털화의 경제성 지표를 발굴하여 더 많은 참여를 통해 디지털화의 확산 및 경제적 효과 창출 지원

35)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Smart Countryside study Finland Working document”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fi.pdf),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을 참고로 정리,

- ‘시골 마을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정부방안’ 수립
 -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1월 정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크게 4개의 섹션을 포함
 - 시골마을 내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 환경을 조성
 - 전자정부 등 디지털 서비스와 마을·교통·운송의 결합
 - 스마트 워크 및 스마트 학업
 - 마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디지털화
- 2017년 11월 AR, AI, IoT 등 지능정보 기술의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 디지털 인프라 전략’을 수립
 - 2025년까지 핀란드의 광대역화와 고품질의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표 5-6〉 핀란드 지역개발-스마트빌리지 프로젝트

하위 프로젝트	주요 내용
M6.2 - 시골마을의 비농업 활동을 위한 창업 보조	디지털화 역량 구축 및 서비스 전문 회사의 창업 지원, 정서적·심리적 훈련 서비스(e-러닝)의 디지털화 등
M6.4 - 시골마을의 비농업 활동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화 (티켓 판매, 신문, 인쇄) 등
M7.3 광대역 인프라 구축, 광대역 접근성 및 전자정부 서비스	7개 지자체의 디지털화 된 서비스 마케팅, 비디오 링크를 통한 지자체 고객 서비스, 디지털 격차해소 프로젝트 등
M7.4 - 여가와 문화를 포함한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서비스 포털 구축 및 수행업체 지원,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M16.10 - 스마트 빌리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비즈니스 그룹을 위한 계획, 제품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침 및 컨설팅 등

출처: EU, 2017, Action for smart village;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 빌리지’를 참고로 정리

- 2018년 초, ‘스마트 빌리지 2020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미래의 농촌 시골 지역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 최우수 스마트 빌리지는 2019년 말에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기준은 서비스의 다양성, 해결책의 혁신성, 적극 참여한 마을사람들의 수 등으로 구성
- 핀란드 지역개발본부(RDP)는 2014~2020 총예산 중 7.6억 유로를 ‘디지털화와 사회 혁신을 통한 서비스의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입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농촌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 촉진 수단으로 ‘디지털화’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화 관련 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핀란드 정부는 농촌 시골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마을, 교통, 운송 등을 결합하고, 스마트 워크 및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유도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의 통합적 발전 및 활성화 모색

5.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 추진배경

- 이탈리아 정부는 교육, 보건, 교통 등 주요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2020년 지역개발전략(NSIA)’을 수립·시행³⁶⁾
 - 지역개발전략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비스 개발, 창업지원, 정보격차해소 및 사회통합 등을 포괄
 - 유럽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유

36)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ner Areas Italy Working document”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it.pdf),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을 참고로 정리

플랫폼, 인적역량 기반위에서 지역개발전략을 추진

□ 추진내용

○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전략의 주요 내용

- 스마트 빌리지 전략은 4가지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

① ICT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초중등학교 및 직업훈련, 교통 및 운동서비스,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5개 핵심 분야(토지관리, 토속식품, 재생에너지, 자연문화유산, 수공예품)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② 국가-지방-지역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 촉진

③ 모든 유럽기금(ERDF, ESF, EAFRD, EMFF)과 국가기금의 투자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개발

④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를 통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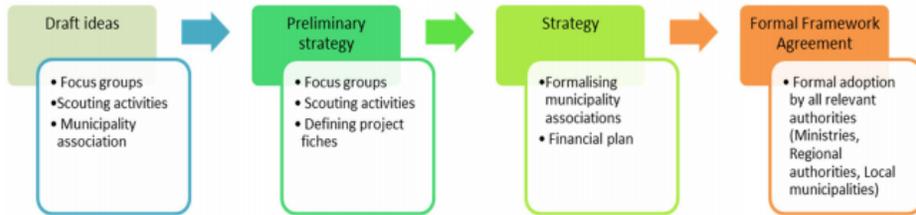
- 스마트 빌리지 전략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컨셉-초안-전략으로 구체화

- 컨셉 및 초안 구성 단계: 각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커스 그룹 활동에 참가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 포커스 그룹 활동은 지역개발, 의료 서비스, 교육, 교통/운송서비스의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각각 3인의 지역활동가와 정부측 활동가 1인으로 구성

- 주요 목적은 지역 서비스 혁신 지원, 인구감소 및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그림 5-18〉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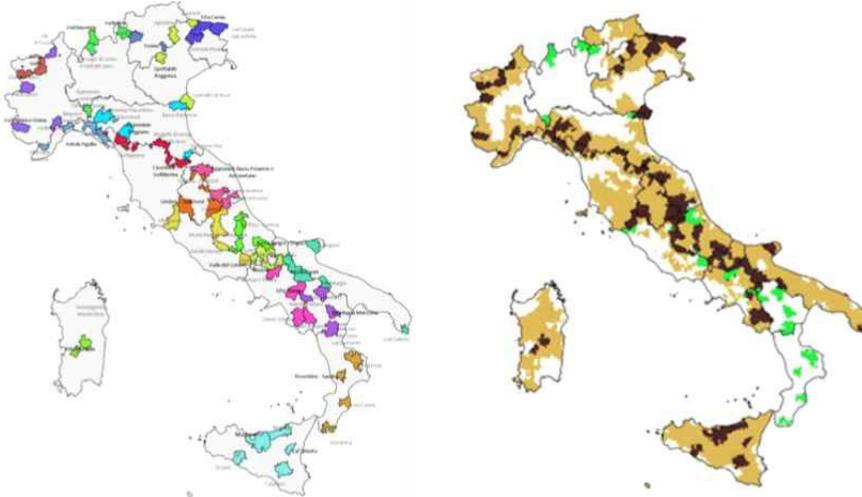
출처: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it.pdf

- 스마트 빌리지 추진에 있어 LEADER 방식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해가는 지역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s, LAG)을 적극 활용
 -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LEADER 방식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 영향력 강화
 - 지역활동그룹(LAG)은 스마트 빌리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적합한 LEADER 방법과 프로젝트에 많은 경험을 보유
 - 따라서 우수한 인적역량을 갖춘 지역활동그룹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스마트 빌리지 전략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견인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2017년 4월말, 총71개의 시범지역(31)을 선정, 이는 1,066개의 마을(국토의 16.7%), 210만 주민(전인구의 3.5%)을 포함
 - 시범지역 프로젝트 평균예산은 1740만유로(약23억원), 스마트 빌리지 전략에 既승인된 11곳에는 1억 9,100만유로(약 2,500억원)를 투입
 - 알프스 산악지역의 커뮤니티 카풀, 로마냐의 중등학교 원격 교실, 폴리세의 원격의료진단, 시실리의 재난 등 다수 프로젝트 수행
-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높은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 활동그룹을 연계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성을 증진 하는데 기여

〈그림 5-19〉 이탈리아 스마트 빌리지 추진지역 및 지역활동그룹 활동지역



〈스마트 빌리지 추진지역〉

〈지역활동그룹 활동지역〉

출처: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it.pdf

6. 일본 빈집을 활용한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 추진배경

- 오카야마현의 신조촌의 생활서비스는 버스로 약 40분(하루 6편)이 소요되는 인근 마니와시에 대부분 의존(이하 이병기, 2017의 내용을 정리)
 - 마을 내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었고, 고등학교나 식품판매소 등의 통학과 쇼핑도 마니와시에 의존
- 신조촌의 중심부, 이즈모 거리는 기차역 마을로써의 역사적인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
 - 오카야마현 신조촌은 내각부의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한 마을 내 생활기능을 집약화시킴

□ 추진내용

- 2017년 지역재생법 개정에 따라 일본 내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작은거점”을 형성³⁷⁾시키고, 장래 지역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목표: 2020년까지 ① 지역주민의 활동·교류·생활서비스 기능의 집약의 장으로써 마을거점을 형성하는 마을 개소수 1,000개소 형성 ② 마을거점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한 주민의 지역운영조직 3,000단체 형성
 - 4대 기본전략과 재정지원방안
 - ① 마을거점 내 진료소, 어린이집, 공민관, 상점, 주유소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집약
 - ② 우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는 농림수산업 진흥
 - ③ 마을거점과 마을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 및 배송 시스템 구축
 - ④ NPO 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생담당 주체 확보
 - ⑤ 중앙부처의 마을거점 형성을 위한 재정지원
 - 지방공공단체는 작은 거점마을 조성사업을 담은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시정촌은 사업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한 평생활약마을 형성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작성에 의해 법령의 특례조치를 이용할 수 있음
- 빈집을 활용한 마을 내 생활서비스 기능 집약화

37)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즉 의료·간병, 복지, 교육, 쇼핑, 공공교통, 물류, 연료공급 등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서비스를 일정지역에 모아 주변 마을과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

- 내각부 사업: 텔레워크를 위한 공동시설 정비와 고령자용 생활지원 시설 정비를 통한 마을 내 기능 집약
- 마을단독사업: 기차역 주변 신선식품 판매기능을 추가하여 식품소비를 촉진시키고, 마을 내 순환을 위한 차량정비

〈그림 5-20〉 작은 거점마을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도



자료: 일본내각부(2016), “國における 小さな拠点づくりの取組”
 이병기(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인근 마니와시로의 인구유출 및 상업·교육시설 이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점 정비
 -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시설과 고령자용 생활지원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능을 집약화하고, 마을순환버스로 연계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내각부 “작은 거점마

을 조성사업”을 적극 활용

- 지역교류 거점에서는 육아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매기능, 고령자 교류기능 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7. 일본 도시교류시설 휴게소 ‘야스다 초등학교’

□ 추진배경

- 치바현 교난마치에서는 학교로서의 역할이 끝난 초등학교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이하 내각부, 2018의 지방창생 사례집 참조)
 - 새로운 커뮤니티의 핵, 지방창생의 거점으로 재생, 농림수산물의 판매나 6차산업화를 통한 농림어촌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 당시의 초등학교 이름 그대로 사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지역의 활성화·주민의 활약무대로서, 도시와 농림어촌의 교류거점으로 새단장
 - 폐교를 지역복지·방재·산업진흥·지방이주정주촉진거점으로서 활용가능한 지역센터형 휴게소로 정비하게 되었음

□ 추진내용

- 지역커뮤니티의 핵이었던 폐교를 주민의 경제활동무대 「도시교류시설·휴게소 야스다초등학교」로 재생
 - 농림수산물의 판매나 6차산업화를 통한 농림어촌의 경영안정, 자연·문화·역사 등 마을의 관광이나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림어촌의 교류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2015년 12월 개업)
 - 이주접수나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윈스톱 창구 등 마을 전체의 서비스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체육관을 활용한 직판장, 교실을 활용한 숙박시설 등 초등학교의 흔적을 남겨놓은 채로 리노베이션한 휴게소는 전국적으로도 유니크한 존재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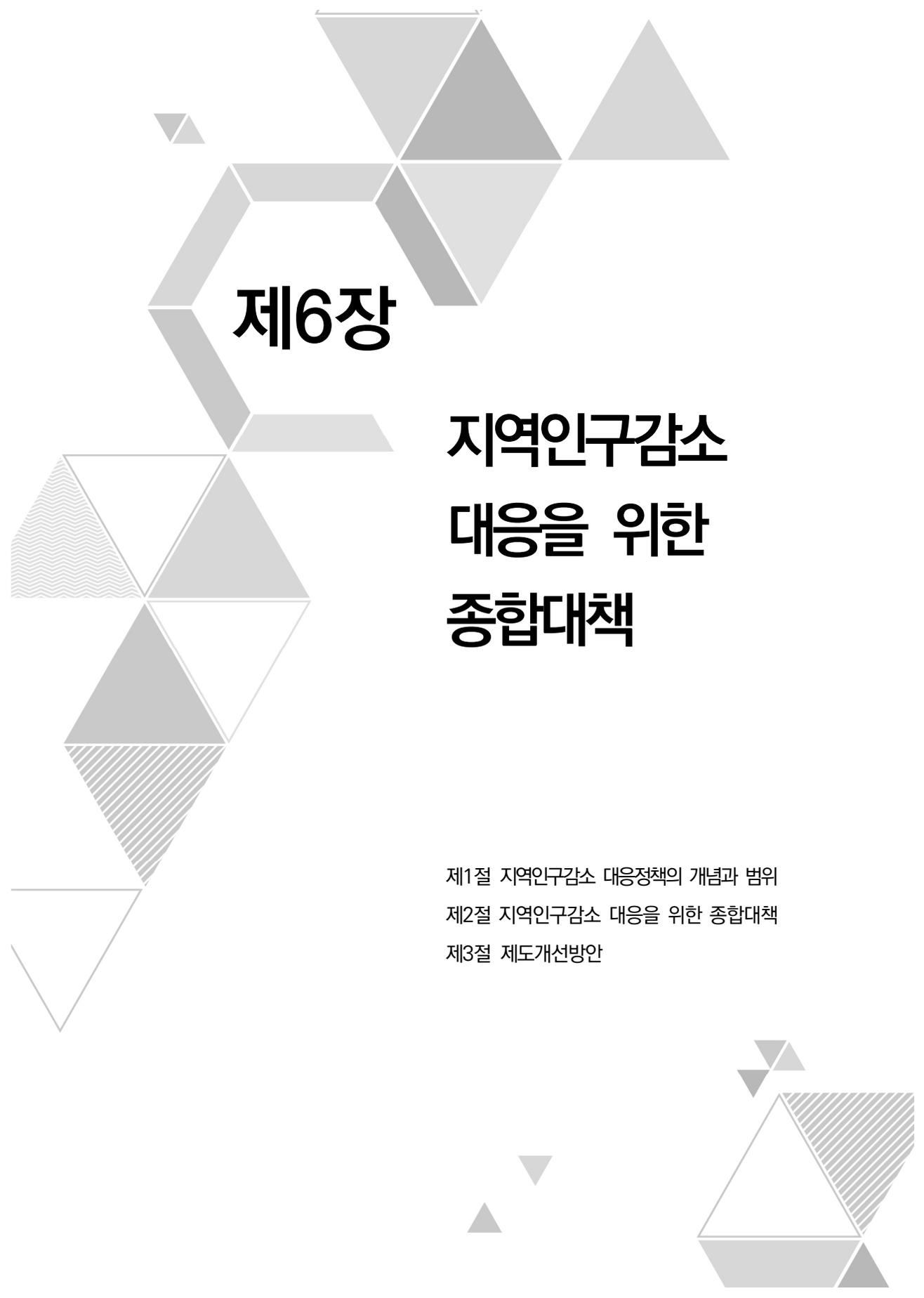
□ 사업효과 및 시사점

- 약 200사업자의 참가, 50명의 고용, 12만 명의 교류객 창출(2015년 개업~2016년 3월말 실적)
- 지역 자원·폐교 활용의 모델케이스
 - 기존 자원의 컨베이션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인재가 모이는 선순환을 불러오고, 산업·민간·학문·금융·언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5-21〉 도시교류시설 휴게소 '야스다 초등학교'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8.1), 「지방창생 사례집」.



제6장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제1절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제3절 제도개선방안

제6장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제1절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개념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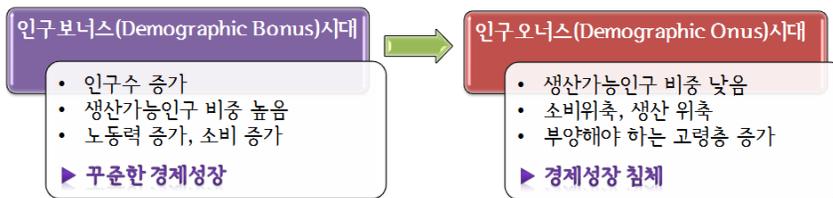
1.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의 문제점

1) 일반적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의 문제점

□ 경제성장동력 저하,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사회 진입

-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증가하는 노동력과 소비로 인해 경제성장을 경험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시대(이희연, 2017)였음
 - 현재는 베이비붐 세대 대거 은퇴,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비 부담 급증으로 저축,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진입

〈그림 6-1〉 인구여건의 시대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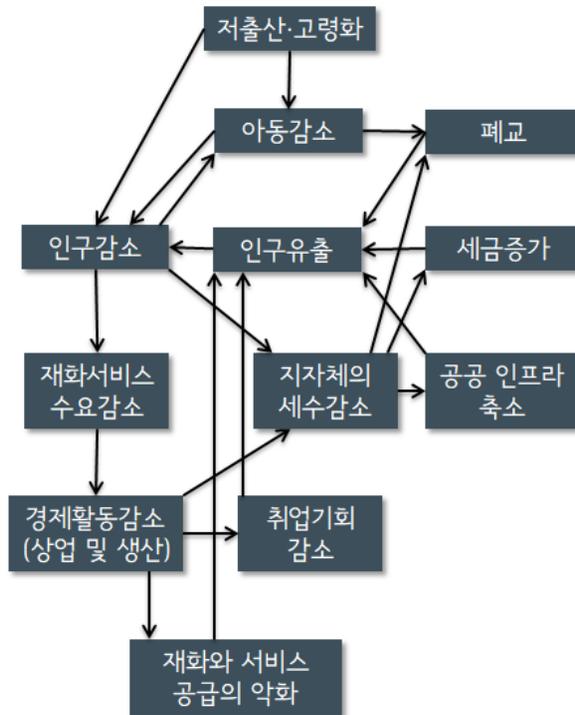
자료: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뉴노멀시대 지역 생산성 및 소득·일자리 감소

- 일반적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인적역량이 약화되고 지역의 총생산 및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⁸⁾

- 2019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산업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늘어난 지역은 GRDP가 줄어든 반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이 늘어난 지역은 GRDP가 증가했으며, 고령인구비율이 1년 전보다 1% 증가하면 지역의 GRDP는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⁹⁾

〈그림 6-2〉 인구감소의 지역 및 국가 영향



자료: Elis,V(2008), The Impacts of the Ageing Society on Regional Economics.
박진경(2019.11),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전남·경북 지방소멸대응 세미나.

38) ‘뉴노멀(New Normal)’이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칭하여 사용한 용어로서 정부·가계·기업의 광범위한 부채 감축으로 나타나는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일상화되어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말함

39) 반면 생산가능인구비율이 1% 증가한 지역의 GRDP는 1.6% 증가했음(김경수, 2019.5)

- 이영성(2008)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자 1인 생산량은 0.719% 감소하며 Maestas, Mullen, Powell(2016)은 60세 이상 인구가 10% 증가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을 5.5%씩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일반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감소에 의한 노동공급의 증가는 거시경제적으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킴(김현호·박진경, 2019)
 - 생산성 증대는 교육, 의료, 주거, 인프라, 복지 등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생산 및 소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발생
 - 특히 복지지출의 증가는 시장기능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복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여 사회 구성 전체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함
- 고령화는 노동력, 저축, 투자, 성장, 재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인구감소는 국내 총수요에 악영향(IMF, 2017)
 - 인구오너스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목말사회' 도래

□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이용 감소와 신규개발수요 감소

- 인구보너스시대 지역발전정책은 꾸준한 인구성장을 전제로 끊임없는 공간효율화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시설과 도시공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임
 - 도시공간이용의 재편에 따라 기존 상업 및 공업시설이 쇠퇴하여, 공실률이 높은 상점가, 방치된 산업부지,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 등이 증가
 - 인구가 감소하면 시설이 유희화되고 토지이용의 변화를 발생시켜 시설용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됨
- 특히,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발수요에 따라서 사업성이 결정되므로 인구감소는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

질 가능성

-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아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사업방식 변경, 행정서비스 변경 등 현 시스템 전반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음

□ 인구감소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 지역 양극화 심화

- 지역의 인구감소는 교육, 의료, 보육, 교통 등 생활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 생활 인프라 위축
 -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생활취약지역' 증가, '생활사막(Life Deserts)화', '쇼핑난민' 발생
- 농림수산물부(2014)는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24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은 412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0개 등으로 최소한의 균등한 삶 보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지역의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미비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초래

□ 행정비용 급증, 공동체 붕괴로 지방자치의 위기

- 지방정부의 세수 감수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로 지자체 행정비용 급증⁴⁰⁾
 - 행정직제와 사무배분, 지방의석수, 선거구, 교부세 등 지방행재정이 대부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력감축 및 재정감축 우려 고조
- 저출산,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공동체 붕괴로 지역의 자율적 해결능력 감소,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쇠퇴, 위협
 - 빈집, 폐경지 등 유휴공간의 증가에 따라 우범화, 생활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유지관리에 투입가능한 자원 축소로 유실·붕괴 등 재난 증대

40) 군 지역은 구 지역에 비해 평균면적은 13.6배 넓은 반면 평균 인구수는 1/6수준

2)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규모와의 관련성

- 유럽에서도 축소도시(shrinking city) 논의는 주로 인구학적 측면과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되고, 구조적 위기의 징후로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를 의미
 - 결국 인구가 감소하면 혁신적인 역량이 감소하여 지역경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유럽에서는 덜 개발(to do nothing)하고, 불필요한 도시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Shrink Smart) 정책으로 선회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활력(vitality)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를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함
 - 문제는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구를 비롯하여 기업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적하다보니 소득·일자리 격차가 크게 발생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여 의료, 교육, 보육, 문화 등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이 되지 못해 인구유출이 가속화

2. 지역인구감소의 의미

□ 지역인구감소는 인구(사람)·경제·공간의 활력저하로 정의

- ‘인구감소지역’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인구감소대책이 시급한 지역을 의미
 - 즉,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어 타 지역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지역의 활력은 인구(사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으로 구분
- ※ 인구(사람)·경제·공간의 활력(vitality) 관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은 전향적으로 ‘인구활력촉진지역’으로 교체가능

□ 인구(사람)활력·경제활력·공간활력의 정의

○ 인구(사람)활력

- 일반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지역주민의 활동(activity)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의 활력(vitality)이 저하됨

○ 경제활력

- 지역주민은 활동을 하면서 경제행위를 하게 되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소득·일자리 수준이 함께 감소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활력이 감소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따져 경제활력이 저하되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음

○ 공간활력

-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mandatory activity) 활동, 기타 생활 서비스를 받기 위한 활동, 여가나 레저를 위한 활동 등을 하는 지점이 생활권 내에 많이 존재한다면 지역의 공간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기존의 대규모 SOC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일반적으로 지역의 인구가 많으면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경제행위도 증가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활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간혁신도 지역활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Time-Space Diagram

○ 이를 Time-Space Diagram으로 도식화하여 해당지역의 한 개인의 activity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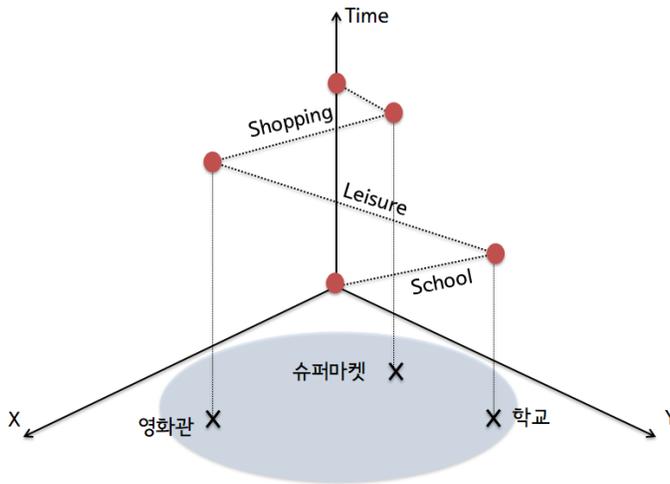
- 인구가 많을수록 붉은 점이 찍히는 경우의 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사람활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사람활력)
-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주민의 활동(activity)이 많고 activity당 비용이 많다면 지역의 소득·경제측면에서 활력적일 가능성이 있음(경제활력)
- X축과 Y축에 찍히는 activity point, 즉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점(point)들이 많으면 지역이 활력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할수록 지역활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활동(activity)은 학교나 직장을 가거나, 여가, 레저, 사교, 쇼핑 등의 행위를 일컫으며, 보통 activity당 비용을 지불하고 통행함
- 활동지점(activity point)은 생활권 내에서 학교, 직장, 병원, 영화관, 식당, 백화점 등을 말함

○ 실제로 최근에는 카드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시·공간별 활동유인력을 분석하는 기법이 등장하고 있음

〈그림 6-3〉 Time-Space Diagram



3.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범위와 기준

1)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개념과 범위

- 지역인구의 증감은 그 자체가 독립변수가 아니라 이를 끌어들이거나(pull factor) 다른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요소(push factor)인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김현호·박진경, 2019)
 - 지역의 매력도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의료, 육아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할 수 있고, 지역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도를 증가시켜야 함
-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원인별 대책의 관점에서 정의하되, 인구(사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함
 - 인구(사람)활력대책: 사람활력, 즉 지역의 인구사회활력을 위한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대책(인구감소 저지, 인구증대 도모)
 - 인구(사람)활력대책은 사람활력과 관련되는 대책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젊은 인구 유치 등 1차적으로 인구감소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과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책 위주
 - 경제회복대책: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일자리가 보장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 공간혁신대책: 개발시대의 SOC사업에서 탈피, 인구가 감소하지만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혁신하는 대책(인구감소 적응 공간 창출)
 - 공간혁신대책은 기존의 성장촉진지역 사업과 같은 SOC 사업을 탈피,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혁신대책 위주

2)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의 기준

-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하는 사업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다양한 형태의 모듈, 수요 반영)

-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인구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대책별 세부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하드웨어(+휴먼웨어) 복합·융합사업(도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 기존의 단순 하드웨어 사업 제외)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민간협력사업 등 투자방식 혁신과 관련되는 사업 포함

〈표 6-1〉 지역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의 개념과 세부범위(예시)

대책 (원인)	기본목표	성과평가(예시)	세부 범위
인구활력 대책 (사람활력 저하지역)	새로운 사람의 유입촉진	주민등록이전수, 젊은인구 취업률, 총인구 저지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인구 유입촉진, 정착사업(젊은 인구가 정착하여 육아, 교육하기 좋도록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연계하여 지자체차원에서 복합화되는 사업) - 귀농귀촌 활성화, 은퇴자 유치,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유치사업 - 중앙공무원 파견사업, 도시청년파견제 등 인구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 인재육성사업 등
경제회복 대책 (경제활력 저하지역)	안정된 지역소득·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수, 소득수준 변화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자리부족이 고착화된 지역의 지역소득 창출사업, 특화산업 육성, 비즈니스 모델개발사업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홍보 및 마케팅 사업 - 도농순환형 지역경제체제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경제 공동체 육성, 지역금융 활성화 사업 - 지방채용, 취업 확대, 앵커기업 유치사업 등
공간혁신 대책 (공간활력 저하지역)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공간혁신, 주민 삶의 질 확보	스마트빌리지수, 생활서비스 집약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사업 -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안심·안전 생활기반 확보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공간 혁신, 공급방식 혁신, 연계·협력·협동 사업 등

제2절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1. 비전 및 목표

□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정책방향

-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 세계 금융위기 발생 등을 계기로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면서 포용적 성장 개념과 정책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배제 완화, 지역격차 해소 등을 함께 공유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가능
-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유도하되, 인구취약지역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 과거 지역발전정책의 시책은 ‘인구성장’을 전제로 ‘경제성장 및 인프라를 지향’하는 ‘분산형’ 계획이었다면,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시책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주민 삶의 질을 지향’하는 ‘스마트 축소형’ 계획으로 추진
 - 과거 지역발전정책이 소외되고 배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정책으로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사회적 인구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구상하고 집행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
 - 중앙이 다양한 모듈을 만들면, 지방은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인구감소를 야기하는 사회적 유출 등 인구활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책 추진

- 젊은인구가 지역으로 돌아와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역여건 조성, 새로운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여 누구나 행복한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창조 등
- 개발시대의 SOC사업에서 탈피하여, '연성적'인 소프트웨어사업 강화,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면웨어 복합·융합
- 중앙은 인프라사업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재정지원, 컨설팅 강화
- 압축(compact)하고 연계(network)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투자방식을 혁신해나감
- 주체를 형성하고, 주체간 연대와 협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속화 노력

비전과 목표

- 지역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의 비전 :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촉진
- 목표: 지역인구의 사회적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2.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 추진전략

인구활력

- 새로운 인구 유입촉진·정착
- 지역인재 육성, 양육·돌봄·교육 연계

경제회복

- 지역자산기반 특화산업·관광 육성

○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공간혁신

○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

○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

〈그림 6-4〉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비전 및 전략



2) 추진과제

□ 인구활력

○ 인구활력과제 1: 새로운 인구 유입촉진·정착

- 지역인구위기는 젊은인구의 순이동, 즉 사회유출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은 지역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고,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시정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젊은인구를 비롯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촉진·정착전략 추진
- 새로운 인구의 삶터+일터+놀이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젊은 인구의 라이프스타일(워라밸, 소확행 등 키워드)을 반영한 지역활력사업 추진
- 기존의 귀농귀촌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세대를 타겟으로 한 은퇴자유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도 지역인구 유입 촉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포함

○ 인구활력과제 2: 지역인재 육성, 양육·돌봄·교육 연계

-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자립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인재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역인재의 발굴·육성전략 추진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전형적인 저출산시책 보다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 교육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연계전략 포함
- 인구위기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HW+SW 복합·융합해서 보육·교육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인력 확보

□ 경제회복

○ 경제회복과제 1: 지역특화산업·관광 육성

- 지역인구감소 위기, 즉 사회적 인구유출은 특히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소득창출, 창업과 취업 촉진,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수

- 지역경제기반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고착화된 지역은 생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특화산업 고도화 전략 마련,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상품화·산업화·고부가가치화, 앵커기업 유치, 지역홍보 및 지역마케팅 강화
- 전통성을 지닌 지역자원의 명품화 전략 추진, 힐링 등 지역관광 연계로 6차 산업화 촉진
- 경제회복전략은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지역 대책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경제회복과제 2: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내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공동체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로컬푸드, 지역농산업 등 도농순환형 지역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연계망 다각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전략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개인, 지역기업, 지역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진하여 지역으로의 자금흐름을 강화하고, 지역금융 활성화, 지역경제의 다양성 제고
- 최대한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원을 활용하거나 매니지먼트 강화, 지역 밖 시장의 수입은 높이고, 지역 내에서는 경제순환 도모

□ 공간혁신

○ 공간혁신과제 1: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

-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의료, 복지, 쇼핑 등 일상생활 서비스 기능을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집약하여 생활서비스 거점을 조성·운영하도록 유도
- 생활서비스 거점은 일상생활서비스와 지역활동, 고용촉진, 안전·안심·방

- 법, 고용촉진 등의 중심지이기도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집락재편 유도
-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행정비용절감
-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기술혁신을 전제로 한 공간 조성
- MaaS(Mobility as a Service)개념 하에서 On-demand bus shuttle 도입 등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 공급·운영방식 혁신, 버스규모 축소, 민자도입 활성화 도모

○ 공간혁신과제 2: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

-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맺음으로써 활력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거점 앵커공간 육성, 앵커공간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영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인구유출을 억제하고 활력 있는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형성 촉진, 교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만들기 및 지역간 연계사업 추진

3. 사업유형화

1)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범부처 관련사업 조사개요

□ 범부처 관련사업 및 제도조사

- 제출양식에 의거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 및 제도를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10~11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사를 시행함
-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의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함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따른 관련사업 유형별 지역인구감소 대응사업의

배경과 근거, 기간, 방식 등 사업개요,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지자체 지원 현황 등 조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외 관련부처사업을 총망라하여 지역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사업 리스트를 조사한 다음 대상사업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따라서 유형화함
 - 지역인구감소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의 대상사업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위주로 포함
 - 1차·2차 조사결과 10개 부처, 142개 사업, 2019년 국비예산 기준 총 10조 9,900억원 사업이 접수되었음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따른 관련사업 유형구분

- 인구활력
 - 귀농귀촌 지원, 은퇴자 유치, 도시청년파견제 등 지역에 인구유입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사업 및 제도
- 경제회복
 - 지역브랜드 개발, 취·창업 지원, 기업유치, 금융지원, 관광활성화 등 지역의 소득 및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제도
- 공간혁신
 - 공공시설 리모델링, 공공서비스 집적, ICT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간효율화, 공간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 및 제도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대상사업 기준

- 대상지역
 -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중에서 사회적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제2장 <표 2-3> 참조)

〈표 6-2〉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대상지역(안)

구분	자연증감 (출산,사망)	사회증감 (전입,전출)	총 개수	총 개수	
				시	군
유형 Ⅳ	감소	감소	72	13	59
유형 Ⅴ	증가	감소	23	18	5
소계			95	31	64

○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기관·단체 등 지원, 공동체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주거·문화·교육·복지 등 인프라 적합), 인구·기업 유치 지원, 지역소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지역의 인구유입,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집중(저출산 사업 제외)
- 기존 대규모 전형적인 SOC 사업이거나 경제자유구역사업 제외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업은 제외

2)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범부처 사업 유형화

- 인구활력전략의 세부과제는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정착과 지역인재육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정착과제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개 부처 사업이 포함되고, 지역인재육성과제는 교육부 사업이 포함됨

<표 6-3> 인구활력전략의 과제별 사업 유형화(예시)

인구활력	구분	부처	사업명
①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정착	계속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계속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속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계속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속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계속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계속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신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계속		귀어귀촌활성화
	계속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계속		수산모태펀드
	② 지역인재 육성	계속	교육부
계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계속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지원	
신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계속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계속		지역선도대학 육성	
계속		학교기업 지원	
신규		전문대학 혁신지원	
신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 운영	
신규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교육지원청형)	
신규		대학혁신지원사업 III유형(지역혁신형)	
계속		농어촌 평생학습도시 운영	

- 경제회복전략의 세부과제는 지역특화산업·관광육성과 사회적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지역특화산업·관광육성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 사업이, 사회적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과제는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가 포함

〈표 6-4〉 경제회복전략의 과제별 사업 유형화(예시)

경제회복	구분	부처	사업명	
① 지역특화산업·관광육성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R&D)	
	계속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계속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계속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R&D)	
	계속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R&D)	
	계속		지역특성화산업육성	
	계속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계속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신규		지역활력프로젝트	
	계속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R&D)	
	계속		지역투자촉진, 지역투자촉진(세종)	
	신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
	계속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신규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지원		
	계속	창조경제혁신센터		
	계속	시장경영혁신지원		
	계속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신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신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속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신규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계속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계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② 사회적경제·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
		계속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신규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신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비R&D)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신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비R&D)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계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조성	
계속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 공간혁신전략의 세부과제는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과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 사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과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 사업이 포함되고,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사업이 포함됨

〈표 6-5〉 공간혁신전략의 과제별 사업 유형화(예시)

공간혁신	구분	부처	사업명
① 스마트 생활공간 육성	계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	보건복지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계속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확대)
	신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계속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계속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		인구감소지역 지능형 ICT조성
② 공동체 앵커공간 조성	신규	교육부	학교공간 혁신
	신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신규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신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제3절 제도개선방안

1. 균특법 개정⁴¹⁾

1)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기반의 구축이 필요
 - 법률적 규정의 토대 위에서 개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
-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을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 정부가 발표한 3대 부분 9대 전략 중의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창출을 겨냥하는 “공간” 파트의 전략 중의 하나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 지역으로”라는 전략을 설정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이러한 전략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감소지역의 선정이나 지원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과 거리가 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발, 추진해 오던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에 대한 정의 규정(법 제2조 6, 7, 8)과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

41)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동체의 존립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특법 개정 보다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여기서는 관련 부처의 통합적 지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표 6-6〉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부분 9대 전략

부문	전략
사람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 활용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 보건-복지체계 구축
공간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으로
산업	혁신도시 시즌 2
	지역사업의 혁신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

〈표 6-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저발전지역 관련 규정

구분	전략
제2조 6,7,8	6 :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7 :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접경지역, 도서지역을 말함 8 :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함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

2) 개정방안

□ 개정방안 1 : 조항의 미비점 보완

- 본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관련된 주체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에서 오는 문제해소를 위한 비용의 감소와 법률개정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김현호·박진경, 2019).
- 현재 균특법의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현재 구비되어 있는 조항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해당됨
- 인구감소지역을 접경지역이나 도서 등 발전여건이 원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구감소지역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개정 등에 소요되는 제반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균특법 제2조(정의) 규정 중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제2조의 7항 다목은 “그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부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post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규정상에는 조항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다목을 보완하여 조항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

- 대통령령에 인구감소지역의 대책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규정의 완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
- 이 경우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 상의 애로점 등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방안 2 : 새로운 조항의 설치

- 본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균특법에 새롭게 규정해서 시책추진의 토대를 만드는 방안이 해당됨
-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시책 마련에 대한 국민, 언론, 방송 등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의 타당성을 보유
- 균특법에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는 지역의 정의 및 대상, 선정 방법 뿐 아니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
 - 인구위기지역의 정의, 지원 내용,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
- 세부적으로 균특법 제1장 총칙 부분의 제2조의 8 정의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설치하고,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부문에 지원 내용을 삽입
 - 인구감소지역(혹은 인구위기지역)의 정의⁴²⁾ : 지역의 인구감소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현저하여 지역의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인구감소 (혹은 인구위기) 지역”이란 지역의 인구감소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현저하여 지역의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2) 현재 17조의 산업위기지역 지역에 상응하여 “인구위기지역”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 17조 설치

제17조 (인구위기지역의 지정)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인구위기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 1 (인구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인구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한 인구활력사업
2.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
3. 공동체 시설 등 공간혁신을 위한 사업
4. 그밖에 인구위기지역의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대안의 종합

- 위 대안은 접근과 조항 개정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만큼 각각의 대안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기존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
 - 기존 조항의 틀 내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위기지역 지원의 토대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극히 부분적인 조항의 개정으로 법적 토대 구축이 가능
 - 단점은 국민의 기대는 특별법에 준하는 대책과 법률적 근거를 기대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분적 조항의 보완이 부족한 대응일 수 있다는 점임
- 새로운 조항을 설치하는 방안
 - 인구위기지역과 관련된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무게를 두고 토대를 마련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점을 보유
 - 그러나 기존의 낙후지역 관련 정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해서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켜서 정책추진의 탄력을 소실할 가능성 보유
- 최적의 방안
 - 불필요한 갈등의 야기를 최소화시키고 부처가 관계하는 인구위기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토대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많은 적실성을 보유

- 시책의 토대가 구축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을 설치하거나 나아가서 인구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2. 통합추진체계 구축

1) 필요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위기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를 유치, 유지하기 위한 시책은 특정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 인구위기지역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구를 유치하고 잡아두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지역의 매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 이런 매력에는 지역의 인구를 유치해서 지역의 인구활력을 불어넣는데 관련된 내용, 경제적 회생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기 부여와 관련된 내용, 공동체 앵커 공간 및 삶의 공간 혁신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
- 상기의 내용과 관련된 시책을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하고 이들 지역이 인구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처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
 - 부처의 기여도에 있어서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부처의 거버넌스가 장점을 발휘
 - 통합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업 내용의 적실성 못지않게 정책추진의 효과 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기도 함
-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창생 시책의 경우도 부처간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시책을 시행
 - 지방창생 시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내각부 총무대신을 중심으로 내각관방장관, 총무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이 관여
 - 공공자치단체의 경우, RESAS를 토대로 시정촌이 해당 지역의 지방판 창생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표 6-8〉 일본 지방창생의 부처간 협력

구분	부처	
	주요 부처	비 주요 부처
지역에서 안정된 고용창출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등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문부과학성	총무성, 내각부 등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후생노동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국토교통성	총무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

자료: 일본 지방창생 웹사이트(www.Kantei.go.jp)

2) 구축방안

□ 주체

① 중앙부처 차원

- 지역인구감소정책의 총괄·관리는 정부조직법상 낙후지역정책의 담당부처인 행안부가 담당
 - 인구활력 부문에 대해서는 행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관련
 - 경제회복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부, 중기부, 문화부, 행안부 등이 관련
 - 공간혁신 부문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주요 부처로 관련
 - 행안부 등은 인구활력, 공간혁신 부문에, 산업부 및 중기부는 경제회복 및 인구활력 부문에 관련되는 등 복수의 인구감소지역 시책에 관련되기도 함을 배제할 수 없음

정부조직법 제34조1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낙후지역이나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에 처한 경우의 시책 제공

〈표 6-9〉 인구감소지역 시책의 관련부처

구분	부처	
	주요 부처	관련 부처
인구활력 및 유지	행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문화부 등
경제회복 및 생기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 문화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공간혁신 및 창출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문화부 등
총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안부 등

자료: 일본 지방창생 웹사이트(www.Kantei.go.jp)

② 지자체 차원

- 시도 : 해당 지역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계 등 지원, 시군의 지역인구감소 대응 시책개발 및 추진 지원, 재정지원
 - 해당 시도 연구원을 활용하여 지역인구분석 통계시스템 구축
- 시군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창성 있는 시책 추진
 -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가 제공하는 지역인구통계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해당지역의 인구강화와 관련된 시책의 패키지를 작성
 - 시책의 패키지 사업은 부처의 핵심적인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성

□ 추진체계 구축

- 상기에 적시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에 관련된 중앙 부처를 포함해서 지자체 등이 관계하는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현재 균특법 하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며, 실무적으로는 제도 및 계획·사업·조직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임
-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시책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을 고려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다음의 2단계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
 - 첫 번째 단계는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듯이 균형위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임
 -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시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제고에 보다 많은 전문성을 지닌 부처가 시책을 주관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
-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
 - 중앙의 경우, 적정한 지표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의 선정, 활성화 매뉴얼 및 모듈의 개발 및 제공, 재원의 제공,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역할 수행
 -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 및 유지에 가장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
 - 시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경제 분석 시스템'(PEAS: Population and Economy Analysis System) 개발 및 제공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단위에서 주민, NGO, 대학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도 시책 추진의 거버넌스에 참여 활성화
 - 균형위 차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시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관련 시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단에 인구 관련 조직을 두고 인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 (기획단 조직개편방안 1) 인구정책국 설치 : 총괄정책국, 지역혁신국, 지역균형국, 생활SOC복합화추진단, 정책기획국, 대외협력국, 대변인실
→ 총괄정책국, 인구감소대책국, 지역혁신국, 지역균형국, 생활SOC복합화추진단, 정책기획국, 대외협력국, 대변인실
 - (기획단 조직개편방안 2) 지역균형국 개편 : 공간정책과, 지역계획과, 농산어촌과 → 인구정책과, 공간정책과, 지역계획과, 농산어촌과
 - (기획단 조직개편방안 3)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개편
→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별도로 지역인구활력기획단 설치
 - (전문위원회 개편) 인구정책위원회 신설 : 정책기획·평가,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지역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 지역활력·공간정책

- 정책기획·평가, 인구감소대응, 지역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 지역활력·공간정책
-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관련 전문가, 민간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보다 강화, 확대

3. 재원지원

1)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책이 작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시책 작동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원 조치임
-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명시적인 예산의 지원은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소액에 불과(김현호·박진경, 2019)
 - 인구감소지역통합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특교세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그 마저도 줄어들고 있음
 - 2017년 9개 지역, 2018년 11개 지역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은 5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음(행안부, 2019)
 -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 원: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여 사업을 진행
 - 2018년의 경우 총사업비는 150억원, 이 가운데 특교세 90억 원, 지방비 60억원임
 - 2019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청장년 유입과 귀촌 활성화 등 새로운 인구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청장년과 귀촌인의 창업과 정착에 중점을 두고 5개 지자체에 총 40억원(특교세 20억, 지방비 20억) 사업 추진
- 10조에 가까운 균특회계의 경우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원의 지원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 및 제주계정으로 구성됨

〈표 6-10〉 현재의 균특회계 구조

편성방식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2019.4),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 재원지원방안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개편

균특회계 인구감소지역 지정

- 인구감소지역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균특법에 새롭게 규정하거나 균특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인구위기지역에 대한 예산을 지원
 - 지역지원계정은 광역적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임에 비추어 지역자율계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기존의 균특회계 시·군·구 지역과 중첩되는 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기존의 지역구분 개념은 유지⁴³⁾하면서 인

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그림 6-5〉 균특회계 지역구분 개편(안)



□ 균특회계 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전담계정 설치

- 현재 균특회계의 기본구조는 유지하지만 지역자율계정 가운데서도 시군구 자율편성인 포괄보조금을 개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재정을 확보하도록 함
 - 시도 자율편성은 시도내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에 비추어 인구 위기 지역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함
 - 또한 2019년 4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에 의거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균특회계사업 3.57조원이 지방에 이양되었고 이 중 약 2조원은 시도자율편성사업⁴⁴⁾이어서 시도자율편성사업 계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43) 현재 균특회계의 지역은 부처별 기능주의에 입각한 구분이므로 인구감소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간별 소관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용이한 방법일 수 있음

44) 2019년 37+6개의 지역자율계정사업은 2020년 균특회계 예산안을 기준으로 15+5개로 축소·개편되었는데, 2019년 지역자율계정 중 37개 시도자율편성사업은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1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축소, 약 2조원이 지방으로 이양됨

〈그림 6-6〉 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2019.4)



자료: 박진경·김현호(2019),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현재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가 하여 6개로 재편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활력형 브랜드사업” 시행
 - ※ 과거 노무현정부 시기 ‘신활력사업’과 같은 브랜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 바 있음(박진경·김선기, 2017)
-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의 보조율에 +10%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 지자체가 추진하는 부처 핵심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인상 적용 등

〈표 6-1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현재)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국토부	⑯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 지역개발 지원 등
	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 우리동네살리기
농식품부	⑱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⑲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㉑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표 6-1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개편(안)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국토부	⑯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 지역개발 지원 등
	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 우리동네살리기
농식품부	⑱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⑲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㉒ 인구감소지역 지원	50~100% (+10%)	• 인구활력 강화 등
	㉑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나. 교부세 추가 지원

(가칭)지역인구활력교부금 조성

-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 하에서 부동산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균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균특회계와 보통교부세 등도 부분적으로 재정형평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지역균형수요, 부동산교부세는 역재정력지수, 균특회계는 성장촉진지역이나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율 등의 방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표방(조기현·이장욱, 2017)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내의 지역균형수요와 부동산교부세의 일부,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합하여 (가칭)지역인구활력교부금을 설치하고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교부세 지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2017년에 특별교부세 88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8년에는 90억원, 2019년에는 20억원으로 감소
 - 현재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와 시책수요, 재난안전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에서 안정적으로 지역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전담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세에서 재난안전수요분만큼 특별교부세를 확충하고, 확충된 특별교부세를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용도 등으로 활용

4.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1)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경제, 공간혁신 등에서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및 유지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가 필요
 - 인구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지원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때 정책의 효과가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등의 규제 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의 제공이 필요

-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 관련 세금, 건강 보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 보유

2) 방안

인구감소지역 규제특구 지정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초지구제,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 규제완화를 포함해서 제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인구감소지역 특구를 지정
 - 보다 큰 범위에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국가전략특구를 구성하고 그 가운데 인구감소지역도 국가전략특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과소군 특례 시행

- 인구 100만 이상 등 대도시 특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정인구(예를 들어 인구 3만 이하 등)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위기지역 특례군 제도를 도입, 추진
- 인구위기 특례군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강화, 건강 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토지이용규제완화 등의 조치 시행

건강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기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 지원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공공요금지원 등 병행해서 추진

참고문헌

-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 강동우 외(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0405), “고용위기지역 지정”.
- 관계부처합동(2019.9),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 관계부처합동(2019.9),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제1편: 생산연령인구 확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4.15.),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
- 금창호·권오철(2016), 「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획재정부(2019),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기정훈(201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쇠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김경수(2019.5),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동향 & 이슈 III」, 국회예산정책처.
- 김선기·박진경·김도형(201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선기(2015),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와 과제”, 이원종 외, 「지역발전정책론」, 서울: 율곡출판사
- 김순은(2016),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 「한·일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 2016 한일 공동세미나.
- 김신양(2010), 사회적기업, 세계적 동향과 과제, available at:
<http://www.ssri21.or.kr/soci/board/downloadfile/%EC%82%AC%ED%9A%8C%EC%A0%81%20%EA%B8%B0%EC%97%85,%20%EC%84%B8%EA%B3%84%EC%A0%81%20%EB%8F%99%ED%96%A5%EA%B3%BC%20%EA%B3%BC%EC%A0%9C.pdf>
- 김정연(2019),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연계한 금산군 마을만들기의 과제”, 제1기 금산군 마을대학 강의자료.
- 김현호 외(2010),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박진경·김상민·김도형(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나주몽(2016),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도시정보, 409.
- 나영삼(2018), 「완주소셜굿즈 2025 플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나카이 미키하루(2016), “과소대책의 현황과 새로운 권역조성”,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2015 한일 공동세미나.
- 다카다 히로부미(2015. 6), “일본의 지방재생에 대한 대응”, 제11회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 다카다 히로부미(2015. 11), “일본의 지방창생대응”,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CLAIR·KRILA 2015 한일공동세미나.
-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브릿지 플랜 2020」.
- 마쓰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김정환 역, 와이즈베리.
- 문정호 외(2016),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 박세훈 외(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 박인권(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개념”, 「공간과 사회」, 25(1).
- 박인권(2016), “도시에 대한 권리와 포용도시 : 한국의 신도시의제 설정을 위하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박상현 외(2017),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박승규·이제연(2017),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2019.8.20), “지역인구감소 특성분석 및 포용적 정책방향”,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진경(2019.11.20),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토론회, 전라남도·경상북도.
- 박진경(2019.11.28),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 국내외사례”,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 이춘석의원실.
-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현호(2019),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이소영(2016),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변필성 외(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2019), 「2019년 1차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통합워크숍」.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2019), 「2019년 산촌활성화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 산업부 보도자료(20170621), “산업위기특별지역 제도 시행”.
- 산업부 보도자료(20180529),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산업부 보도자료(20180529),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

- 산업부 보도자료(2019042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
- 야마구치 요시노리(2015. 11), “사가현의 지방창생”,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CLAIR·KRILA 2015 한일공동세미나.
- 야마코시 노부코(2016. 9), “지방창생에 관한 총무성의 활동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2015 한일 공동세미나.
- 원광희(2017),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전략”, 충북도의회 단양세미나.
- 이병기(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2016), “지방소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방안”,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CLAIR·KRILA 2015 한일공동세미나.
- 이소영·김현호(2008), 「지역재생사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김상민(2017),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윤석(2015), “최근 일본행정의 이슈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전략”, 행정포럼 148.
- 이창수(2015), “일본의 지방창생프로젝트와 환동해연구”. 2015년 HK 국내학술회의,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일본 나가토시(2017.3), 「제2차 나가토 협동 액션플랜」.
-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사무국·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7.1), 「지방창생 사례집」.
-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사무국·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19.6), 「2019년도 지방창생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 일본 내각부(2019.6.21), 「마을·사람·일 창생기본방침 2019에 대하여」.
- 일본 총무성(2008), 「지역 ICT 활용모델구축사업 3차 모집」.
- 일본 총무성(2015), 「과소대책사업(소프트부문)을 활용한 사업분야별 사례집」.
- 일본 웨어 카나자와 홈페이지, <http://share-kanazawa.com/>
- 일본 전국시가지재개발협회 홈페이지, <http://www.uraja.or.jp/>

- 일본 (주)마을만들기 카시와 홈페이지, <https://www.kaibara.org/>
- 일본 (주)세큐리티 홈페이지, <https://www.securite.jp/fund/detail/522>
- 일본 전국 고등학생 마이프로젝트 어워드 홈페이지, <https://myprojects.jp/project/8333/>
- 일본 나가토시(2017.3), 「제2차 나가토 협동 액션플랜」.
- 임상연·변필성(2014),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작은 거점만들기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492, 국토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 정성훈(2016), 「일본의 지방창생 사례와 경북지역 적용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제현정·이희연(2017)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분석”,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20(1).
- 조기현·이장욱(2017),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재복·박해욱(2015), 「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6),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서울대학교.
-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통계청(2019.3),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 통계청(2019.6),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17~2047)」.
- 통계청(2019.7), 「2019년 5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 통계청(2019.7), 「2019년 6월 국내인구이동」.
- 한국고용정보원(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유럽형 지역경제활성화 ICT 프로젝트: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EU Action for SMART VILLAGE by EC」.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SMART CITY by SMART CITIZEN: 제1편 시민주도 시마트시티의 도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2016년 한일공동연구회.

해리텐트(2015), 「2018 인구절벽이 온다」, 권성희 역, 청림출판.

행정안전부(2017), 「지방소멸대응 지역활력특별법 수립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17),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행정안전부(2017, 2018),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심사자료」.

ADB(2011), 「Inclusive Cities」, F. Steinberg & M. Lindfield(Eds.), Urban Development Series. Manila: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ADB(2014), 「Framework of Inclusive Growth Indicators(4th edition)」, Mandaluyong City, Philipines: Asian Development Bank.

Ahmad(2016), Smart villages: the Malaysian approach, Smart Villages

Begona Garcia. (2018). Digital Villages German Working Document,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enrd.ec.europa.eu/projects-practice/cowocatrural-promoting-coworking-rural-catalonia_en

CORK 2.0 DECLARATION 2016, A Better Life in Rural Areas.

EU(2008), “Shrinking Regions : a paradigm shift in demography and territorial development,”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08/408928/IPOL-REGI_ET\(2008\)40892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08/408928/IPOL-REGI_ET(2008)408928_EN.pdf)

European Commission(2017), EU Action For Smart Villages.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2018). Digital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Services Retrieved from

-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enrd_publications/publi-eafrd-brochure-07-en_2018-0.pdf
- EASAC(2018),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mart Villages Initiative 2014–2017: Summary for the European Development Community, Smart Villages Initiative.
- Holmes(2017),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mart Villages Initiative”, available at:
https://e4sv.org/publication/smart-villages-initiative-findings-2014-2017/?doing_wp_cron=1572827852.1203250885009765625000
- Ilona Raugz et al.(2017), “Shrinking rural regions in Europe”, ESPON Policy Brief, available at:
<https://www.espon.eu/sites/default/files/attachments/ESPON%20Policy%20Brief%20on%20Shrinking%20Rural%20Regions.pdf>
- Italia Government. (2018). Italian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garanziaiovani.gov.it/Documentazione/Documents/Italian-Youth-Guarantee-Implementation-Plan.pdf>
- Maestas et al.(2016),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he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RAND Working Papers, RAND corporation.
- OECD(2010). OECD Rural Policy Reviews: Strategies to Improve Rural Service Delivery.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cfe/regional-policy/oecd-rural-policy-reviews-strategies-to-improve-rural-service-delivery.htm>
- OECD(2012), “Free Movement of Workers and Labour Market Adjustment :Recent Experiences from OECD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 OECD Publishing(Paris, France),
<http://dx.doi.org/10.1787/9789264177185-en>.
- OECD(2014), “Fostering Resilient Economies,” OECD Publishing(Paris,France),
http://www.oecd.org/cfe/leed/Fostering-Resilient-Economies_final_opt.pdf
- OECD(2014), 「Report on the OECD Frame Growth」, Paris: OECD.
- OECD(2015),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Paris: OECD.
- OECD(2016), 「The Governance of Inclusive Growth: An Overview of Country Initiatives」, Paris: OECD.
- OECD(2018), Policy Brief, www.oecd.org
- Plan.Tsekoura, M.(2019). A Case Study Analysis of the Youth Guarantee Scheme Implementation in Italy(Lombardy Region). YoUnG, 1103308818817891.
- Italia Government. (2018). Italian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garanziegiovani.gov.it/Documentazione/Documents/Italian-Youth-Guarantee-Implementation-Plan.pdf>
- Steffen Hess.(2018). Digital Villages German Working Document,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smart-villages_case-study_de.pdf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 World Bank(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2015),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GSURR. Washington DC: World Bank.

부록. 일본 마을·사람·일 창생사업 리스트(2019년)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창출	내각 관방	산업 유산의 세계 유산 등록 추진사업
		지방창생 국제 교류 촉진사업
	내각부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에 의한 지방관 종합전략 지원사업
		지방창생 리더 인재육성·보급사업
		지방관 종합전략 추진사업
		지방창생 응원 세제(기업관 고향납세) 보급 촉진사업
		지방 재생 지원 이자 보급금
		사회성 인정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사업
		산업유산의 세계유산등록 추진 관련사업
	금융청	지역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융자·컨설팅 기능 발휘 현황 관련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기업 설문조사등 경비)
		지역 경제 순환 창조 사업 교부금 (로컬 10,000프로젝트,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총무성	공유 경제 활용 추진사업
		JET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지역활성화 추진
		마이멤버카드를 활용한 소비활성화를 위한 준비경비
		텔레워크 보급 전개 추진사업
		지역 오픈 데이터 추진사업
		지역 IoT 설치 종합 지원시책
		지역정보화 추진 (본 성)
		공중 무선 LAN 환경 정비 지원사업
		민방 라디오 난청 해소 지원사업
		방송 콘텐츠 해외 전개 강화사업
		고도 무선 환경 정비 추진사업
		휴대전화 등 에리어 정비사업
		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등의 도입을 위한 종합신증시험
		외무성
	지역의 매력 해외 홍보 지원사업	
	지방연계포럼, 지역 매력 홍보세미나(지방 시찰투어 등) 등	
	일본산 주종의 활용 추진	
	외국 보도 관계자 초빙	
	일본 특집 방송 제작 지원사업	
	대일 직접 투자 지원 경비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자유무역협정·경제관련협정 국내 관계자 설명회 개최 경비
		ODA를 활용한 중소기업등의 해외 전개 지원 (내수)
		재해 피해를 포함한 지방산품을 활용한 기자재·제품의 공여 (내수)
	문부 과학성	지역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형성 프로그램
		세계에 뽐내는 지역발 연구개발·실증거점(리서치컴플렉스) 추진 프로그램
		스타지움·아리나 개혁 추진 사업('스포츠 산업의 성장 촉진 사업'의 내수)
		문화 예술 창조 도시 추진사업
		문화 예술 창조 거점형성 사업
		극장·음악당등 기능강화 추진사업
		국제 문화 예술 홍보 거점형성 사업
		올림픽·패럴림픽·무브먼트 전국 전개사업
		스포츠를 통한 마을만들기·지역활성화 활동 지원사업
	대학 스포츠 진흥 추진 사업	
	후생 노동성	장애인 취업·생활지원 센터에 의한 지역 취로 지원
		고령자 활용·현역 세대 고용 서포트 사업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사업
		지방 취직 희망자 활성화 사업
		지역 고용 개발 조성금 (지역 고용 개발 코스)
		지역활성화 고용 창조 프로젝트
		지역 창생 인재 육성 사업
		일손 부족 분야의 공공 직업훈련 추진
		구직자 지원훈련 (보육사·간호사 직업훈련 코스의 확충)
		인정직업훈련등에 대한 지원 충실(일본 부족 분야 대응 부문)
	장애인의 사회 참가 지원의 충실 (내수)	
	생애 현역 촉진 지역 연계 사업	
	농림 수산성	농업 인재력 강화 종합 지원사업
		'녹색 사람만들기' 종합 지원대책
		어업 인재 육성 종합 지원사업
		6차 산업화 추진 (내수)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관련 대책
		림업 성장 산업화 종합 대책 (내수)
어업구조개혁 종합 대책 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 종합대책 교부금		
경제 산업성	지역 미래 투자 촉진 사업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 강화사업	
	(그 중, 스타트업·에코 시스템의 기반 강화 관련)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경제산업성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그 중, 지역경제분석 시스템의 운용 관련)		
		전통 공예품 산업 지원 보조금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 보조금		
		상표의 민간조사자의 활용가능성 실증 사업		
		순회 특허청 지원사업 (그 중, 지역 브랜드 총선거 관련)		
		중소기업 재생지원·기업 인계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 대책 추진 사업		
		중소기업·소규모 업자 인재 대책 사업		
		지역 소규모 사업자 지원 인재육성 위탁비		
		국내·해외 판로 개척 강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원스톱 종합 지원사업 (그 중, 모두 지원거점 사업,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 관련)		
		지역 창업 기운 조성사업		
		로컬 쿨 재팬 추진사업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소규모사업자 지원 추진 사업		
		물건만들기·상업·서비스 고도 연계 촉진사업		
		국토 교통성		JNTO(일본 정부 관광국)에 의한 방일 프로모션 사업(내수)
				관광산업의 인재육성사업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사업(내수)
				광역조류관광 촉진을 위한 관광지역지원사업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입 환경 긴급 대책사업(숙박시설 부족) (내수)				
최첨단 관광 콘텐츠 인큐베이터 사업				
지역관광자원의 다언어 해설 정비 지원사업				
국립공원의 인바운드를 위한 환경정비 (내수)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바운드를 위한 환경정비				
지역의 관광전략추진의 핵이 되는 DMO 개혁				
지방 항공 로선 활성화 플랜트 폼 사업				
환경성		지속가능한 지역항공의 실현을 위한 협업 촉진		
		텔레워크의 추진에 의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		
		건설업·운송업·조항업 등의 인재확보·육성		
		해안표찰물등 지역 대책 추진사업		
		'환경수도 미즈마타' 창조 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그린 성장·지역매력 창출 촉진 지원사업		
		에코 투어리즘을 통한 지역 매력 향상 사업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획등 사업비				
지역저탄소 투자 촉진 펀드 사업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폐기물처리시설을 핵으로서 지역순환공생권 구축 촉진 사업 자연공원등 사업비 (그 중, 국립공원등 정비비의 일부 추출)
	내각 관방	지방에 새틀라이트 캠퍼스 설치에 관한 매칭 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의 차기종합전략책정에 관한 조사·분석 사업 어린이 농산어촌교류촉진사업
	내각부	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
		지방대학·산업창생을 위한 조사·지원사업
		지방과 도쿄권의 대학생 대류 촉진사업
		지방창업 인턴쉽 사업
		오키나와 과학기술 대학원대학 (오키나와진흥책)
	소비 자청	소비자 행정 신미래 창조 오피스에 관한 경비
	총무성	통계 데이터 활용 촉진
		고향 워킹홀리데이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
		새틀라이트 오피스·매칭 지원사업
		지역부흥기업인 민관협력 추진사업
		지역부흥협력대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이주·교류정보 가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도시·농산어촌의 지역연계에 의한 어린이 농산어촌교류촉진모델사업	
	문부 과학성	문화청의 기능강화와 교도로의 이전 촉진
		지방창업에 공헌하는 사립대학등 지원
		지(地)·지(知)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업 추진사업
		지역활성화의 중핵적 거점형성을 위한 국립대학의 기능강화 (‘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 ‘국립대학개혁강화추진보조금’의 내수)
		지역 학교 협동 활동 추진사업
		보습등을 위한 지도원등 파견사업
		건전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 추진사업
		지역을 책임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캐리어 플래닝 추진사업
		지역의 학교안전체제 정비 추진사업
		지역과 연계한 학교 보건 추진사업
		커뮤니티·스쿨 추진체제 구축사업
		지역과의 협동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 개혁 추진 사업
지역의 유학생 교류 촉진		
전수학교 순환 교육 종합 추진 프로젝트		
전수학교에 의한 지역 산업 중핵적 인재 육성 사업 (내수)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3. 젊은세대의 결혼·출산· 자녀교육 지원	후생 노동성	양질의 텔레워크 (고용형) 추진 중도 채용 등 지원보조금 (UIJ턴 코스)
	농림 수산성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
	국토 교통성	다세대 교류형 주택 스톡 활용 추진사업
	방위성	이와쿠니 해양 환경 시험 평가 새틀라이트(가칭)의 정비에 관한 경비
	내각부	지역 여성 활약 추진 교부금
		일과 생활의 조화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 활약 추진법 사이트의 관리·운영 및 법 시행등 관련 경비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 ('사회보장의 충실'의 내수) 지역 저출산 대책 강화 사업
	문부 과학성	가정교육 지원 기반 구축 사업(가정교육 지원 팀 강화 촉진 플랜) 유치원, 보육소 등의 이용부담 경감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위한 대책의 단계적 추진)
		여성 연구자의 활약 촉진 (Diversity 연구환경 실현 Initiative)
		남녀공동 참가 추진을 위한 배움·커리어 형성 지원사업
	후생 노동성	트라이얼 고용 조성금 사업
		Mothers Hellowork 사업
		과중노동의 해소와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쉬는 방식의 재검토 추진
		비정규 고용의 노동자의 캐리어 업 사업
		다양하게 안심할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보급·확대 사업
		파트타임·유기 고용 노동자의 캐리어 업을 위한 지원강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의 활약 추진
		보육 수용 확대 ('보육대책종합지원사업' 및 '보육원등정비교부금'의 내수)
소유인재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보육대책 종합지원사업'의 내수)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충실 ('보육대책 종합지원사업'의 내수)		
안심·안전한 보육의 실시 지원 ('보육대책 종합지원사업'의 내수)		
임신·출산 포괄 지원사업 ('모자보건의료대책종합지원사업'의 내수)		
어린이의 생활·학습지원사업 ('모자보건의료대책종합지원사업'의 내수)		
한부모가정의 재택취업 추진사업 ('모자보건의료대책종합지원사업'의 내수)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졸업과정 인정시험합격 지원사업 ('모자보건의료대책종합지원사업'의 내수)		
사회적 양호 자립 지원사업 (그 중 생활상담·지도 및 취로상담)('아동학대·DV대책등 종합 지원사업비 보조금'의 내수)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아동 양호시설등 입소아동의 학습지원의 충실 ('아동입소시설조치비등'의 내수)
		졸업생 응원 Hellowork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청년 Hellowork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청년 지역연계사업
		청년 직업적 자립 지원 추진 사업
		고용형 훈련등을 활용한 Job Card제도 추진
		인재개발지원조성금(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인정사업 주분)
	내각부	지방창생을 위한 지자체 SDGs 추진사업 / '환경미래도시' 구상추진사업
		근미래기술의 실장 추진사업
		도시재생의 가시화 (i-도시재생) 추진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 추진사업
		오키나와 진흥 일괄 교부금 (오키나와진흥책)
		오키나와 진흥사업등 (오키나와진흥책)
		특정 유인 국경 낙도 지역 사회 유지 추진 교부금
	총무성	지역 운영 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주 자립권 구상 추진비
		촌락 네트워크권의 추진
		과소대책의 추진
		권역의 광역연계의 추진 등
		소방단을 중핵으로 한 지역 방재력의 충실 강화
		지역 방재 등을 위한 G 공간 정보의 활용 추진
	ICT 스마트 시티 정비 추진사업	
	외무성	지방 지자체의 국제 전개를 위한 지자체간 연계 세미나 (내수)
		지방 지자체와 연계한 무상자금협력의 추진 (내수)
	문부 과학성	저출산·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하는 활력있는 학교교육 추진 사업
		'학교의 규모·적정화 (외딴 지역 아동 학생 원조비등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내수)
		학교의 규모·적정화 (외딴 지역 아동 학생 원조비등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규모 적정화·질높은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공립학교시설정비비’의 내수)		
운동·스포츠 습관화 촉진사업		
후생 노동성	생활곤란자의 자립지원 추진 (내수)	
경제 산업성	지역 마을 속 활성화·매력 창출 지원사업	
	재해시에 대비한 지역의 에너지 공급거점의 정비 사업비	

종합전략 정책 패키지	담당 부처	사업명	
		차세대 연료 공급 체제 구축 지원 사업비	
		건강 수명 연장 산업 창출 지원사업	
		지역에서 자립한 바이오매스에너지의 활용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사업	
	국토 교통성		광역 연계프로젝트 추진 등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 촌락 생활권'의 형성 추진
			낙도 진흥
			아마미 군도의 진흥 개발
			오가사와라 제도의 진흥 개발
			반도 진흥
			강설 시대 대책
			스마트 웰니스 주택 등 추진사업 (내수)
			도시기능 입지 지원사업 (내수)
			지역 거주기능 재생 추진사업 (내수)
			부동산 증권화 수법을 활용한 지역진흥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촉진
			부동산 인수 환경정비 등에 관련한 조사·검토 경비
			컴팩트 시티 형성 지원사업
			도시·지역 교통 전략 추진사업 (내수)
			도시 재생 코디네이터등 추진사업 (내수)
			역사정 품치 활용 국제 관광 지원사업
			실외 광고물 활용 촉진 검토 조사
	지역 공공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		
	신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사업		
	환경성		풍부함을 실감할수 있는 바다 재생사업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교부금
			환경으로 지방을 건강하게 하는 지역 순환 공생권 만들기 플랫폼 사업
			탈탄소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역 순환 공생권 구축사업 중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맞춘 탈탄소형 지역만들기 모델 형성사업
			기후변화 영향 평가·적응 추진사업
	그 외 (1~4 전반)	내각부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후생 노동성		사회보장의 충실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 등)	

출처: 내각관방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사무국(2019. 6)